

인권정보자료실  
R1.1.15

# 인권아루소식

제1647호 ~ 제1768호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아루소식

합본 15호

2000년  
7월 ~ 12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5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2000년 7월

(제1647호-제1666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일(토)

제 164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인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대처가 노동자 탄압의 신호탄인가?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을 강제 집압한 경찰은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7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의 사회보험노조에 병력 3천 여명과 페퍼포그 등을 동원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또한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스위스그랜드 호텔에 찾아가 경찰투입을 공언했다.

마구잡이 수사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롯데에 투입됐던 백골단원들이 각 경찰서를 순회하며 격렬하게 저항한 조합원을 '찍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호텔 롯데 노조 정옥순 사무차장이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진압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지영 씨는 "경찰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수라장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으나 지금 기억나는 건 헬멧에 숫자가 쓰여 있었다는 것뿐"이라고 증언해 경찰이 파업에 활동적으로 참가한 노조원을 자의로 선정, 구속하려 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연행된 1천여 명 중 30일 밤 9시까지 석방된 사람은 부녀자, 환자 등 1백여 명에 불과하다. 경찰 진압 때 잡히지 않은 노조원과 석방된 노조원은 현재 명동성당으로 집결중이며, 매일 동료들이 있는 경찰서로 면회를 가고 있다.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민중대회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의 경찰진압은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포함한 1천여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고 최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한 군사적이었다"며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우려하며,

민주노총은 이에 맞는 투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정권이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탄압과 배제로 일관할 경우 '김대중 퇴진'운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보선)

###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불법과 폭력으로 집단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의 배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와는 달리 이번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이 의료계 파업이나 한겨레신문사 난입사건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들을 도매금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억지로 관계를 만들었고, 사회·경제적 '파워집단'에게 짓밟힌 공권력의 자존심을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약체집단'에게서 회복하려 들었다.

성찬이 차려질 뷔페 식당 테이블 밑에 기어 들어가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일한 노동자, 정규직보다 30-40%나 적은 임금밖에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숨 좀 돌리며 일할 수 있게 적정인력을 확보해달라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한 봉사료를 만 데 쓰지말고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에게 사전이 있다면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진압 경찰을 풀어 사냥개처럼 노동자들을 쫓기 전에 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강권'하고 싶다. 롯데호텔 노동자들이 지난 3월부터 요구한 교섭에 회사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교섭을 회피하다가 단체협약의 일방중재신청조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 회사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낸 중재신청을 무시하고 파업을 하면 정부가 '불법'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해주기 때문이다. 롯데호텔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중재신청에 더 이상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그 걸림돌을 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 하나, 정부가 이번 롯데호텔 진압의 한 이유로 든 것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급 호텔의 파행적 운영으로 국가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외국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김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새벽 4시에 노동자를 토끼몰이하는 명장면을 보여준 그는 어떤 국가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6월)

## 흐름과 쟁점

###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항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항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항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규 씨를 군사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6/3) 매항리 사격장 철책을 두르는 3천여명 인간 띠잇기 행사(6/6) 매항리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경찰 46개 중대 병력에 원천봉쇄(6/17) 40여일 간의 '정적'을 깨고 미군 폭격연습 본격 재개(6/19) 대학생 등 12인 맨몸으로 사격장 점거 나서, 이 중 최중수 신부 등 2인이 농성에 올라 대형 태극기 펼쳐, 한편 이들의 진입도 중 공포탄과 기총사격 이어져 충격(6/20) 매항리 주민 3백여명 화성군청에 주민등록증 반납(6/28)

### 2. 남북정상회담과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이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 대답. 하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대화가 인공기 계약 처벌 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보법은 천덕꾸러기 노릇 여전, 먼저 노동당 규약 개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망령.

### 3. 모든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의사들의 전면파업(6/20-25),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 난동(6/27), 호텔 롯데 파업(6/9-29)에 대해 '폭력적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며 호텔 롯데 파업에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 4. 파견근로 2년, 비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파견노동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를 꾀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과 불안 커져가

### 5. 유서사건 검사가 대법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대법관 후보로 '유서대필' 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6/23) 91년 당시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용' 조작사건이자 치명적인 사법불신풍조를 조장한 사건의 당사자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에 임명된다는데 인권·사회단체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반응

### 6. 예바다, 원점 회귀

평택시가 예바다 사태 초기 당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를 비롯한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 취임승낙서 발송(6/28) 3년 반의 투쟁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격렬한 항의

## 인권시평

-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포착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6/7)
- 개인적 체험(공선옥 소설가, 6/13)
- 정상회담, 그리고 ... (이재훈 한겨레 기자, 6/20)
-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6/27)

## 논평

- '지문날인 거부 78+'에 대한 기대(6/3)
- 6월항쟁, '아름다운 옛이야기'? (6/10)
-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6/17)
-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6/24)

## 특별기획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6/16)
- 단시간·임시직 노동자(6/17)
-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6/21)
-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6/23)

## 인터뷰

·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6/23)

## 주요판결

- 안양교도소 수감자 정형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판결(6/14)
- 「한국논단」 폐소,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정정보도 선고받아(6/15)
-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 징역 8년 선고(6/16)
- 대법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 씨에게 무죄 선고(6/27)

# 인권일지

1. 구 주민증 효력 소멸,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없어(6/1)
2. 진관 불교인권위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99년 범민족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받아(6/2)
3. '백두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 몸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와 인, 지씨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6/3)
4. 민주노총 '주5일 근무법' 입법청원(6/5)
5. 영월댐 민관공동조사단 '동강을 국내 최고 생태지역'으로 평가(6/1), 정부 댐건설 백지화 공식발표(6/5)
6. 매항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3천명 인간 띠잇기 행사 열려(6/6)
7. 철도청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40일동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동자 2명 농성 풀어(6/7)
8. 삼성그룹, 집회·시위 봉쇄 목적으로 종로2가 삼성타워 건물에 '온두라스 대사관' 유치, 삼성해고자 집회 막아(6/7)
9.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도중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박수쳤다'는 이유로 방청객 안우춘 씨 10일 감치 명령 받아(6/7)
10.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크 홈페이지 운영자,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난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출(6/8)
11. 민주노총, 기자회견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6/9)
12.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 위원회, 북한송환 희망 비전향 장기수 55명 명단 공개(6/9)
13. 제 1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2000년 제 2차 민중대회 열려(6/10)
14.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 7명,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민주당사 8층 추대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남북어부 김성화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효소멸 뚫었다는 이유로 패소(6/14)
16. 7천만의 염원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갖고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 4개항에 합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다시 수면위로(6/13-15)
17. 안보외국인노동자센터, 안보경찰서의 중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문수사 폭로(6/19)
18. '유서대필' 사건 지휘를 맡았던 강신욱 서울고검장, 대법관 임명제청(6/23)
19.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결심공판,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구형(6/26)
20. 베트남 민간인 학살 보도와 관련,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에서 난동(6/27)
21. 평택시 예바다 새 이사진 후보에 예바다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등 구재단측 핵심 인물 포함시켜 예바다 문제 원점으로(6/28)
22.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노동자 1천여명 연행(6/29)

## 현장보고

· 폭격재개된 매항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6/3)

##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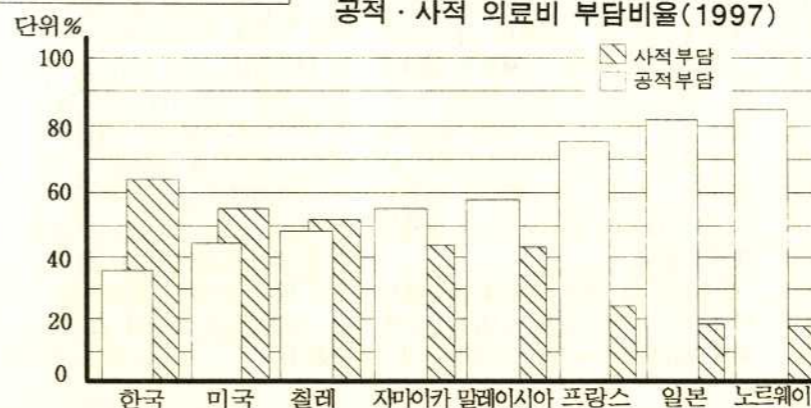
- "지방학교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6/8)
-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고상만, 반부패국민연대 국장, 6/10)
- 매항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6/24)
-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최용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6.28)
-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능 프로젝트 (김병수,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 인권간행물

-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한국여성민우회, 6/14)
- 여성노동자이야기 '평행선'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6/21)
- '유서사건' 총자료집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편, 6/28)

## 통계로 보는 인권

출처: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Report 2000' (www.who.org)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제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일수록 전체 의료비용에서 공적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용 중 사적부담 비용(62.3%)이 공적부담 비용(37.8%)의 거의 2배에 달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4일(화)

제 164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강신욱’은 절대 안 돼!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 발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서사건’의 지휘검시였던 강신욱 고검장 등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7월 3일 △민주적 개혁적 소신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평가서’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로 판결, 수사 및 기소, 변론의 사례와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심사해 강신욱 후보 ‘적극 반대’, 박재윤 후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면 자료요약 참조)

### 에바다대학생연대, 의장 구속

28일 에바다 복지회 임시 이사회 13명 발표와 관련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좌동엽(27·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의장) 씨에게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좌진수 관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9일자)

한편 29일 민주노총 평택지부 정병록 의장과 평택농민회 한도숙 회장 등은 평택의 지역단체를 대표해 김선기 평택시장을 면담하고 “최성우와 최성창이 포함된 이사회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공대위의 입장을 최종 전달했다. 그러나, 평택시청은 “전체 7:6의 비율 중 민주적인 이사가 7이면 되지 않느냐”며 공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명문)

또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한 「유서사건 진상규명과 강기훈씨 명예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유

##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사 규정 확립, 각 지사간의 적정인력 배분, 차별인사 철폐, 지역의보 50% 국고분담 등을 요구하다가 6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사회보험노조 김세호 복리후생국장에 따르면 29일까지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 요구사항을 사회보험공단이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29일 오후 갑자기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노조에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김국장은 “노조는 논의 끝에 그 때까지 합의된 임·단협의 타결을 위해 굴욕적일 수 있는 ‘노사화합 선언’을 하겠다고 수정 제의 했으나 공단은 반드시 무쟁의 선언이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명동성당 사회보험노조 상공실에서 밝혔다.

김국장은 또 일부 언론과 경찰에서 병력투입 이유로 밝힌 이사장 감금에 대해 “30일 오후 4시경 노조위원장과

서사건 관련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성명 및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정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의 선례를 남겨 고질적인 사법권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명문)

이사장, 담당 실무자들이 한 방에 들어가 7월 1일 건강보험 출범을 앞두고 ‘가능한 한 오늘밤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며 타결의지를 보인 것을 감금이라 한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국장은 “신임 이사장은 거의 합의된 임·단협을 결렬시키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 현재 정부 정책변화에 편승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공단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형실 노사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그간의 일들에 대해 내일(4일) 공단측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오후 4시 호텔 롯데 노조원, 사회보험노조원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직공원에서 열린 ‘신공안 탄압중단, 호텔 롯데 및 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 대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큰 저항세력인 노동자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신공안정국이 조성됐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한전, 철도의 민영화도 막지 못하며, 경제중속·고용불안·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보선·심태섭)

##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문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아 폭넓게 사회민주화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국가권력이 직접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입힌 경우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위주의적 상황 등에 업고 벌어진 각 사업장의 사업장들에 의한 폭력이나 권위적 상황에 대한 직접 저항인 분신, 자결 등을 민주화 운동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바른 정의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화가 사회 전 영역에서 주종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영원히 계속될 미완의 과정이라 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

대 대표는 국가가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폭력에 대한 저항을 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국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한 책임을 묻는 일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안하원 부산연대 대표는 광주가 광주만의 문제로 지역화된 과정과 보상법 제정이 관련이 있음을 들어 두 법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광길)

###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출처: 대법관 후보 인사평가서(참여연대)-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 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름’을 먹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어 크게 여론을 오도시켰다.
2.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신욱 후보자는 김기설 씨의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속단하고, 시간차가 커서 동일인이 썼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김기설씨의 오래전 필적과 유서 필적을 대비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서가 대필된 것으로 선입견을 갖게 오도시켰다.
  -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 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 계류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는 바, 당시 강신욱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검에서 김형영씨의 허위감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강신욱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항변할 지 모른다. 강기훈 사건은 그야말로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써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탁월한 수사능력’은 검찰 고위직의 임명요건은 필자라도 “편견과 예단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할 대법관의 자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따라서 강신욱 후보자가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대법관 인준에 적극 반대한다.

인권 시평 '행복한 왕자'와 에스끼벨과.. 강금실 (변호사/지평법률사무소 대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제 몸의 모든 보석을 가난하고 앓고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기꺼이 그들 곁에 있고자 한다. 그 글의 주제는 서로 모든 것을 주고 함께 나누는 삶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주는데 있는 듯 하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 점차 사회 속에 진입하면서 겪는 체험들은 '행복한 왕자'에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찾아 쉽게 한다. 모든 것을 나누어준 뒤 '행복한 왕자'는 결코 고결하고 행복한 모습만은 아니다. 그는 전혀 쓸모 없고 흉칙한 고체덩어리로 변해서 내동댕이쳐지고 파괴된다. 그가 더 이상 내뿜을 이로운 것이 없었을 때, 그는 냉정하고 잔혹하게 취급당한다.

세상은 철저히 이익의 교환과 이익의 확장을 원칙으로 하여 존재하며, 그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실현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의 행복이라는 이상향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후자의 노력은 전자의 원칙에 비추면 매우 부질없고 안타까운 꿈이다. 그 현실과 꿈 사이에 '행복한 왕자'의 비극성이 놓여져 있는 것 같다. 요즘에 와서 새삼 '행복한 왕자'를 되새겨보곤 하는데, 현실의 원칙 자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원칙들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꿈의 실현을 위한 실천행위일 수 있지만, 불가능함을 알면서 이상향을 꿈꾸는 원초적 상실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모든 꿈꾸는 사람들이 동반하여 이루어가는 그 길의 끝에 모든 사람이 흥취한 주검마저 마다 않는, 서로에게 '행복한 왕자'가 되는 꿈을 상정하여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초적 상실감이 주는 슬픔과 고뇌를 이겨내기 힘들다. 또한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꿈의 실현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고,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여행처럼, 가장 멀리 깊은 곳에 있는 꿈은 삶의 방향타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는 아르헨티나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인 베레스 에스끼벨이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먼 바다를 건너와 쌓인 피로를 전혀 내색 않고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풍부한 경험을 통한 지혜로운 대답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를 원하는 자리면 어디에나가 있고자 하는 겸허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꿈의 가능성에 관한 그의 말 한마디가 오랜 여운으로 남는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이며,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 고뇌하며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공동의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중적역이 없는, 끊임 없이 노력하여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의 오랜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성찰은 꿈에 기대어 나아가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중한 공감과 확인의 기회를 주었다.

주간인권호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1. '유서대필' 사건 검사가 대법관?

지난 6월 23일 대법관 후보로 '유서대필' 사건의 지휘 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이 임명 제청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발, 적극대응 나서(7월 3일) 한편 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다툼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 부족·미진한 검증 우려

2. 폭력적 공권력, 노동자 난타

의사폐업,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등으로 '폭력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던 정부가 결국 표적으로 삼은 건 생존권 투쟁 벌이던 노동자, 롯데호텔 새벽 진입 1천여명 연행(6월 29일) 사회보험 노조 강제 진입(1천 6백여명 노조원 전원연행(7월 1일) 연막탄과 섬광탄을 쏘며 토끼몰이식 진입으로 다수 노동자 부상, 유주진입 의혹도 제기

3. 예바다 3년6개월 투쟁, 수포로 돌리려나

평택시, 예바다 사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 공자인 최성창 전 이사 등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시켜(6월 28일) 이에 항의하는 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다수 부상하고 예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의장 좌동엽 씨 구속(6월 28-30일)

4. '어서 만나보자',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어져 남북적십자 회담, 8월 15-18일 이산가족 1백명 씩 동시 상호방문, 9월 초 비전향장기수 희망자 전원 송환 등에 합의(6월 30일) 한편 국방부는 '북괴'를 '북한'으로 '북괴군(괴뢰군)'을 '북한군'으로 바꿔 부르기로 발표(6월 30일)

5. 어린 녀들이 꾸짖는다, 씨랜드 1주기 씨랜드 참사 1주기 맞아, 추모공원과 위령비 건립이 안된 것은 물론 화재원인 규명도 사후대책도 실종된 것으로 드러나(6월 30일)

6. "우리는 사망신고를 했다", 속타는 매항리 주민 매항리 주민 3백여명,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으니 국민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매항리 장례식 치르고 주민등록증을 화성군청에 반납,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폭력은 한층 심해져(6월 28일)

7. '베트남!' 말문을 막지마라 고엽제 전우회 회원 2천여명 한겨레 신문사에서 난동(6월 27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각 계 비판 성명 이어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5일(수)

제 164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강 검사 임명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각계 지도급 인사 108인이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 반대를 천명했다. '유서대필사건 조작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에 반대하는 108인'은 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 108인이 연서한 성명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은 '조작되었다'는 한마디로 배제되고,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해 온 김형영의 감정서가 전능의 위력을 발휘"한 유서대필 사건을 "당시 만신창이가 된 노태우 정권이 그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사건"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업무일지'를 통해 강기훈이 범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기소한 점 △사건초기에 김기설 씨의 군부대 필적을 은폐하고 중학생 때 쓴 필적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린 점 △홍성은 씨 등에 대한 감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임명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은뎀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는 "3일 텔레비전을 통해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억울한 사건의 진상규명은 언제까지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새로 나온 책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2000. 6/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지음/문화과학사 펴냄/304쪽

최근 경찰에 대거 연행된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다른 노동현장들에서도 주요 현안이다. 이는 IMF 위기 이후 노동의 양상이 변화한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고, 임시직·일용직·시간제·하청·용역노동자 등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했다. 나머지 노동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임금삭감, 노동강도의 강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는 '일하는 빈민'의 증가란 기이한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노동의 불안정화'의 원인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오늘날의 불안정화 경향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근본원인을 자본주의의 금융화로 진단한다. 금융 및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금융선진화를 기치로 조만간 단행될 구조조정은 또 한차례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서비스 부문의 경우, 예외적으로 성공한 소수를 제외한 다수는 저임금과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이 책에는 이같은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유형별 실태가 구체적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 묘사되어 있어 한층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필자들은 불안정노동자 개개인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스로의 단결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정규직-남성노동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보장되었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영)

민변·인권협도 반대성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민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 임기란, 인권협)도 이날 성명을 발표, "유서대필사건은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수사와 증거은폐를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 중심에서 있는 강 검사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각 당과 청문위원들에게 '강신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송부했다.

대한변협은 아무말 안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 대한변협)가 4일 상임이사회 논의결과 대법관 임용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3년 7월 1일 '상당수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판결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을 거론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한변협의 이번 침묵은 씩씩한 뒷맛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보선)

#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4일 경실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호텔 파업농성 강제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근래 의사폐업, 한겨레 난입 등을 거치며 위기감을 느낀 정권 수뇌부가 롯데호텔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 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롯데호텔 농성 진압 과정에 ‘술개’라 불리는 경찰내 대테러부대가 동원됐으며 이들의 무차별 진압으로 6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고 36층에 있던 특공대는 유주 후 진압직전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산업체나 공공사업장도 아닌 일반사업장에 이처럼 극단적 폭력을 동원해 농성을 진압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 배 부위원장은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청장 선을 넘어 정권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보다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바람직하며, 만약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독자적인 진상조사 및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광길)

### 삼성직원, 철거민 폭행

8월 완공을 앞둔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농성을 하던 성명불상의 철거민 한 명이 지난 4일 삼성전

설의 관리직 직원 십여 명과 사오 명의 용역원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후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수영 변호사는 “지난 5월 용역원들과의 충돌이후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연행되었다”며 “그에게 폭행을 가한 삼성건설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데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무리가 없으며,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확실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명문)

###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진흥재단(국무민연대)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평가

하여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그간 국민연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인 억압에 대한 항거까지 포함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의 삽입 △위원회에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 장애등급판정분과, 명예회복추진분과,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 등 4개 분과의 설치 등이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구 안기부, 경찰, 군대 관련 의문사를 각각 조사할 과와 기존 의문사 외에 새롭게 제기될 의문사를 조사할 특별조사과 등 4과의 조사과 설치 △민간조사관을 포함한 충분한 조사인력의 확보(최초 50명으로 출발, 필요한 경우 인원확충) △의문사 진상규명에 유익한 정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금의 확대(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등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두 법의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류은숙)

## 매향리, “더이상 속지 않겠다”

### 국방부 대책 발표에 주민, 시민사회단체 일제 반발

매향 2,3리와 인접한 육지 위의 기총사격장을 서해안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대지 폭격장인 농성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양국의 매향리 대책이 4일 발표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접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매향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들은 주민대책위는 “정부와 미군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주한미군 사격장이 한 곳이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사격장 이전 등 그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불평등한소파과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향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전국민적인 반미투쟁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동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 실무자에 따르면 50년 동안 반복되었던 거짓말과 폭력 제기에 익숙하기 때문인지 매향리 주민들에게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동요도 감지할 수 없다고 한다. (기명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6일(목)

제 165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 호텔 롯데 183명 집단소송, 여성·노동계 사용자 고발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방지 등의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 사용자를 고발하고,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 롯데 노조원 183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한다. 이번 소송은 개별 가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희롱 관련 교육 및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5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호텔 롯데 노조원 등 6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를 마련하지 않고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호텔롯데 측 사용자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노동계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텔 롯데 성희롱 사건 조사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성희롱 가해자 중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텔 롯데 신격호 회장과 장성원 사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김경중 호텔 롯데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3일 여성노조원 183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방지, 교육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집단 민사소

송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정순(대의원, 면세점 근무) 씨는 “5년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곤 작년에 비디오 한번 본 것뿐이다. 그것도 각 근무자별로 몇 명씩만 뽑아서 한 것”이라며 “4년 전에 노조가 문제삼은 한 가해자가 사표를 내는 걸로 끝난 적이 한번 있을 뿐 성희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롯데의 성희롱 설문조사 결과 강간과 준강간에 해당하는 성폭행 사례가 1.5%인데 이는 일반사업장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발표된 ‘호텔 롯데 성희롱 설문조사’는 호텔 롯데 노조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 382명의 여성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올 6월에 실시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6월 30일자>

한편 호텔 롯데 홍보실은 이에 대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이 평소에 불만을 가진 상급자들을 찍어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반증했다. (심보선)

###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송두을 교수 입국불허 규탄

전북평화외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시행령을 확정된 정부가 정작 민주화운동 전적으로 송두을 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명예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화운동가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송 교수를 초청한 ‘통일맞이’의 전 이사장인 박용길 장로는 “꼭 들어오실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리둥절하다”며 “학자로서 소신껏 행동하신 분이 33년이나 고국에 못 오신건 말이 안된다. 이번 8·15에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은숙)

### 행사와 동정

-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
  - 때: 7월 6일(목) 오후 7시 · 곳: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 주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02-3675-5808)
- 국가보안법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때: 7월 6일(목) 오후 2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의회 (02-3273-2890)
-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한다”
  - 때: 7월 7일(금) 오전 11시 30분 · 곳: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때: 7월 7일(금) 오후 2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인권포럼 (02-788-2017)
- (사)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개소식
  - 때: 7월 7일(금) 오후 3시부터 · 곳: 민연연 새 사무실 (신촌소재)
  - 주최: 사단법인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02-3142-0700)
- 이옥순 동지의 쾌유를 바라는 벗들의 모임
  - 때: 7월 8일(토) 오후 4시 · 곳: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02-3273-2890)
  - 이옥순 씨는 70-80년대 노동운동, 그후 오늘날까지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분으로 현재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 ‘노조폭력’ 언론보도,公安정국 조성용 아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금과 린치'라는 비난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을 듣고자 명동성당에 있는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상) 상황실에서 윤병철 사무처장을 5일 저녁 만나 보았다.

기자가 '노조사태 진상기록' 복사본을 건네자 "뭐라고 썼길래 이 난리지 보고 싶다. 잠시 후에 보자"며 윤 사무처장은 자리를 뒀다. 다시 만난 그는 "한마디로 시나리오"라고 운을 뚫었다.

▷30일 상황을 말해달라.

사측이 세 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응답을 피하다가 오후 4시 위원장만 오라고 연락해왔다. 어차피 7월 1일 건강보험 출범을 앞두고 노사 모두의 타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위원장이 6층 이사장 방으로 들어가고 단협위원들은 항상 협상을 벌이던 소회의실에서 대기했다.

▷공단의 '진상기록'에는 오후 2시 30분경에 '결사대' 50여 명이 부속실에 들어와 공포분위기를 조성시켰다는데...

아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6층에 있을 경우 타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일반노조원의 접근을 통제했다.

▷이사장실에서 9시까지 벌어진 일은?

세시간 동안 이사장은 한마디도 안했다. 이사장의 위임장도 갖지 않은 주영길 상무와 노사협력실 직원이 몇마디 할뿐. 권한도 없는 상무와의 입씨름에 지쳐 위원장이 단협위원들이 있는 소회의실에 왔다갔다 했다.

▷감금했는가?

사측이 자기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다고 위원장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주었고,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9시경 마포경찰서장이 6층에 올라와 위원장과 이사장을 각각 만나고 돌아갔다.

▷공단지료에는 밤 9시경부터 노조원들이 임원들을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그 시간에는 공단광장에 있던 2천여

노조원들이 경찰에 밀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29일 호텔 롯데 진압사실을 아는 노조원들은 겁에 질렸다. 각층마다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서 복도 계단에 우왕좌왕하며 흩어졌다. 그 와중에 6층에도 노조원이 일부 올라오게 된 것이다. 건물안에 갇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노조원들이 경찰을 부른 이사장이나 임원들에게 쌍욕을 할만한 상황 아닌가?

▷이사장이 어디론가 끌려갔다는데?

미리 알아야 할게 그건 경찰 투입후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노조 집행부는 일부 흥분한 노조원들이 이사장을 보면 때릴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했다. 8층에는 다른 곳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기 때문에 노조원 출입을 통제했다.

그래서 8층으로 데려간 것이다.

▷'형광등을 깨서 어둠의 공포분위기를 만들어'라는 공단 주장은?

불을 켜 놓은 곳에 경찰이 먼저 들어올 것 아닌가? 상상해 봐라. 급한 마음에 남의 사무실이라 스위치는 안보이고, 경찰이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형광등을 켜 것이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쪽은 경찰이었고, 그 원인을 제 공한 쪽은 경찰을 부른 이사장이었다.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때렸다는데?

땀싸움을 했을 수는 있다. 그런 정황도 되니까. 그러나 이사장은 7월 1일 건강보험공단 출범식에 아무런 상처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전후관계도 알아볼려고 하지 않는 일부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전화로 '공단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하고 따죽 문을 뚫는다. 차라리 이런 기자들을 '감금, 린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심보선)

##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

지난 3일 한 철도노동자가 부당 전출 후 생긴 문제들을 비판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 조항민(39)씨는 지난 해 4월 서울동차사무소에 재직하면서 철도노조 서울동차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 동료 서울·문산 간 도시통근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의 결함을 확인하고 문 제제기를 한 뒤 부당 전출 당한 일이 발생하자,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끝에 결국 본인도 동해로 전출 당했다.

전출지인 동해사무소에서는 사측의 여론작업으로 한달간 동료들과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왕따를 경험했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도 못 받게 되자 생활고와 가정불화가 생겨 평소 이를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차사무소에서 조항민씨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윤용관(37세 현재 해고)씨는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낙천적이며 후배들에게 절대적으로 신임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윤씨는 "동해로 전출 가는 순간에도 '나는 노동조합은 잘 몰라,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아'라고 했던 그를 잊을 수 없다"라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민주노조활동을 이유로 경남의 한 작은 역사로 전출 당한 경험이 있는 이모씨(42세)는 "차라리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맞으면 낫겠다"며 "부당한 전출은 극도의 고립상황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배생활과 다름없다"며 전출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한편 '민주철도노동조합 건설과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각 지부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8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검은리본 패용 등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산차량사무소의 경우 노조사무실에 설치된 분향소마저 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소장명의의 공문이 날아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민주철도노동조합 건설활동을 시작한 94년부터 부당 전출을 당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전출 후 겪는 정신적 고통으로 벌써 세 명의 노동자가 자살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기평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7일(금)

제 165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재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97년 6월).

이철용 씨는 97년 6월 1일 서울 신당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한총련이 주도하는 시위를 구경하던 중, 사복제포조(일명 백골단) 5-6명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로 인해 이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과거 군에서 탈영한 사실이 있음

을 밝혀낸 뒤, 그를 곧바로 군부대로 이첩했으며, 이 씨는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며, 이렇게 이 씨가 군부대 내로 격리되면서 그에게 폭행을 저지른 전 투경찰과 상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묻혀져 갔다.

이 씨는 "경찰은 사건 당시 내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조작하려 했고, 끊임없이 나를 불순세력과 연계해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악질운동권으로 몰아붙였다"며 경찰의 사건조작·은폐 시도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상부의 은폐조작 기도는 밝혀지지 못했으며, 이 씨가 3년 만에야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정택 변호사는

"5천만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2천6백만원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측면은 있지만 이철용 씨의 과실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철용 씨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고 선고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며 "애초 청구한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그간 치료비가 꽤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폭행 후유증인 목디스크와 두통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씨는 그로 인해 "성격도 변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 씨는 "혼자였다면 판결까지 오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라며 "3년 넘게 계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조)

## 평택시, 에바다 정상화 의지 없다

###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3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임기란 등, 연대회의)는 6일 서울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의 에바다복지회 임시 이사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평택시는 에바다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김성기 평택시장은 임시 이사 명단을 취소할 것 △국회 보건위헌위가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설 것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사태 해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류은숙)

시민사회단체 공동집회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한다"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이동수



# “대통령은 사과하라”

##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더욱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6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지방에서 상경한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들과 호텔 롯데·사회보험 노조원 등 9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자유주의·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공안탄압의 중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를 소리높여 외쳤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책임이 있는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 △교섭거부, 무쟁의 선언 요구 등 전근대적인 노조과포를 하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건강보험 박태영 이사장 구속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는 최선

정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신공안정국 분쇄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더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이날 10시에 열린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며, “구조조정 완수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이 참가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용득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자동차 수십만 대를 수출해도 금융부분이 외국자본에 지배되면 대부분의 국부가 유출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구조조정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호텔 롯데 파업 강제 진압 이후 연일 김대중 정권 폭력 규탄대회를 열어온 민주노총은 12일 전체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은 폐지하되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은 “여야 개혁세력이 연대해 국보법 폐지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김정희)

###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

(사)통일맞이(이사장 이재정)는 6일 ‘제5회 남북통일상을 시상하는 통일맞이의 입장’을 발표, “준법서약서는 사상범과 양심수를 통제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위법적인 전향서를 대한민국이 계승한 인권유린 제도”라며 “채소자들의 가석방을 빌미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되는 반인권적 제도가 기소도 된 바 없는 송두을 교수에게 적용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통일맞이는 “송두을 교수의 귀국은 남북공동선언을 가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북한에 확인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일”이라며 송두을 교수의 귀국과 해외 인사들의 조건 없는 귀국에 노력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였다. (류은숙)

##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 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6일 오후 2시 종묘공원, 근래 보기 드문 인파 속에 ‘근조 폭력정권’이라 쓰인 모의상여가 놓여있다. ‘신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전경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전경들이 시위대를 인도 쪽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곤봉으로 내리친다. 전경 지휘자에게 다급하게 오는 무전, “뛰하는 거야? 거기(중앙선)까지 신고됐어. 임마. 물러서!”. 이 때 호텔 롯데 조끼를 입은 한 여성노조원이 내뱉는 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우리 겁 줄려고!” 종각근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방패로 얼굴을 내리 찌는 전경이 보인다. 그 순간에 나오는 경찰 차량 방송,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광교에서 2호선 을지로 입구역까지를 가득 메운 시위대. 시위통제부가 한강택 중부경찰서장과 집회신고내용에 대해 옥신각신하는 사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거나 구경나온 시민에게 왜 집회를 하는지 열심히 설명한다.

“이번에 물러서면 전국에 쟁의중인 사업장의 모든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는 대신 경찰투입을 요청할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할 수는 없나요?”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해도 업무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죄, 사용자와 다투다가 기물이 조금 파손되면 재산손괴죄로 걸려요. 이런 저런 죄목으로 고발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체포명장 나오요...”

“호텔 롯데나 사회보험도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로비에서 집회한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쟁의가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비밀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이나 비합법이나 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에요” 폭염 속에서 그들의 답답함도 폭풍 익어갔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8일(토)

제 165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28자나 되는 필적은 ‘글자가 적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17자의 정자체 글씨를 주요증거로 내세운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궁지에 몰렸다.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5월 13일에 입수한 육안으로 보기에 유서와 유사해 보이는 군 필적은 제쳐놓고, 정자체 글씨를 감정 의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5월 10일 입수해서 감정한 필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문제의 군 필적은 글자수가 적어 감정 의뢰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강 후보자는 “김기철이 여자친구 안혜정에게 쓴 편지 등 풍부한 필적자료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필적 감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군 필적은 정자체와 흘림체가 섞여 있고 글자수도 28자나 된다”며, “중학교 때 쓴 17자의 정자체 필적을 감정한 것은 ‘증거수집의 객관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군 필적은 5월 13일이 아니라 한참 후에 입수한 것”이라는 강 후보자의 답변에 추 의원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게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유서대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것

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형영의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추궁 당하자 “기록을 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 (심보선)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형영의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추궁 당하자 “기록을 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면> (심보선)

### <논평>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회. 말로는 후보자지만 벌써 대법관이 된 사람을 대하듯 ‘사적인 인연’을 들먹이며, 감개무량인양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신걸 축하드립니다”라고 꾸벅거리는 의원이 있었다. 그의 인사대로라면 강신욱의 대법관 자리도 굳은대로 굳은 모양이다.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강신욱은 어떻게 ‘인권의 보루’라는 대법관의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27년 검사생활에서 서울고검장이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했다는 그를 대법관 자리에 밀어 올리고 그를 떠받든 세력들이 완강하게도 우리 사회의 증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강신욱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싶다”며 “대법관이 되면 저의 편견과 독선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의 대법관에 임하는 소신은 유서대필 사건을 아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었다. 그의 간 큰 소신에 품위 있게 끄덕거리는 자랑스런 ‘입’들의 침묵을 보자. “나는 고발한다”의 에밀줄라의 출현을 기대하진 않더라도 이견 해도 너무하다.

93년 상당수 정치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관결의 대표적 사례 중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했던 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끈끈한 법조인들의 우의를 자랑하고 싶었던지 강신욱의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우의가 지나쳐서 진실에 골을 패게 하였다.

인사청문회 위원장 자리 다툼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유서대필 사건을 함께 겪으며 제야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 뭘 하고 있는가?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의 드래프스 사건이라고 쉽게 주절거린 지식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친구에게 유서까지 써주며 죽으라고 했다’는 세상에 없을법한 파렴치한 죄로 무고한 젊은이가 감옥에서 청춘을 썩혔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대법관이 된 들 그대들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아니 어차피 끼리끼리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를.

#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추미애(추), 송영길(송), 천정배(천)(이상 민주당 의원), 강신욱 후보자(강)으로 표시. 청문회 내용 중 유서대필 관련 부분 중 일부만 발췌. <편집자>

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김기설 씨 가족에 의하면 압수도 했고, 그 속에는 김기설 씨의 편지 등 풍부한 필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목록도 없고, 증거로 제시된 것도 없다.

강: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 나도 숨긴 게 없다.

추: 그런데 유족들은 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사건 직후에 많은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것들을 압수해 갔는데, 여기에 다 현출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단락이 있다.

강: 그건 잘못된(안) 것이고요. 유족들은 글자 몇 개 안 되는 누나의 육아 일기 책 곁장에...

추: 그 후를 얘기하는 거다. 유족 측이 스스로 제시 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 직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서 많은 서류들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강: 그거 혹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설 측에서 압수해 간(은) 것은 전혀 없다.

추: 만약에 드러난다면 질차상 하자가 있는 거겠지요?

강: 그렇다.

송: 지난 87년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때, 당시 검찰 공식발표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강기훈 사건에도 검찰시각이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동료의 생명을 담보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동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특수훈련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강: 저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수사한 건 아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수사 착수했고, 그후 감정과 흥 양의 진술이 나왔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수사질차상에 감압수사가 아니었

다는 건 저희 자신이 아니까 틀림없다 판단을 한 것이지, 어떤 편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송: 자백 같은 경우에 그 임의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자백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즉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주변정황과 모순이 발생할 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 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강: 예

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형영의 감정, 흥성은의 진술이죠. 필적감정에 대해 김형영 씨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은 지문감식에 비해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겠지요?

강: 사람이 하는 일이니깐요.

천: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 지문감식은 과학적으로 훨씬 더 정확한 것이고, 필적감정은 감정인에 따라 의견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강: 예

천: 검찰은 한때 91년 7월 6일경 김기설 씨의 동료인 임무영에게 유서대필 혐의를 두고 조사한 일이 있지요?

강: 강기훈 씨가 임무영이를 지목해서 조사한 일이 있다.

천: 그래서 임무영을 불러서 진술조서도 받았고 그의 필적자료를 가져다가 감정도 시켜보고 그런 일 있죠?

강: 예

천: 그제 7월 6일경인데 그때는 이미 유서대필에 대해 김형영의 감정결과가 검찰에 제출돼 있었다. 강기훈의 필적과 같다는. 그런데 검찰이 감정결과를 받고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한 이유는? 수사는 다 각도로 해야겠지만, 적어도 김형영이 낸 감정자료도 그 자체로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강: 그렇지 않다.

천: 아니에요? 그때부터 감정서를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강: 저희들이 다각도로 짚어보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천: 그럼 검찰에서는 김형영의 감정서가 도착한 즉시로 강기훈이가 유서대필을 했다 심증을 갖게 됐나?

강: 확증은 안하고요, 그후에 흥성은

이랑 여러 정황이...

천: 확증은 안하셨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강: 필적감정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 흥성은 씨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흥씨가 검찰 연행된 후에 중간에 검찰 수사관과 함께 집에 잠깐 들린 것 제외하고 백억 시간동안 검찰의 지배하에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인가?

강: 백 시간 아니다.

천: 백 시간이 아니면 98 시간인가?

강: 첫 날 와서 한 20시간 조사 받았고, 두 번째 날은 아버지와 함께 와서 한 20시간 조사 받았단다

천: 그럼 40 시간?

강: 그렇다.

천: 그 동안 검찰이 철야수사도 하고 했는데 대법관이 되는 마당에 그런 수사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흥씨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 본다.

강: 증거가치 문제는 이미 판결로 확증이 된 것이다.

천: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한다. 그때 피해자의 심증에 대해서 묻고싶다.

강: 20시간 정도를 잠도 재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사가 질차상 하자가 있느냐?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사람의 여자친구 아니냐? 그런 심리상태에서 20시간씩, 후보자 말속에 의해도 두 차례나 24시간씩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나?

유서대필이란 상당히 기특한 일이지?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이례적인 일 아닌가?

강: 그렇다.

천: 근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국과수의 필적감정하고 검찰의 지배하에 있던 흥성은 씨 진술정도 가지고는 역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무혐의 처리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나보죠?

강: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도 그렇게 보고 판결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1일(화)

제 165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경찰, 단병호 위원장 집단구타

###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제벌의 부세습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한 박재운 후보자 등도 무난히 대법관으로 인준됐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진 이날 표결결과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이들은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했으며, 강기훈 씨와 고 김기설 씨의 가슴에 또 한차례 못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 의원에게 상식과 정의가 남아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증거는 패와 감압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돼 대법원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특수한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무기명인 아닌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인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논평에서 "후보자 6명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 수사"라며, "유서사건 자체가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의 법조기자는 "강신욱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판결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또 "당사자가 대법관으로 있고, 당시 수사에 참여한 신상규 검사 등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한 유서대필사건은 담당검사들을 영원히 쫓아다닐 것"이라며 "피해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인권지기의 박용배 씨는 "반인권 행위를 한 강신욱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예총 임명구 사무총장은 "반인권전력을 가진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이 되어 대법원이 수행해야할 인권수호의 임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6명의 후보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국민적 동의로 개정하면' 등의 단서입장을 밝혀 법조전체가 보수성향을 강하게 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사실을 강 검사가 일깨워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류은숙)

(속보) 경찰이 단병호 민주노동 위원장 등 민주노동 지도부를 경찰 버스로 강제 연행해 집단구타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오후 5시경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호텔 롯데 앞에서 호텔 롯데 노조원들이 벌이던 농성에 합류한 단병호 위원장, 이근원 조직쟁의실장, 박선봉 문화부장, 황명진 조직부장 등 민주노동 간부와 조철 민주관광 노련 위원장 등 십여 명이 경찰버스로 연행되어 1기동대 소속의 박환(계급불상), 박성욱 경장 등 전경 30여 명에게 집단구타 당했다.

특히 박 경장은 "단 위원장의 목살을 잡고 흔들며 구타했다"고 버스 안에 집혀있던 박선봉 문화부장이 전화로 알려왔다. 이날 저녁 8시 20분경 풀려난 단 위원장 등은 명동성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보선)

###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거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인 '지문날인 거부 78+'는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전자지문 채취에 이어 휴대용 무선신원조회기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되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 △불법적인 지문 전산화 작업 중단과 책임자 처벌 △몹수색과 다름없는 지문감식 중단 △경찰 예산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다. (류은숙)

인권 시평

정신

김규향 (아웃사이더 주간)

글쓰기를 시작한지 이제 2년인데 글쓰기도 기술인지라 여전히 글쓰기가 느린 편이다. 나도 몇 년 더 쓰면 남들처럼 빨라질 거라 생각해 보지만 7개 짜리 칼럼 준비에 한 주 이상 소비하는 흥세화나 원고를 써놓고 한두 매를 줄이느라 낱밥을 새우는 서준식을 보면 글쓰기 속도는 성품과 더욱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삼아 대기업 사보 같은 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끼적여온 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원고 청탁을 거의 사절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 내 생각을 낮모르는 독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좀더 진지하게 구성하려면 원고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여기저기 글을 내놓고 인터뷰에 대답에 심지어 방송까지 심심찮게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면 참 희한해 보인다. 저 사람은 언제 생각하고 언제 고민하는 걸까 싶다. 내 경우 원고를 줄이는 일 외에 방송은 아예 안 하는 결로 하고 있다. 방송사 가서 터무니없는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피디들과 상종하는 일도 싫고, 대개의 경우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란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방송을 빼고라면 모든 얘기의 맥락이 편집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나는 도무지 방송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김어준은 그런 나를 '역오버'라 놀리지만 나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

지식인이란 한 사회의 정신세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이 나라 지식인 사회엔 연예인 지망 지식인들만 차고 넘칠 뿐 '정신'이 없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강신욱이라는 이가 대법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식인 사회에서 어떤 유익한 연대 발언도 없다. 외롭게 떠드는 사람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다.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수상식 풍경이 생각난다. 53년 메카시 선풍 때 동료 영화인들의 명단을 넘긴 엘리자 카잔이 공로상을 받으려 입장하자 자리에 앉은 후배 영화인들 가운데 절반이 기립하지 않았다. 머리통 속에 돈과 섹스만 가득차 보이는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말이다.

연예인들이 그 정도나 지식인들이 어떨까는 쉽게 추정이 간다. 지구상에서 가장 상스러운 나라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신일 것이다. 우리를 지탱하는 정신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여전히 극우의 우산 밑을 벗어나지 않는 우파 지식인들. 극우와 우파조차 분별 못하면서 맨날 자본주의 이후만 외치는 좌파 지식인들. 파시스트의 주구를 인권의 최후 보루 대법관에 앉히는 2000년 대한민국에 과연 정신은 존재하는가.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때: 7월 20일(목) 오전 10시~21일(금) 오후 6시(1박2일)
곳: 서울 합정동 예수살이 공동체/참가비: 5만원/참가대상: 초·중·고 교사, 예비교사(선착순 30명)/주최: 인권운동사랑방

주간인권호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1. 강신욱, 당신이 대법관?

각계인사 108인, '강신욱 검사 대법관 임용 반대 결의대회'가져 (7·4)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욱 검사, 유서대필 사건 추궁에 부인과 회피로 일관 (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 (7·10)

2. '민주'경찰 '음주'진압?

경찰 롯데호텔 노조 파업 '음주진압' 의혹 증폭, 경찰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 '경찰이 저지른 일을 경찰이 진상조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 요청 (7·4) 민주노총, 경찰의 폭력진압 등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대정부 투쟁 전국 확대 결의 (7·6) 서울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음주진압 증거 없다"고 밝혀 (7·6)

3. '준법서약서', 네가 나올 대목이 아닌데...

송두울 교수에게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강요, 33년만의 귀국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통일맞이 등 성명내고 '준법서약서는 인권유린제도'라며 송교수 등 해외인사의 조건 없는 귀국 촉구 (7·4)

4. 경찰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받아

97년 거리 시위를 구경하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 (7·6)

5.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찾아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7·4)

6. 매항리 기총 사격장 폐쇄는 기만이다

국방부와 미군, 매항리 기총사격장은 폐쇄하되 농성 폭탄추천장은 유지하기로 의견접근, 이에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매항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무성의한 대책이라며 반발 (7·4)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7·8)

7. '언급'은 그만, '실천'을 기다린다

이한동 총리 임시국회 국정보고, "올해 안에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전향적 개정 검토" 언급 (7·5)

8. '성희롱', 사용자 책임을 묻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 롯데호텔 여성 노조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실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 피해 노조원 183명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계획 밝혀 (7·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2일(수)

제 165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테러진압부대 임무는 노동자 테러?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는 대외비

호텔롯데 노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졌다. 테러진압과 도시계 릴라형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특공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노동자를 상대로 테러를 한 셈이다. 또한 경찰은 대 테러부대의 설치근거인 대통령 훈령 47호를 대외비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특공대 운용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비서실의 법률담당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 47호는 청와대에서 잘 모른다. 경찰에 물어봐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청 경비국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 대 테러부대가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한 것은 사실이나 훈령의 내용은 국가기밀"이라고 대답을 회피하다가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고 말을 돌렸다. 이 관계자는 또 "훈령은 경찰이 성안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에 특공대를 투입한 법령적 근거에 대해서도 "훈령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당연히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특공대는 형식상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로 되어 있으나, 국가정보원 대 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국의 협의하에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 테러부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98년 조계사 분규 등에 투입된 데 이어 이번에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투입된 것이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11일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호텔롯데 파업을 진압할 때 특공대인 '솔개'부대를 투입한 이유

에 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른 노조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텔 롯데 노조 신승근(대의원) 씨는 "테러진압부대면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씨는 또 "진압 경찰이 오히려 '너희들' 각목, 파이프도 없이 무슨 농성이냐?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희롱할 정도였다며 "테러진압부대가 와서 오히려 테러를 저질렀다"고 분개했다.

11일 명동성당에서 호텔롯데의 한 노

조원은 "솔개부대 지휘자는 '나는 머리에 먹물 들어 있는 놈을 증오한다. 걸리면 머리를 박살낸다'고 소리지르며 엎드리게 해놓고 군화발로 등을 밟고 다녔다"며 대 테러부대의 테러사실을 증언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노조원은 "솔개부대원은 장애인증을 보여주는 사람도 마구 군화발로 찼다. 나중에 기자들이 와서야 그 장애인을 한쪽으로 빼주었다"고 치를 떨었다.

1983년 10월 5일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창설된 특공대원은 특수부대 출신자로 제한되며, △40kg의 모래주머니를 지고 100미터를 19초 이내 주파 △2천 미터를 7분 30초 안에 주파하는 체력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다. 99년에는 지원자 000명 중 겨우 0명만 합격했을 정도로다. (심보선)

"시민·사회단체 침묵, 이해 안 된다"

단병호 위원장 석발, 광패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싸우겠다

"최근 경찰의 막무가내 폭력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이 호텔 롯데 파업을 강경 진압한 후 연일 노동자의 투쟁대오를 이끌고 온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명동성당에서 본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공개요청을 했는데도 기자회견 한번으로 때워버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서운함이 그의 말에 배어있었다. 단 위원장은 "공안정국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최근의 모습은 분명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다. 시민·사회단체가 존립기반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현실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10일 호텔 롯데에서 집회를 끝내고 해산을 선언한 직후 전경처에 연행돼 집단 구타를 당한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김대중 정권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광패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책임지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로 11일 종묘공원에서 5천여 노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석발을 했다. 석발이 진행되는 동안 배경음악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 흐를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내리는 비가 마냥 웃을 적시고 있었다.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단 위원장은 12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가 어떻게 하자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들이 스스로 결의를 할거라고 확신한다" (심보선)

#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 부산정비청 공투본 지도부 구속

10일 김기태 (민주철도노조건설과 민영화지지를 위한 공투본(공투본) 공동 대표, 부산정비청 지방본부 위원장), 이용석 (부산정비청 지방본부 조직국장)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공투본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 해의 순방시 공무원의 연가금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신청,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의 출근투쟁과 노조활동이 계속되자 부산정비청은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투본은 규탄성명을 발표, "노조지도자 2명에 대한 구속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투쟁과 어용철도노조로부터 뇌물과 금품을 받은 철도청장의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서 발단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강력히 반대

하는 민주철도노조진영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철도청은 5십여 년간 이어져온 간선제를 통한 노조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선제 쟁취와 뇌물수수 철도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공투본 소속 노동자 74명에게 해고(10명) 및 전출을 포함한 대량징계조치를 내렸다. 철도청은 또 최근 들어 34명에 대한 추가 징계조치를 내렸고, 3명의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해 현재 구속된 2명 외에 1명의 노동자가 수배중이다.

###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 일부 승소

한편, 지난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새마을호와 도시통근열차의 결함을 지적한 후 징계를 당한 윤윤경 씨 외 5인이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해고를 당한 윤윤경씨와 황효열 씨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3개월간의 감봉과 전보조치에 대해 고 조항민씨 외 2인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 및 기각되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27일, 6월 8일> (기명문)

##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민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측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며 "전면개정 없이 한국의 반미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주한미군범죄진단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팔)는 "재판관할권은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미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소파 개정의지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의 미국측 소파 협상안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의 주체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삼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미국민 미결피의자를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의 신축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측에서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미대사관을 방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포럼'에 참가한 미국, 일본 등 9개국 48명의 평화 애호가들이 채택한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 윌든 펠로 펠리핀대 교수 등 서명자들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 측각 석방 △매항리 폭격장 폐쇄 △소파개정 등을 촉구하였다. (류은숙)

## 새로 나온 책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차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와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올해는 우리 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 내용이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요,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국을 통하여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였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 침해자는 국제국민 예가 많은 반면, 기존의 국제법 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국제법의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다. 이속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이다.

이 책은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아야 할 국내절차는 무엇인가 △인권이사회의 심리절차와 최종결해 및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를 풍부한 사건 목록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3일(목)

제 165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 "과장·왜곡" 발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뀐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경찰서(서장 주기주)는 이날 안산시 선부동 일대에서 연쇄발생한 살인·강도사건의 용의자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노동자 위모 씨(29, 여) 등

###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울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징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 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통신을 위해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기명문)

4명을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해 고문수사 시비를 일으켰었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0일>

안산의국인노동자센터(소장 박천웅 목사, 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고문수사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측은 "센터측의 주장이 과장·왜곡되었다"고 대응해 진상규명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용의자의 체포 보도를 접한 본지 기자가 안산 경찰서의 반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경찰이 사과 및 보상, 관련자 징계 조치를 취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기태 안산경찰서 청문관은 "경찰이

잘못한 걸 인정했다"며 "6월 25일에 서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가혹행위와 고문수사에 가담한 경찰 6명은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터 소장 박천웅 목사는 "이전의 (경찰의) 대응방식과는 달랐다"며 "(경찰이) 모든 행위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등 진심으로 참회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또 "이 사건을 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마음에 한이나 분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위모 씨 등 피해자들은 현재 본래 거주와 일터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다. (류은숙)

##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 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6조에는 테러, 인질, 총기, 폭발물, 재난, 인명구조 상황 등에 출동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 롯데 파업이 어느 점에서 '건물 불법점거 난동'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그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또 "경찰청장 훈령 210호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일방중재거부 등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사업장을 '점거한'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호텔 롯데 노조 파업현장에 대 테러부대를 투입한 것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원 대 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대 테러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사폐업에 무기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상실한 정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 테러부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띠는 것이다. (심보선)

#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주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량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량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려 노력하고 있으며, 소파협상도 시민단체의 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나라당의 목요상 정책위원장과 정형근 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내에 관련대책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미군기지 관련 지역 의원들이 논의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외무부 북미국장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협상시안에 대해 곤혹스러

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의 협상 시안을 외통부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이 문제를 꺼내면 '철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차승렬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아직도 양당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을 보였다"며 "새롭게 기대할 점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차 국장은 "궁극적인 한미관계가 정부나 정당에도 승성인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는 대다수 국민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며, 소파협상이 시작되면 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은숙)

## 행사와 동정

- 스포츠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때: 7월 13일(목) 오후 2시
  - 곳: 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
  - 주최: (사)한국성폭력상담소 (02-576-5513)
- 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개편을 위한 결의대회
  - 때: 7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 곳: 평택시청 앞
  - 주최: 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02-741-5363)
- 바람직한 기부문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세미나
  - 때: 7월 19일(수) 오후 2시
  - 곳: 기독교 연합회관 3층 중강당
  - 주최: 시민운동지원기금 (02-708-4383)
-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때: 7월 20일(목)부터 1박 2일
  - 곳: 서울 합정동 예수살이 공동체
  - 인원: 선착순 30명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대학생 인권캠프
  - 때: 7월 24일(월)부터 2박 3일
  - 곳: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 인원: 선착순 40명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엠네스티 인권캠프
  - 때: 8월 4일(금)부터 2박 3일
  - 곳: 대전 유성 유스호텔
  - 인원: 선착순 100명
  - 문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 청소년 인권캠프
  - 때: 8월 8일(화)부터 2박 3일
  - 곳: 경기도 대성리 늘푸른캠프장
  - 인원: 선착순 30명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사업주를 처벌하라”

여성·노동계, 호텔 롯데 성희롱 고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12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호텔 롯데 여성노조원 350명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성희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환경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었다"며 "지속적인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호텔 롯데 사업주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동센터 박봉정사무국장은 "현실적으로 롯데 사업주가 과태료 300-500만원 받는 정도일 것"이나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이고, 이후 집단민사소송과 맞물려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심보선)

## 수배해제자 재구속 날벼락

지난 해 12월 당국의 선처방침으로 일괄 처리됐던 조계사 정치수배 농성단의 일원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검찰의 행정적으로 재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찰은 경원대 재학시절, 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배된 한유진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는 94년 쌀 등 기초농산물 개방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수배된 후, 지난해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에 동참했다. 이후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지난 12월 자진 출두한 한씨는 서울지검 강오찬 검사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 "넌 수배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방화혐의를 확인하고 다시 출두명령서를 보낸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연행·구속한 것이다. (기명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4일(금)

제 165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동으로 1천3백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은 무법천지 그 자체였으며, 입산부와 장애인까지가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인 등 약자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했으며, 이 결과 여성조합원 중 일부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압당시 경찰의 폭력유형은 △삼광탄 등을 마구 쏘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쇠파이프, 곤봉 등을 다치는 대로 휘두르고, 군화발로 마구 짓밟고 △입산부, 장애인, 부상자가 호소하는 경우 오히려 더 잔인하게 폭행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기합을 주고 △기물을 다치는 대로 파손하는 등 온갖 폭력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나타난 경찰 진압과정의 특징은 △욕설과 마구잡이 폭행으로 극도의 공포심 조장 △파업조합원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표현 △여성조합원에 대한 비하와 폭언 △입산부, 장

진압과정은 욕설의 '향연' 특히 경찰은 상급자들까지 쌍스러운 욕설을 하여 부하들을 더욱 고무하였으며,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욕설과 성희롱 발언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

성했다. 노조원들이 서술식으로 답한 경찰의 욕설은 "개새끼, 찹새끼, 좆같은 새끼들"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그 이외의 사례로는 "내가 책임질게. 이것들, 사람 새끼들도 아니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 "눈 마주치는 새끼는 눈깔을 때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유리창 깬다면 뛰어내리지 왜 그냥 있었느냐?" 등이 있다. 또 경찰의 성희롱 폭언으로는 "씨팔년들, 얼굴 반반한 년들이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왜 기어나와서 지랄이야", "(입산부가 있다) 고 하자) 오줌이나 싸버릴까 보다", "입신한 게 자랑이나? 오줌 싸 버린다", "아이, 씨팔년들아! 니들 때문에 잠 못 잤어! 개 같은 년들아, 조용히 해!"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난무했다고 노조원들은 답했다.

### 미란다 원칙 무시

또 연행된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롯데 27.0%, 사회보험 56.8%), 가족, 지인과의 면회가 불허됐으며(롯데 9.6%, 사회보험 4.6%), 일부는 밤샘조사(롯데 2.2%, 사회보험 0.9%)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훈방시 '파업,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롯데 11.3%, 사회보험 53.9%)를 쓰게 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경찰이 직접 제한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한 노조원들은 본인이 겪은 경찰폭력 사례로 △곤봉, 쇠파이프, 방패 등으로 마구 폭행(롯데 77.7%, 사회보험 54.2%)하고, △욕설을 퍼붓고 오리걸음 등의 기합(롯데 69.9%, 사회보험 55.4%)을 주었으며 △군화발로 마구 짓밟았다(롯데 79.0%, 사회보험 38.4%)고 답했다. ☞기사 2면으로 이어짐

## 만화사랑방

이동수



# 44개 테이프 중 16개는 어디로?

## 법원, 호텔 롯데 압수 수색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CCTV 테이프에 대한 노조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압수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지법 형사 32단독 심판장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상 등 혐의로 구속된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정주익 씨 등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13일 호텔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호텔 롯데 노조 쪽이 선임한 윤영석 변호사, 이남경 호텔 롯데 노조 사무

장이 입회한 가운데 CCTV를 관리하는 총무팀 안전실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호텔 측은 "6월 27일 새벽 3시부터 7월 3일 새벽 3시까지의 CCTV 테이프 원본 28개를 경찰청에 넘겼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6일 윤영섭 서울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CCTV 테이프 중 "16개는 관독불능, 28개는 정상작동됐다"고 밝힌 점에 비춰 호텔 롯데 측에서 테이프를 28개만 넘겼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28개의 테이프를 법원에서 넘겨받더라도 그 테이프에는 음주사실을 밝혀주는 장면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윤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진압작전 전후로 호텔 24-34층 복도를 촬영한 CCTV 테이프는 모두 44개로, 이중 16개는 정전 등의 이유로 관독불능 상태고 정상 작동된 테이프 28개는 현재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초에 호텔과 경찰 쪽은 "정전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겨도 비상작동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 측에서 렌즈를 천장 쪽으로 돌려놨다", "노조가 카메라 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주장하다가, 7월 3일에는 "전체 CCTV 작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해왔다.

신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서 "경찰이 술에 취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CCTV 테이프 원본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 노조 정주익 위원장 등은 지난 6일 "경찰의 진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이뤄져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진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청구를 한 바 있다. [심보선]

☞기사 1면에서 이어짐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알릴 것"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책임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난 경찰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교육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적 인권기구에 알릴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배포된 설문지는 1800부, 응답자는 1317명이다(73.1%, 롯데 727명, 사회보험 590명). 응답자 중 연행되지 않은 사람은 롯데노조 31명, 사회보험노조 102명이다. 이 설문문의 최종집계는 다음 주 초에 공개된다. [심보선]

## 부당하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해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함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유서를 제출해 '회사에서 일하고 다닐 때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왔으나, 지난 3년 동안의 투쟁기간동안은 제대로 쉬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삼년 넘는 세월 거리를 헤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일자리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협의회를 개최한 후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에 민중의료연합과 노동자건강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동보건연대회의는 13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회를 갖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고통받아오다 쓰러진 양영대씨는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의견을 들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어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청문제도 도입의 이유를 밝혔었다. 양 씨의 경우는 이 제도 도입이후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명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15일(토)

제 165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 에바다 사태 - 대학생,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

14일 오후 12시 15분 경 전국에바다 대학생연대회의 소속 김진영(남, 서울대 97), 이지은(여, 연세대 99) 씨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5미터 높이의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 에바다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타고 온 트럭에서 12미터 사다리를 이용하여 3분만에 동상 위에 올라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시실비리 척결, 장애인 권리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씨 등은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후 종로소방서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동상에서 내려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119 구조대원 등은 매트리스와 구질차 등을 동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한 종로경찰서는 이날 시위에 협조한 혐의로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김도현(단국대 96), 오현중(성공회대 00), 김형수(연세대 95) 씨와 평택농민회 부회장 이근량 씨 등 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기습 시위는 13일 평택시장이 에바다복지회 이사진을 일방적으로 구성·통보한데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3년 8개월째 훈미속을 헤매는 에바다 사태에 대한 세상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 평택시의 기만적인 변답

13일 저녁 7시 30분 경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한, 연대회의)의 대표단 5명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이사진 구성문제에 대해 김선기 평택시장을 면담하였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평택시청 측은 연대회의가 지지하는 인사로써 이사회의 과반수를 보장하였으며, "시청에서 일방적인 이사 임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면담을 갖기 이전인 13

일 오후에 시청 측은 이미 7명의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정, 이들에게 이사 승인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구 제단 측 인사 5명이 포함된 7명에게 이사 발령을 낸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포함된 김종인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와 권진진 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과)가 2면으로 이어짐.

17일(월)이 휴일인 관계로

《인권하루소식》 18일(화) 자 쉽니다.

##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의사폐업,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 강제해산, 금융과업 위기 고조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대란'을 말하고 짜증스러운 국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하면서 "국민들이 대란에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며 "대결의식과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자"고 그럴듯한 주장을 편다. 왜 우리는 '대란'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 있으며 불안해하는 것일까?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갈등은 기본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다. 잘못 다스려진 갈등은 전쟁으로까지 분출되고 수많은 비극을 부르지만, 잘 다스려진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서로의 성숙을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병든 사회이며 치료를 요하는 사회이다. 이를테면 갈등은 '치료해 달라'는 아우성이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갈등의 존재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한심해 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한심한 것은 '치료해 달라'는 아우성을 힘으로 뭉개놓고 평화가 찾아왔노라 좋아하는 작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은 만능해결사다. 회사측의 협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테러진압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노동자들을 능멸했다. 그들이 청소하고 간 갈등의 현장은 의혹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갈등의 당사자를 현장에서 내몰아 버렸다. 이런 '평화'도 '해결'도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본패를 보이기 위해' 대 테러 특공대를 투입하는 극단의 방법을 취한 다음에 정부에게는 무슨 카드가 있는가? 그런 식의 정부의 대응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감퇴시키고, 갈등의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쓰러져버릴 것 같은 '대란 공포증'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부에게 당부한다.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단칼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흠뻑 두들겨 맞은 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집회,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기본권 유린이야말로 진짜 '대란'을 부르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김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지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공개했다.

고소장에서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작전 관계자들은 호텔 롯데 노조원들이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추락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무차별적이고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는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정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롯데 조합원들이 폭행을 가하여 경찰들만 부상을 입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이무영 경찰청장 모형 화형식, 폭력 경찰 규탄 퍼포먼스와 산별노조 대표자들의 사발 결의식 등을 진행하였다. (심대섭)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지하파)는 최성찬 전 이사를 복귀시키려는 시청의 계획에 반발하여 구두로 이사 수락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뒤에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놓고, 앞에서는 면담을 통해 탄소리를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예바다 농아원생들"이라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청측의 처사를 비난했다. (류은숙·최은아)

### ● 알 림 ●

- 신공안탄압 분쇄,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 SOFA 전면 개정, 양민학살 진상규명 범국민결의대회  
 때: 7월 15일(토), 오후 2시 · 곳: 용산역→미8군기지→서울역  
 주최: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 국민행동,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문의 02-719-8947,8)
- 매항리 폭격장 폐쇄 촉구 보름달 한마당 및 햇불시위 (매항리-오키나와 한일연대집회)  
 때: 7월 16일(일), 오후 6시 · 곳: 매항리 폭격장 일대  
 주최: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  
 \*서울 참가자들은 신도림역(지하철 2호선 1번 출구 대림학원 앞) 오후 3시에 전세버스로 이동(차비 1만원)

#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0년 산재주방의 달 사업 공동추진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종로성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조 및 의료부 관련자 1백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급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해 문제가 되었던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제정환 원무과장은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간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진료비수가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산재환자는 기피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지혜 산재주방연합 사무국장은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1990년 126,966건에서 1998년 50,561건으로 동기간에 절반 이상 감소되었으나 중대 재해자 비중은 1.7%에서 4.3%로, 뇌·심장질환과 같은 직업병 재해자 비중은 1.2%에서 2.5%로 각각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는 전자·통신부문을 비롯한 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료기관 현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종합병원 6곳과 특수병원 3곳, 재활공학연구소 1개소, 직업적응훈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낙후된 시설과 만성적인 적자'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국립인 서울대병원과 원자력 병원을 비롯하여 삼성병원, 중앙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어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올해 5월 산재의료기관을 반납하였다가 노동계 및 산재관련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후 올 12월까지 유보해놓은 상태다. (기명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변호사 선임제도 없이 무슨 집견?"

###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항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현)의 인권 의식이 놀랄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항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햇불 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항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겨 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귀가 찢기고 입술이 터졌다고 18일 면회에서 밝혔다.

또 화성경찰서는 구급된 피의자를 집견하려던 변호인의 집견을 거부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17일 밤 9시 30분 경 화성경찰서에 김 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집견을 신청했으나 "변호인 선임제가 없다는 이유로 집견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설명해주었으나 "경무계장 등이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욕박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당일의 상황실장이었던 정종욱 경감(청문감사관)은 "형사반장이 '선임제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집견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해 '수사과장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며 상황실장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화성경찰서 문병하 수사과장은 "오늘(18일)도 변호사 집견이 있었다. (어제는) 선임제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라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34조와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28조를 들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 집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문 수사과장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집견신청을 받아주면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집견을 신청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덕우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변호사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로 화성경찰서장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8조 1항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모37)"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항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운(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 씨에게는

2000년 7월 19일(수)

제 165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18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김정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옥석(매항리 주민), 최해성(매항리 주민) 씨 등은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심보선)

## "성희롱 예방 교육 했다"

호텔 롯데 사측, '서명부' 들고 나와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호텔 롯데(대표이사 장성원)를 노동부에 고발하자 호텔롯데가 예방교육을 한 객관적 증거라며 서명부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중)은 서명의 상당수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여성·노동계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에 호텔 롯데 홍보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교육에 참가하게 했다"며 "홍보실 직원들도 모두 99년에 예방교육을 받았다. 전체 직원의 95%이상이 교육받았다는 서명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호텔롯데 노조는 "최근 노동자들이 사측이 제시한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상당수가 자기 서명이 아니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집견...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변호인의 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모37)"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항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운(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 씨에게는 "회사측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 황선동 씨 선고공판**  
 7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지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선고공판**  
 7월 24일(월)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 94년 '주사파' 파동시 대학교 교재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 6년만에 '끝'이 보이며 한다.

###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폐쇄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쇄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고무·찬양죄가 폐·폐정된다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존재 의의 자체가 상실되는 꼴"이라면서 "그 운용상의 문제는 신중을 기하여 적절히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폐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했다. 또 정용석 교수(단국대 정치학)도 "현재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고친 것도 아닌데 남북만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7조에 있어서 확대·유추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1997년부터 99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관련자 중 7조에 해당되어 구속된 사람이 98%에 육박한다"고 통계자료를 내보이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향한 법이 아니라 국내 국민을 향한 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변호사는, 북한도 비슷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주장에 대해 "북한이 반인권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펼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이 체제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입을 뗀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 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대섭)

### 공공근로 예산 삭감 마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

18일 전국 실업극복 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오충일, 전 실련)는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실업관련 공공근로 추경예산 1,500억원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전면적으로 통과 저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었다. 전실련은 "한나라당이 부정 선거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경 예산과 연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추경 예산에 대한 삭감 당론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대섭)

###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측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 비난(7·11) 여야 의원 41명 소파 불평등 조항의 전면 개정과, 한·미 양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 채택(7·14)

#### 2. 한국민아, '독극물' 마시고 잠잠해져라?

녹색연합 등 기자회견 열고 "주한미군이 지난 2월 9일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주검 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르말린 475ml짜리 480병을 하수구에 몰래 버려 한강으로 흘러 보냈다"고 폭로(7·13) 주한미군, 독성물질인 초름알데히드 방류 사실 공식 인정, 그러나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7·14)

#### 3. 미국엔겐 '포기', 국민엔겐 '포수'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를 벌이던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햇볕행진을 시작하자 소방차 물대포와 경찰 등장하여 6명 연행(7·16) 연행자 중 최용운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 신청(7·18)

#### 4. 우리는 테러진압부대, 표적은 노동자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져, 이한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특공대인 '솔개'부대 투입한 이유를 '장애물 제거와 초기진압을 위한 것'이라 밝혀(7·11)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의 공동조사에서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지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택시장, 7명의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정, 이들에게 이사승인서 발송, 이에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이순신 장군 동상위에 올라 '에바다 정상화' 촉구(7·1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처음으로 청구되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형사 재판권 규정과 환경권 침해 규정에 관한 것이다.

형사 재판권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김광선 씨와 함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고계현, 차승렬 씨는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미군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

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너무나 불평등하게 맺어있는 소파의 문제점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섭)

###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속보)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을 대표해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페트로스키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름 알데히드 방류사실을 발표한 이현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미8군사령관이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책임자 처벌 면에서는 토마스 에이 스와르츠 주한미군 사령관이 퇴진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사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소파개정의 환경부문에서 "최소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의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8군 사령부는 19일 "주한미군이 최근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미국측 위원장 킴스틴 대령 명의의 이 서한에서 주한미군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심보선)

탐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는거, 그게 소파야"

19일 오후 2시 탐골공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이 '독극물 무단 방류 미국의 공식사과촉구대회'를 열고, 독극물 방류에 대한 미국 측의 사죄와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는 노인들의 즉석토론회가 벌어졌다.

-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 "이거 청병과나가 따로 없구먼. 아,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는거 그런 것 아닌가"
-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나서라고"
- "아니 미국이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데 뭘 잘못 안게지"
-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제 국민한테나 민주주의지 남한테는 다 그런거여"
- "글쎄 그래도 영..."
- "아 미국놈들한테 그만큼 당했으면 되지 또 뭐가 걸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이광길)



#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및진전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법안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

어 의견수렴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밀실추진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미리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미리 완성된 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을 말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질서확립법의 마련은 철저히 정보통신부 산하기구만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는 철저히 공개되고 투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서확립법'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선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

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불건전한 권력적 개입"이라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확립법'의 내용은 일부 언론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로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와 청소년 보호는 당연히 동의할 원칙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있다"며 "질서확립법은 상식 이하의 방식을 택하여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어느 누가 그런 힘을 부여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긍정적인 면보다는 전체적인 폐해가 큰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질서확립법'이 시행될 때 네티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온라인매체에 글을 올렸는데 '불법정보'란 딱지가 붙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글을 올린 이가 항의하고 싶어 이의를 제기하면, 그의 글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분쟁조정'의 권한도 갖고 있는지라 결국 '같은 기구'가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에 오른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외에 여타 통신망의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 한시통신이용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류은숙)

### 행사와 동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 때: 7월 20일 (목) 오후 2시      · 곳: COEX 320호 회의실
  - 주최: 정보통신부 (02-750-1273)
-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 때: 7월 20일 (목) 오전 11시      · 곳: 국회 헌정기념관
  -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02-757-7386)
-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
  - 때: 7월 21일 (금) 오후 5시      · 곳: 조계사 내 문화회관
  - 주최: 진관 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 추진모임 (02-734-6401)
-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 때: 7월 21일 (금) 오전 10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 주최: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02-741-5363)
- <토론회>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 때: 7월 25일 (화) 오전 9시      · 곳: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02-2275-4860)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특공대 폭행 있었다”

### 최소한 27분간 폭언, 군화발로 짓밟개

'경찰 특공대는...폭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MBC의 19일 정정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롯데 잠실 연회장에 근무하는 성기안(40, 교섭위원)씨는 "36층에 있었는데 7시 18분쯤에 경찰특공대가 장애물을 뚫고 들어오자마자 '이 개새끼들, 옳드려! 이 새끼들이 시키는대로 해! 무릎꿇고 앞으로 기어가!'라고 악대며 노조원 40여 명을 연회장으로 몰아 넣었다"고 증언했다. 성씨는 "기는 속도가 느리니까 군화발로 마구 짓밟았다"고 분노했다. 성 씨는 "7시 45분 경에야 '술게 빠져'라는 말이 들렸다. 36층에서는 최소한 27분 여 동안 술게부대가 머무르며 초기 상황을 공포로 잠악한 것이다. '술게 빠져'라는 말 이후 다른 경

찰이 와서 게스트 엘리베이터 앞으로 집합하라고 했다"고 술게 부대가 '통로'만 개척하고 경찰 기동부대에 인계한 후 철수했다는 주장을 뒤엎었다. 성씨는 경찰특공대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폭력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2면 인터뷰 참조> 또한 본인이 특전사 출신인 성씨는 "인질을 잡고 있는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섬공과 소음을 동반해 3~5초간 눈을 못뜨게 하는 스텐트(stunt)탄이 사용된 것은 특공대 투입도 어불성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MBC 보도국 김상기 사회부장은 19일의 MBC 정정보도와 관련해

질문할 것이 있다는 기자의 메모를 보고 전화를 해 와 "최창규(최근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 건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MBC가 최창규 기자 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반응이었다. 또한 MBC가 경찰특공대의 정정 보도 요청에 쉽게 굴복한 것이 최 기자 건으로 불거진 경찰과의 마찰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지 기자가 "최창규 기자 건은 관심사항이 아니고 19일의 정정보도 경위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자 김 사회부장은 "경찰 특공대는 통로개척만 하고 경찰기동대에 인계한 후 도보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MBC 관련 보도가 '특공대'를 특정하고 있어 정정보도를 한 것이다. 경찰 기동대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후퇴했다. (심보선)

##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김·경찰의 무리한 수사과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를 자백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유죄임이 인정되나 '황 군이 초범이고, 혐의 내용의 동기나 행위의 위험성이 없었던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 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태섭).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용 공청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은 '불건전정보규제'라는 측면에서 개정시안을 설명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종원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종필 변호사도 "등급표시의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록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의 지적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정보에 관한 법인지 산하단체조직법인지 모를 만큼 위원회만 잔존 설치하고 법리상으로도 부실명어리인 이런 법을 서둘러 만드는 의도에 대한 의혹이 가득한 공청회였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그나마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정보보호나 제대로 해라"는 요구에 대한 라 과장의 답변은 "전향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한마디였다. (이광길)

####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식 ▶

때: 7월 21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인터뷰> 성기안(호텔롯데 잠실 연회당 근무) "폭력과 공포로 장악한 후 교체됐다"

△경찰이 들어올 당시의 상황을 말해달라.  
36층에서 7시 18분 정도에 옆에서 '뚫렸다'는 소리를 들었고,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시계를 봤냐고 묻자 "나는 특공대 출신이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시계를 본다"고 대답했다) 7시 21분쯤 막고 있던 중앙 엘리베이터가 쪽 꺼지는 느낌이 들어 '뚫렸다' 생각하고 뒤돌아 가려는데 누가 손을 낚아챘다. 대뜸 '이 개새끼들, 엎드려! 이 새끼들이 무릎꿇고 기어가!'라고 욕부터 하였다. 나는 내 손을 낚아챈 사람 얼굴이 낯익어 평소 들락거리던 남대문서 정보과 형사라고 생각했다. (왜 낯익다고 했는지는 뒤에 밝혀진다) 경찰은 철망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  
경찰이 무릎을 꿇린 채 앞으로 기게 해서 한 방으로 40여 명의 동료노조원을 몰아넣었다. 그러곤 다시 무릎 꿇고 기게 했다. 늦게 간다고 갖은 목실을 하며 군화발로 마구 짓밟고 사정없이 했다. 노조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술개부대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7시 45분쯤에 밖에서 '술개 빠져'라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조금 후 다른 경찰이 와서 게스트 엘리베이터 앞으로 집합시켰다.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걸어 내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막고 있던 곳을 뚫고 들어온 경찰은 특공대였다.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생각했다는 데, 그러면 술개부대가 아니라 일반 경찰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니다. 그건 곡절이 있다. 강제 진압된 이후 잠실에 근무하는 후배 송아무개가 집회대열에서 인사를 하면서 "선배, (경찰투입 때) 동기 봤어요?" 하길래 뉘소리를 하나씩 들어보니, 송아무개가 하는 이야기가 이랬다.

그 특공대원이 "에이, 기본 더럽다. 6년 동안이나 같이 군 생활한 동기를 직접 무릎 꿇리고 군화발로 짓밟게는 걸 봤으니! 야! 너 성기안이라고 아냐?"고 자기에 물어왔다고.

△6년 동기라니 무슨 말인가?  
아마 6년 동기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착오일 것이다. 나는 특전사 직할대 독립대에서 83년부터 87년까지 5년간 근무했다. 1년간은 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대대원이 많은 수가 아니었으므로 그 당시 봤을 때 낯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특공대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  
경찰특공대가 정정보도 요청하면서도 '호텔 롯데 36, 37층에 설치한 장애물만 제거하고 현장 기동부대에 인계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초기에 특공대가 폭력과 공포로 장악한 후, 7시 45분경에 '술개 빠져'라는 말 이후 다른 경찰로 교체된 것이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전·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 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기란 민권공대위 공동대표,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은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도 국보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을 하는 한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학생운동가들이 수배령에 쫓겨 다녀야 하는 기이한 현실을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보법은 더 이상 법일 수가 없으며 이미 죽은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7월중 3당 대표면담을 추진,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8월말까지 각 부문, 지역별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되었음을 선언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9월 초

에 '사문화 선언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또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양심수 전면석방'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연대는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국민대회'를 연다. (심보선)

2000년 7월 22일(토)

제 166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간첩'은 무조건 폐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기사 2면으로 이어짐

###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둠의 시절에 대해 '그게 뭐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감시와 검열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엉뚱하게도 소리높여 정보화시대를 외치면서 인터넷을 모르는 국민을 시대에 뒤떨어진 촌놈인 것처럼 몰아가던 정부당국 쪽에서 매우 간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들의 '나홀로' 생산물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칭 통신질서확립법)'은 그 향수가 지나쳐 신 검열 왕국을 세우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집중'과 그로 인한 '감시'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 십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서 드러났듯, 통신질서확립법은 각종 위원회를 마구 만들어냄으로써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단체들의 권한을 배가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심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정보통신부의 한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정보와 그 정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일상적인 검열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정부가 펼치는 '불법정보규제'의 그물에 온라인매체의 폐단이 얼마만큼 걸려들진 두고봐야겠지만 그 그물이 감히 덮고자 하는 바다는 넓고 깊다. 그 바다에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추구하고 위해 필수로 여기는 '입과 귀'가 무수히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걸 가리고 막겠다는 발상에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등급을 매겨야할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과감히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는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

### 학부모·지역 운영위원 신분조치

사생활침해, 운영위원 활동 위축

선출과정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입증돼 활동하고 있는 인천지역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지역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천교육청이 신원 재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 7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장에게 신원재조사를 지시했다.

신원조치를 요청 받은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최 아무개씨는 "부당한 느낌이 든다"며 "학부모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운영위원 선거에서 이미 소견, 경력 등이 공개됐고, 또 숨긴 사실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을 그만둔다는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것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졌다. 또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앞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모든 면에서 아주 조심스럽고 위축된다"고 말했다.

인천남동구에서 지역운영위원으로 일하는 박 아무개씨도 "운영위원으로 뽑힐 때 썼는데 또 쓰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희) 박인옥 사무처장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각급 학교가 개인의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며 "이런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즉각 신원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영)

※기사 1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각각결정이 내려져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보영)

##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른 부분을 요약하여 실는다. [편집자주]

####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다.

##### 식량 위기

북한의 식량위기는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네프, 세계식량기구, 유럽 공동체가 공동으로 7세 이하의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고 62%가 발육부진 상태였다. 지난 4년간 사망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22만 명 이상 많았다.

많은 사람이 식량을 구하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국경을 건너던 북한인이 북한 경비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보고되었고, 국경수비대에게 체포되거나 중국당국에 의해 송환된 북한인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체포된 북한인들은 경비대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거나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난방도 되지 않는 비좁은 감옥에 구금되며 식량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경 지역에서는 부녀자 매매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감시

8월에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정부에게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북한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정부는 1999년 곧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규약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앰네스티의 조

사에 의하면 연말까지도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4년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국제 교섭

1999년 북한당국은 몇몇 유럽 국가들과 유럽공동체, 캐나다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과는 식량원조, 인권,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른 제재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은 11월, 12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몇몇 제재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일본이 대북 전세항공기 제재 조치를 해제한 이후 민간 교류도 회복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도 증대하여 8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1999년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6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어 북한 군함 1척이 침몰되고 80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민주노총 측구단의 방북이 허용되어 북한 노동자 측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 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위원회의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 사면

1999년 2월에 김대중 정부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8월에 광복절 기념 사면, 연말 사면이 있었다. 2월에는 19명의 장기수를 포함 43명의 정치범이, 8월에는 56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이 중에는 양심수도 포함되어 있다.

2월 사면자에는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70세)씨와 21년을 복역한 조상록 씨, 14년간 복역한 강용주 씨가 포함되었다. 조씨와 강씨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한 안재구(66세)씨와 유낙진(70세)씨가 8월에 사면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장기수 손성모(70세)씨와 신광수(71세)씨가 연말에 석방되었다.

##### 국가보안법

10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에 대해 제출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존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죄수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석방의 선결조건으로 요구되는 준법서약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법과 관행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999년 말 111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학생 62명, 노동운동가 15명) 8월에 115개의 시민 단체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12월 책갈피 출판사의 대표 홍교선

씨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1년 징역과 1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그가 출판한 판시즘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여 군데의 한국 대학에서 교재로 지정되어 있다.

12월에 '영남위원회'의 회원 15인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 석방 이후의 죄수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인 보안관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약 100여명의 석방된 정치범이 이 법의 관찰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시 대상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관찰대상자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 아래 놓인다. 그들은 다른 석방된 죄수들을 만나거나 일정 단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자의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종 경찰은 이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웃, 동료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해 묻기도 한다.

##### 노동조합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을 크게 바꾸어 12월에 비합법적 노동단체였던 민주노총(당시 회원수 약 57만 명)을 승인했다. 7월부터는 교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1월부터 대부분의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노조 참여는 금지됨).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책임 있는 노동조합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한 많은 전투경찰을 배치시켜 파업을 중단시키

고 집회를 막았다. 때때로 경찰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폭력을 촉발시켰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일련의 파업을 조직하였던 4월과 5월에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인 이상춘 씨는 5월 17일 업무방해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간부 60명 이상에 대해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승인한 직후인 12월 초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가 파업 진압과정에서 체포되었다.

##### 감옥의 상황과 처우

감옥과 구치소의 상황은 열악하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은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으며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동안의 높은 범죄율 때문에 죄수들은 계속 초과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감옥과 구치소의 의료 시설은 미비하다. 정치범들은 종종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간담회 등)는 거의 없다. 임신부나 갓 출산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이나 음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몇몇 감옥과 구치소에서 수감이나 족쇄를 채우고 감옥 내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죄수들은 적합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구타당하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거나 너무 작아 누울 수도 없는 징벌방에 감금되기도 한다고 한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5월에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9명의 정치범은 부산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감이 채워진 후 주먹과 발로 계속 구타당하는 등 부산 구치소의 간수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번역·정리: 김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25일(화)

제 166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돈 내고 시위하세요!”

###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최근 경찰청은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의견조사에서 "잠시만 차로를 사용,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경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임을 숨긴 채 곧바로 '찬·반'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 의견 조사의 하단부를 보면 민주노총 집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의견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연이은 집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 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의 의견 조사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보호해주는 못할 망정, 하겠다는 집회도 막으려는 이 경찰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손 씨는 "돈을 내고 행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만

행진을 하게 되겠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를 오해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견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

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며 "대중 집회가 타인의 권리를 부득이하게 침해할 때 당국은 그것을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도로 사용료를 매긴다는 발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경찰이 집회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교통 체증이라는 미시적인 가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 효용의 촉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해줄 것"을 당국에 바랐다. (심대섭)

##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다”

###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94년 당시 김일성 주석 조문과동과 박홍(당시 서강대 총장) 씨의 '대화가 주사파' 발언으로 몰아닥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창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라는 측면에서 공안당국의 이성을 잃은 폭거로 지탄받았다.

재판부는 "국보법 개폐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으며 강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자기검열'을 하게됐고, 그로 인해 책 쓰는 일을 유보하고, 동료교수는 해외에 나가는 것도 취소되었다"며 그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장 교수는 또 "국보법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말살시켜왔다"며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국민"이라고 밝혔다.

한편 90년 개설되었던 교양과목 '한국사회의 이해'는 이 사건이후 폐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강의를 부활시키고 해당 교수들과 학문의 자유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데는 '무죄'를 받는 것보다 더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류은숙)

인권  
시평

## 학교에 만나가도 될 권리

공선옥 (소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다니는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엔 안 다니겠다. 지난 학기초의 일이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군기' 잡는다고 좀 엄하게 다스렸나보다. 여름방학을 맞아 담임선생님이 작성해서 보낸 가정통신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욕심이 많은 담임으로서, 5학년의 질서를 잡는 담담을 자청해 맡아하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엄하고, 급식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때도 들었습니다. 혹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집에서도 유독 엄마 말도 잘 안듣고 말썽이 잦은 아이인 지라 솔직히 학교에 보내놓고도 늘 조마조마하긴 했었다. 하루는 아이가 일기를 안 써줬다고 선생님한테 '엎드려 뺨'을 당했다. 그 다음날부터 결사적으로 학교엔 안 가는데는 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한 달인가를 그렇게 학교에 가야 하느니, 안 가겠다느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참인데 어느날인가는 담임선생님이 인편으로 편지를 부쳐왔다. '학교엔 안나올 시는 학교장이 두 번 이상 경고조치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동장에게 보고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경고장이 아닐 수 없다. 아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에 좀 안나갔을 뿐인데 웬 경고조치며, 웬 과태료인가,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도 없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의무교육이라! 그것은 아이가 교육받을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가 아이를 일시키려고 일부터 학교에 못 가게 한 사례를 본적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다닐만한 아이들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시키는 뜻은 알겠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교육현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한 게 없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엔 안가면 좀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왜 아이가 학교에 안나오려 하는지 알아보고 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빚쟁이처럼 경고장부터 날리고 보는 학교측의 처사에 그렇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온갖 쇼를 다한 나였지만 학교에 대한 정나미가 툭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아이가 학교에 간다해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학교측은 마치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학교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고장이 무서워 아이는 학교에 나갔지만 가는 아이나 보내는 나나 썩 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나 나나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서인가.

##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24일)

1. 떨기만 한 미국의 사과  
서울시에 공식사과하기로 했던 주한미군이 독극물 무단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녹색연합,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7·20) 서울시의회 비상의원총회 열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7·24) 미8군사령관 "포름알데히드 하수구 폐기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사과문 발표(7·24)

2. 소파(SOFA)를 손보자  
경실련, 소파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 요구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20)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 통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7·21) 94년 대학의 교양교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신공안정국의 신호탄이 됐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6년만에 무죄선고(7·24)

4.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진보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졸속추진과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며 저지에 나서(7·20) 18일 만화가 이현세 씨의 작품 '소년용' <천국의 신화>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가 '음란물'로 판결한데 대해 한국문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문화단체들, "사법부의 부당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유죄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 밝혀(7·21)

5. 월드컵과 함께 박정희 기념관술?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박대통령 기념관을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 내에 건립키로(7·19)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등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며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발족(7·2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서울하늘 찢른 농민들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김대중정권 농업정책을 바꿔라"

한국·철레 자유 무역 협정, 한·중 마늘 협상 등 김대중 정부의 '개방 농정'과 농·축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2000년 1차 전국 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상경한 1만 5천여 농민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방농정 철폐 △농·축산물 가격 보장 △농가 부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신택주 의성군 마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제 값 받고 팔아보는 게 농민들의 소원"이라며 "정부가 농민들 생각

을 않고 농작물을 마구 수입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또 정광훈 전농 의장은 "작년 겨울 이후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을 포함한 수많은 농민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가 농업정책을 민족농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경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마로니에 공원에 진입하려는 순천 농민회 소속농민들과 시위용품 압수를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사과탄 3발을 발사했으며, 대회가 끝나고 평화행진을 하는 대열에게 무

2000년 7월 26일(수)

제 166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차별 달려들어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총돌로 2-3백여 명(주최측 집계)의 농민과 학생이 다쳤으며, 경찰의 강제진압에 분개한 학생들과 일부 농민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약 4시간 가량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상자 기사 참조> (심태섭)

### 경찰이 때려놓고 시위대 탓으로 날조

경찰청 사이트, 사과문 실기로

'극렬시위대가 주먹·깃봉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잡석·계란을 투척하여 경찰측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취재중이던 일요뉴스 김용덕 기자가 부상당함'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의 '도심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에 담겨있는 문구다.

너를 다쳐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못느끼는 김기자는 25일 경찰청 사이트에 올라있는 위 내용을 전해 듣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사이트에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된다. 치료비도 남대문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경비과 경비1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위의 문구의 뜻을 묻는 기자에게 "극렬시위대가 김 기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 관계자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 "김기자가 어떤 이유로 부상을 입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의견조사"에 있는 문구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감변했다. 그러나 김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하자 이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는 누가 김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제조사 결과 경찰 실수로 김기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리를 내렸다. 또 사이트 문구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 "우리 농민 다 죽어..., 앞으로 농사 못 지어"

"지금 당장 부채탕감과 농산물 가격보장이 안되면 우리 농민 다 죽어요" 25일 오후 3시경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까맣게 탄 얼굴과 마른 입술로 호소했다. "해마다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보고 뭘 지어먹고 살란 소리여!"

춘천에서 올라온 최모(42세)씨는 "우리 마을 90가구 중 한 두 가구를 빼곤 평균 4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 그런데 수입사료 값이 오르면서 가축도 수지가 안 맞고, 개방정책으로 발작물 값도 떨어지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아?"라며 한숨지었다. 최씨는 또 "살고있는 마을에 도시로 떠나는 가구가 많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요새는 그런 건 없어, 다 늙어서 어디를 가!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에서 농사짓겠다고 온 조카가 빚더미에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 처자식 다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여!"라며 울분을 사이지 못했다.

고흥군에서 온 박상규(48)씨는 "고흥의 경우 마늘 경작비율이 전국의 8.8%, 전남도내의 18.3%나 돼! 그런데 킬로그램(kg)당 생산비가 1,500원 하는 마늘이 시중에서는 800원에 팔리고 있어. 중국산 때문이지. 정부가 세운 대책이 1,300원에 수매를 한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지! 우리 고흥 지역 농민들은 이익은커녕 이자도 못 갚게 생겼어"라며 "정부가 최소생산비 가격이라도 당장 수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당장 농가부채를 전액 탕감하더라도 농·축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 못 지어!"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촉구했다. (기명문)

##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 세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24일 세움터, 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와 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과 한국정부의 책임 명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에이즈 감진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 등을 소파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지촌 여성 운동단체 세움터(대표 김현선)의 김주영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어떤 차이가 있나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경우 운동 단체는 평소에는 수치의 대상이었던 매춘 여성을 아주 쉽게 '민족의 순결한 딸'로 재해석해 버렸다. 여기에는 가해자 미군의 약행에 대응하는 민족적 정의감도 작용했지만 윤금이 개인의 고통과 눈물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민족을 위한 도구화랄까?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그들이 처한 현실에 기반해 논할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기지촌 문제에 대해 미군당국과 한국정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지촌 여성 매춘은 미군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생겼다. 양자가 만들어낸 '정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정부와 미군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당장 매춘 지역에서 배내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처럼 대안을 제공하고 선택하게 해야한다. 프로젝트 비용을 미군과 한국 정부가 분담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이 기지촌 여성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미군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문제가 소파개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미군당국의 변하지 않은 태도, 한국정부와 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가부장적 편견을 들 수 있다. 오로지 외국 군인들에게 몸을 판다는 이유로 이들은 '수치스러운 어떤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출발하기 보다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 새로 나온 자료집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2000. 7/지문날인거부 224+/44쪽

지난 30년간 17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손가락 전부를 국가에 내맡긴채 '지문날인'제도에 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복종을 선언하며 등장한 이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지문날인거부 224+. 지난 5월 지문날인거부 78+로 출발한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4명의 집단이 되었다.

이 자료집은 지문날인거부 224+가 지문날인제도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지문날인거부 224+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강제날인이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책을 읽고 우리의 운동에 동참하기를 진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지문날인 거부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신고 있다. 또한 "나는 이래서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는 제목 하에 외국인이 체류연장을 위해 지문을 찍으면서 느낀 굴욕감, 아직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어린 학생의 걱정 어린 시선 등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신고 있다.

이 자료집은 사회진보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 문의: 778-4001 (홍석만) /741-5363 (이창조)

<최은아>

1-2주에 한번 성병검사를 한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낙점'(성병 양성반응)되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을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

▲매춘은 불법인데, 단속은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 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라도 그 근거 조항이 소파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광길)

### 경총, '성희롱'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

호텔롯데 관리자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경영계가 주장하고 나서 호텔 롯데 노조원은 물론 여성·노동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경총)는 21일 '파업이전의 성희롱을 파업이후에 문제삼은 정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행하였을 판단과 대응(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롯데 노동조합의 한 여성노조원은 "너무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들먹이며 우리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여성·노동단체는 25일 성명에서 "경총이야말로 성희롱 문제를 노사문제에서 경영자 측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부도덕하고 불순한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경총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호텔롯데 노조와 여성·노동계는 27일 오전 11시 경총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가진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27일(목)

제 166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나

###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26일 오후 경찰이 남북 장관급 회담 장소인 신라호텔 인근에서 29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조치는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5월 10일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같은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가 민주노총이 '시위 전력을 문제삼아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을 내자 경찰청이 전면 허용한 일이 있다.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손나구 교선 실장도 "국가적 대사로서 적극 환영하며 경찰이 경계될 경비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국가대사는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집회금지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분위기가 나 상황을 보아서 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같은 우려는 현행 집시법 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사전신고를 명문화한 것을 경찰이 허가제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길)

## "경찰이 돈까지 빼앗았다"

전농, 농민 대회 피해 보상 요구

25일 '전국 농민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현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에 따르면 집회 참가를 위해 서울 이화동 로터리를 지나던 전주지회 사무국장이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0여명의 경찰에게 끌려가 소지품 수색을 당했고, 그 와중에 회비로 건어두었던 현금 33만원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방송 차량 두 대가 파손되어 탑승했던 농민이 크게 다치는 등 2백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33명이 연행되어 26일 현재 2명이 구금돼 있다.

이에 대해 전농의 배형택 대외협력 국장은 "예정된 경로로의 집회 행렬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농민의 현금까지 갈취한 경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진술서를 받아 경찰 당국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농은 26일 성명을 내고, △폭력, 강경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할 것 △부상자와 차량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 △농민의 돈을 갈취한 경찰을 구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심태섭)

제2회 대학생 인권캠프, 참여자들 한 목소리...

## "대학 내 인권교육 절실하다!"

올해로 2회 짝을 맞은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대학생 인권캠프가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인권캠프에는 전국 17개 대학 41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인권의 역사를 찾아서', '국가폭력, 어디까지인가?', '유엔인권체계 활용방안', '2000년, 매향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다양한 참여학습을 경험했다. 캠프 참가자들 대부분은 '대학사회 내 인권교육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캠프의 후속활동을 통한 깊이 있는 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다는 김충선(광운대 95) 씨는 "인간의 권리는 계속 발전되고 새롭게 생성되지만 제도 교육은 제자리를 땀들 뿐"이라며 "인권캠프와 같은 계기를 통해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지점을 찾는 인권교육은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선배의 권유로 참가했다는 이주희(서울대 00) 씨는 "국가가 지문날인을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나의 인권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가장 놀라웠다"며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에게 견해차이가 있으되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자신의 신념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인권캠프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에는 '버마가 민주화되면 고국에서 인권운동을 하겠다'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활동가 3명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기명분)

## "술개 부대원은 짐승이었다"

### 롯데 노조원 96명, 특공대 폭행 증언

지난 6월 29일 호텔롯데 노조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경찰 음주진압, 임산부 장애인 폭행 등 충격적인 고발이 있었으나, 이같은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MBC는 경찰특공대의 정정보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7월 19일 '특공대는 통로만 개척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시의 공포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편집자주>

호텔 롯데 노조원들이 MBC의 경찰 특공대 관련 '정정보도'에 반발, '술개' 부대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증언에 나섰다.

노조원 이은(잠실 면세점), 강성호(객실팀) 씨 등 96명은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야수같이 날 뿜 술개부대가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며 "언론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 보도해 주길" 희망했다.

당시 36층 샷데 룸에 있었다는 이은 씨는 "29일 7시 15분경 '뿔뿔했습니다'는 동료의 다급한 소리와 동시에 하얀 헬멧을 쓴 경찰이 '야, 이 새끼 들어. 너네 죽고 싶어? 대가리 박아. 대가리 드는 새끼 다 뽀개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노란색 쇠파이프를 휘둘러 남자 조합원을 개패듯 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씨는 "(누군가가) '허리 아프다'는 말을 하자 '시끄러, 이 새끼!'하며 '퍽! 퍽!'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술개부대의 무지마한 초동진압을 증언했다. 나중에 같은 층의 뽀족 뽀족으로 오리걸음으로 이동한 이씨는 "임산부가 있다는 말에도 경찰은 머리를 박고 있는 조합원들을 밟고 다니며 마구잡이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치를 떨었다.

"고개만 쳐박고 있는데 '술개 빠져, 술개 2대 빠져!'라는 무전후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의외로 조용해져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1023'이라고 표시된 방패를 든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고 한혜수(객실팀 교환실) 씨는 밝혔다. 특히 김은정(잠실 면세점) 씨는 "우리가 경찰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항의하자 나중에 들어온 전경이 '우리가 안했어요. 우리 아니에요'라며 존대말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36층 중앙통로에 있다가 같은 층 뽀족 뽀족으로 피신한 김재훈(잠실 식음료부) 씨는 "초기에 들어온 부대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반쯤 섞인 헬

멧, 검정티셔츠에 청바지, 가슴보호대, 팔꿈치·무릎보호대를 착용해 나중에 들어온 경찰과 확연히 구분됐다"고 밝혔다.

동료 4-5명과 함께 37층 주방 쪽에 있었다는 이우곤(본관 시설부) 씨는 "처음에 들어온 경찰이 '술개 빠져!' 등이 무전이 오고갈 때, 37층 벽에 있는 과일주를 보고 '술 많다, 이거 가지고 가져간다' 술을 가져갔다"고 증언했다.

한편 롯데 노조원들의 술개부대원 폭행 증언에 대해 경찰청 경비1계의 진압반장 김삼준 경감은 "공식입장은 이미 발표한 그대로"라고 밝혔다.

(심보선)

노조원 증언 모음

## 호텔롯데 36·37층 상황

6월 29일 새벽 4시 경찰 투입 이후 36·37층에는 각각 5백여 명 정도의 노조원이 있었다.

경찰투입 전에 이 곳에서 자고 있던 노조원 5백여 명과 경찰 투입이후 2층에서 노조원 5백여 명이 더 올라왔다(잠실 연회팀 성기안).

36층의 여성노조원들은 샷데 룸, 로비 등에, 37층의 여성노조원은 주로 뽀족 뽀족에 있었고, 남성노조원들은 밑에서 올라오는 세 개의 통로를 의자, 테이블 등으로 막았다.

6시 30분경 이 곳의 상황은 '저항해 봐야 소용없다', '저항하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날이 밝아져 경찰이 포기할 것이다'는 논의가 분분할 정도로 비조적이었다. (본관 시설부 이우곤)

7시 15분 경에 36층 백남빌딩 쪽 통로가 맨 먼저 뚫리고, 이어 18분 경에 신관통로 쪽으로 경찰이 들어왔으며 중앙 게스트 엘리베이터 쪽(중앙통로)을 21분 경에 경찰이 뚫고 들어왔다. (잠실 연회팀 성기안)

백남빌딩 쪽 통로로 들어온 경찰은 미처 앞드리지 못한 여자한테도 군화 발로 짓밟고, 동색의 긴 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여자들 속에 있던 남자를 발견한 경찰은 여자들을 마구 짓밟고 들어가 그 남자를 패서 끌어냈다. 여성 조합원을 보호하려 온몸으로 감  
\*기사 3면으로 이어짐

## 행사와 동정

■ 청소년 인권캠프

·때: 8월 8일(화)부터 2박 3일 ·곳: 경기도 대성리 늘푸른캠프장

·인원: 선착순 30명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성노동영화제' 작품 모집;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 센터에서는 9월 23일(토) 개최할 영화제를 위해 '여성노동'의 문제를 알려낼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정보, 직접 찍은 영화 등을 모으고 있다.

·때: 7월 31일까지 ·문의: 736-7883(여성노동영화제 담당자)

■ 남북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때: 7월 27일(목) 오후 2시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환경운동연합(02-735-7000)

■ 매항리 국제폭격장 폐쇄, 소파 전면개정, 양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

·때: 7월 29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대회 위원회 등(02-762-1238)

#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웠다'

이 은(호텔롯데 잠실 면세점) - 맞출법 등 고려않고 원문 그대로 게재: 편집자 -

계속되는 연막탄, 섬광탄, 공포탄 등으로 인해 숨이 막혀 몇몇 남자동지가 "놓렸습니다. 놓렸으니까 시키는대로 하십시오. 반항하면 맞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앉으세요"하는 말과 동시에 계속되는 연막탄과 함께 하얀색 하이 바(헬멧)을 쓴 거구의 특공대(?)가 들어왔고 쇠파이프가 휘둘러지면서 그 위에서 말하던 남자 동지가 개패듯이 맞았고 그걸 보고 소리지르는 여직원들에게도 몽둥이 세례는 가해졌다. "야. 이 새끼들아. 니네 죽고싶어? 대가 리 박아. 대가리 드는 새끼 다 뽀개 버릴꺼야 이 새끼야." "내가 니 새끼들 때문에 36층까지 걸어왔어" 등등과 함께 군화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남자들은 거의 개패듯이 됐고 우리는 흐느낄 수조차 없었다. 또 다시 몽둥이가 가해질까봐 . . .

한쪽 구석으로 몰린 상태에서 곁에 있던 여성동지에게도 군화발 세례와 몽둥이는 가해졌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등에 가방을 메고 있었기에 상처가 덜 났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많이 다친 사람도 속출했을 것이다. 하여튼 다른 ROOM에서도 진압이 끝났는지 오리걸음으로 큰 ROOM으로 이동했다. 그 사이에 복도에 쓰러져 피범벅이 되어있는 남성동지를 보았지만 손길조차 뻗어보지 못한채 몽둥이와 군화발에 의해 이동되었고 그 큰 ROOM에는 대부분이 여자들이었다.

그 중에 끼여있던 남자들은 무자비하게 끌려나갔고 욕은 계속되었다. 누군가 "허리 아프다"는 남자동지와 "임산부 있어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시끄러워. 이 새끼야."하며 "퍽!퍽!"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깐 후 기자들이 들어와 후레쉬가 터지며 바로 "술개 빠져·술개 빠져" "여자들은 때리지마!" "니네들 영창가고 싶어?"하는 소리(7시 40분경).

(술개부대에 상황을 인수받은 경찰임 : 편집자) 그 다음에 좀 나이든 목 소리의 남자가 "임산부 있으면 나오세요. 부상자 나오세요"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하며 존대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며, 그 놈들이 빠지면서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듯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아이씨. 이런 새끼들은 더 죽여놔야 되는데, 머리에 든 게 없어 이 지랄들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하는 생각과 함께 두 주먹 불끈 쥐었다. 그때 부턴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연속해서 터지는 카메라 후레쉬와 함께 여자들은 여경들에 의해 힘없이 이동되었고 그 여경들은 천사와도 같았다. 36층에서부터 줄지어 걸어내려오다. 중간 22층인가에서 내 앞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며 나부터 계속해서 걸어서 내려왔고 중간에 사복을 입은 기동대(?)인가 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올라오며 우릴 보고 또 욕설을 해냈다.

"얼굴 반반한 것들이 왜 지랄이야?" 등등 . . . 그리고는 1층으로 도착, 엄청난 전경들의 호위(?)를 받으며 닭장차 앞으로 갔고, 아마도 여자중에 제일 먼저였던 것 같다. 내가 탄 차는 끌려나온 우리 여자 7명이 합승했다(대략8시경). 차를 타고 그 분노로 떨며 밖을 쳐다보는데 호텔 주차장 화단 난간에 앉아 있던 사복의 남자 두명이 날 보며 했던 말, "저 고개 뻗뻗이 들고 가는거 봐!"

우리가 36층에서 "SOS"를 유리창에 쓰고 창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상대는. 시민도, 기자도 아닌 사복 경찰이었다.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하고 서러웠다. 그날의 기억은 내가 죽는날까지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기사 2면에서 이어짐

짜주던 남자 조합원에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몽둥이를 휘둘러 그 조합원이 몸을 비틀며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고 광주항쟁의 기억이 떠올랐다. (객실팀 프론트 담당 김희정)

36층을 진압한 경찰은 백남빌딩 쪽 비상사다리, 신관쪽 비상사다리와 36층에서 3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7시 45분경에 37층으로 진입했다. 37층은 특히 여성조합원이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이 펄 톰에 집결해 "공권력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 등을 부르고 있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시민을 의식해 자진 철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까지 버티보자고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본관 시설부 이우권)

37층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건너편에서 '상황 끝'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술개'라고 대답했다. 비상사다리 쪽에서 술개부대가 이미 대기중이었다. (고인수)

7시 45분경 방어벽이 무너지고 4-5미터 정도되는 불기둥이 앞으로 치솟았다. 경찰 2명이 뛰어들어오며 '대가리 쳐들면 찍어버려, 머리 쳐들면 눈알을 파버려'라는 욕을 하며 쇠파이프 지 곤봉인지로(머리를 못들어 군화발만 봤음) 고개숙인 머리위를 마구 훑었다. 또 밖에서는 남자 직원의 비명 소리가 연신 들렸다. 펄 톰 안에서는 군화발로 앞사람의 발을 차고 등을 밟았다. 아비규환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했다. (잠실 면세점 백윤희)

'37층 진압완료, 술개 빠져!'라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후인 8시경에 다른 전경이 들어와서 상황이 조금 진정됐다. 이에 한 직원이 너무 심한 폭력에 항의하는 투의 질문을 하자, 전경이 "우리가 때린 것 아닌데요"라고 존댓말로 말했다. (잠실 면세점 정향숙)

나년들 때문에 잠도 못자다. 집구석에 있지 왜 나와서 우리 고생 시키면서 지랄이나고 "씨발년들"하며 방패로 무조건 찍었다. (객실 관리과 신명숙)

"술개 철수해"라는 말이 들렸으며 기자가 들어와 후레쉬를 터트리며 현장을 찍기에 바빴고 한 부대원이 "그만해 기자들 들어왔잖아"하자 조금 진정되었다. (잠실 식음료부 김재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시설바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목사를 사칭하여 16년간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2번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해온 시설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지난 24일 천안경찰서는 '다니엘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6억 8천만원(최근 3년간 계좌추적 내역)의 후원금을 착복하고, 6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김만국(40세, 살뜰한가족선교회 대표) 원장을 긴급 구속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구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86년부터 충남 지역에서 '살뜰한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다 못한 여성 장애인

이 자원봉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김씨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그 장애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일삼다가 지난 90년과 91년 두 차례 구속되었다.

하지만, 김씨는 출소한 후에 똑같은 시설을 '다니엘의 집'으로 명칭만 바꾼 채 10년이나 운영해 왔다. 그리고 10년 전과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것이다.

또한, 김씨는 종종 장애인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가족과 교회신도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모집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천안경찰서 정시웅 경사는 "최근 3년간의 통장집계만 6억8천이고 현금으로 직접 전해준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7월 28일(금)

제 166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김만국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결론 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학교 박경석 교장도 "국가가 암묵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시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돼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폭력과 병역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전국의 교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후원금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명문)

### 민주노총 대 정부 총력투쟁 선포

지도부 전원 무기한 농성투쟁 돌입

27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서울역 광장에서 '공안탄압 종식을 위한 대 정부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단병호 위원장은 "노·사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부가 무력으로 개입해 사건을 확대시켰다"며 "최근의 공안탄압이 종식되지 않으면 필사투쟁의 각오로 강력한 대 정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포식 이후 서울역 광장에서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 지도부 전원 농성에 돌입했으며, 8월 7일부터는 1,300개 단위노조 대표자 전원이 결함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안에서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과 정부의 사과 △호텔롯데·사회보험 경찰병력 철수 △노사 실질교섭과 조속한 타결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명문)



# 손백도 마주쳐야, 사측은 어디 있느냐?

## 호텔 3사 순회 집회 '성실한 교섭' 촉구

50여일 동안의 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 특급 호텔 세 곳(스위스 그랜드, 힐튼, 롯데)의 노동 조합이 각 사업장을 차례로 돌며 연대집회를 가졌다.

27일 세 호텔을 순회하며 열린 호텔 3사 노조 주최 '장기 파업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노동 조합 결의 대회'에서 1천2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노사 간 자율 교섭 보장 △구속 동지 석방 △성실 교섭 이행 등을 촉구했다.

호텔 3사 노사는 지난 18일 경부터 일제히 교섭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타결을 이룬 사업장은 없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경우, 이성종 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호텔에 상주하고 있어서 이 위원장이 교섭장인 호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동성당에 피신해 있는 상태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 노조 유창목 회계감사실장은 "노조가 유니온 샵,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등 여러 가지를 양보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도 사측은 여전히 불성실한 교섭 자세로 임한다"며 "회사가 교섭을 통한 사업장 정상 확보는 외부 눈치보기, 노조 길들이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또 유 실장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인 임금을 두 달째 안 주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만 우리 권리를 찾는 싸움의 의지는 그로 인해 오히려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 사업장은 지난 6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봉사로 임여금 완전 지급 △적정 노동 인력 확보 등의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들어갔으나, 6월 29일

롯데의 폭력 진압 사태 후 노조 간부 5명이 구속되고 40여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 호텔 노조 이남경 사무국장은 "사측이 직원 신규 채용 광고를 할 뿐 더러 파업기간 중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교섭 위원 3인을 해고하는 등 비상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사측이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김종성 씨(21, 대학생)는 "특급 호텔의 파업을 생존 권의 문제가 아닌 '집단지주의'나 관광 산업의 침체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접근 방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대섭)

##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논의에 여성계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정감자, 여연), 새움터(회장 김현선) 등 8개 여성단체는 27일 서울 명동에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범죄와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연 등은 "한미주둔군지위 협상에서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을 요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예방 활동,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실질적인 직업재활교육 실시 등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김현선 새움터 회장은 "평화와 인권"의 시각에서 기지촌 문제를 봐야한다"고 강조하고 "혼혈아동의 보육 및 교육비 해결"도 촉구했다. (심보선)

### ■ 청소년 인권캠프 ■

- 때: 8월 8일(화)부터 2박 3일
- 곳: 경기도 대성리 늘푸른캠프장
- 인원: 선착순 30명
- 문의: 인권운동사랑방(741-5363)

###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 전쟁이 없어도 '대인지뢰'는 공격 중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연천 한탄강의 한 절기인 차탄천 변에 모형지뢰를 손에 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지역은 수해 때마다 유실된 대인지뢰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곳이다. 홍수시 유실되는 플라스틱 대인지뢰(M14)는 침탄 탐지기에 탐지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로서 사실상 방치되어 민간인의 피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시우(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집행위원, 지뢰피해 사진작가)씨는 "유실지뢰의 위험이 비단 그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라 좁게는 서해, 넓게는 한반도 전역일 수 있다"며 '대인지뢰유실실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이 연 이날 행사는 모형지뢰를 방류한 후 이를 발견하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대인지뢰의 유실범위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대인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고준진 씨가 활채어를 이끌고 자갈밭을 가로질러 모형지뢰를 감에 던지자 주위는 숙연해졌다.

방류실험 뒤에 이어진 '지뢰금지운동의 성과와 피해자 구원 대책' 토론회에서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씨는 "대인지뢰는 민간인 뿐 아니라 현역 군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북에게 군사적인 위협의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 군 당국의 대표로 참여한 김중해 소령은 "지뢰에 의한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군의 책임"이라며 "유실된 지뢰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파주시 장파리의 김동필(61)씨는 "군도 땅 주인도 나 몰라라하는 내 고통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며, 지뢰매설지역에서의 작업을 막으려면 확실하게 하고, 허가하려면 안전장치를 봐야지..."라고 한숨지었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대인지뢰에 의해 오른쪽 무릎을 절단 당한 후 시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양숙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7월 29일(토)

제 166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분쟁'으로 신음하는 말루쿠

### 평화는 멀리 있다, 국제사회 관심 절실

동티모르에 평화가 찾아온 지금 이와 밀지 않은 지역인 말루쿠 제도에서 또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 동부 말라카 해협에 있는 말루쿠 주(州)에서는 기독교도와 회교도의 충돌로 최근 18개월 동안 4천여 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6월 19일에는 단 한 마을에서만 1백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수많은 난민이 발생, 6월 30일에는 492명의 기독교도를 태운 피난선이 풍랑으로 침몰하기도 했다. 이 지역의 분쟁은 단순한 종교분쟁이 아니라 수하르토의 독재정치 아래 감추어져 있던 역사적인 적대감정이 현재의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정국과 맞물려 폭발한 것으로 기독교와 회교도를 불문하고 현재 약 5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다.

휴먼라이츠 위치는 난민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난민보호 대책 수립,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 확보, △폭력주도 책임자 처벌 등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국경없는 의사회'도 난민들의 의료시설이 아주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니 정부는 이미 사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지난 6월 26일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도교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으나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군이나 경찰도 폭력을 통제하기는커녕 각자의 종교에 따라 무기를 지원하고 교전에 참가하는 등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성전(聖戰)'을 외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회교도들도 사태를 점차 악화시키고

있다.

홍콩에 위치한 인권단체인 아시아 인권위원회는 최근 유엔에 평화사절단을 파견하여 양 세력의 협상을 추진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7월 24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을 와히드 대통령이 거절함으로써 말루쿠의 상황이 쉽게 호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료가 풍부한 말루쿠 제도는 약 5세기 전부터 유럽 세력이 밀려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도가 주류를 이루는 곳이 됐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회교도, 이 지역은 회교도 54%, 기독교 44%) 그러나 1998년 독재자 수하르토가 몰락하고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닥치면서 두 집단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종교 갈등 외에도 25년 전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의 통치 문제, 호주가 운영하는 금광의 이익 배분문제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젊은 실업자들은 폭력 사태에 쉽게 끌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화 행위가 자행될 때마다 상처 입은 쪽이 복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선)

## <논평>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

'유령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이 집은 독재와 인권유린의 망령이 지역주의를 재현하여 부활을 꿈꾸는 곳이다. 대동아공영을 꿈꾸던 일본군 장교였으며, 총칼로 민주의 싹을 밟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며, 3선 개헌과 유신으로 종신 집권을 꿈꾸다, 민었던 심복의 손에 비명횡사한 자를 '기념'하는 곳이다. 더구나 이 유령의 집을 짓는데는 '살아있는' 국민의 세금이 동원된다. 대지 5천 평, 건평 8백 평 규모에 7백억 원을 들여 기념할 만큼 이 유령의 존재는 대단한가 보다. 그것도 세계인이 지켜보는 월드컵에 맞춰서 완공하니 인권침해자를 떠받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선전하는 것과 다름없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의 인권침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잔혹한 인권침해 주모자가 그를 뒷받침했던 권력의 붕괴와 더불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구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힘의 과시는 '상식과 진실'에 대한 바람을 좌절시켜왔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소위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구세력과의 타협을 넘어 적극적인 사실 외교에 나서고 있다. 설사 전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끈질기고 강력한 구세력의 영향력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그들보다 한술 더 떠서 김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선 것은 구세력과의 타협을 넘어서서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 전대통령과의 화해는 나와 대구-경북인의 화해'라며 지역주의 망령을 꺼안은 김 대통령은 채워지지 않은 정의에 대한 갈망을 꺾어차 버렸다.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인권침해를 (부실당어리) 경제성장의 기여자라는 평가와 한데 저울질할 수 없다. 우리는 '때를 때려어도 밥은 쪼어요'라고 옛 주인을 그리워할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7월)

## 흐름과 쟁점

### 1. 아니 뎌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중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없었다 발표(7·6) 서울지법, 호텔롯데 CCTV 압수수색,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말한 테이프 44개중 28개만 압수(7·13) "호텔롯데 진압은 무법천지 그 자체", "임산부 있다고 하면 더 날뛰며 쇠파이프 휘둘렀다",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설문조사 결과(7·14) 호텔롯데 노조원, 이무영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지폭행' 혐의로 고소(7·14) MBC 정정보도, "경찰특공대는 통로개척만 했다. 임산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7·19) 호텔롯데 노조원 96명 솔개부대원의 폭행만행 증언, "임산부 있다고 확인은 커녕 막무가내로 쇠파이프를 머리위로 휘둘렀다", "뛰라고 함의하면 개패듯 뺐다"(7·21, 7·27)

### 2. 미국의 안락한 '소파'를 거부한다! SOFA 개정 요구 봇물

경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청구(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개정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7·21) 녹색연합 등 "환경오염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 등을 소파에 명시" 할 것 촉구(7·24) 여야 의원 48명, 독극물관련책임자 처벌 촉구(7·24) 미8군 사령관 대국민사과문 발표(7·24) 여성단체, 기존 여성 인권보호 등을 소파에 포함할 것 요구(7·27)

### 3.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민주화운동 제자리 찾기 시동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 "헌법의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 적용해야"(7·3)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의결(7·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렸다고 '편의제공' 황선동에 선고유예(7·20)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죽었다"(7·21)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선고, 사건발생 6년만에(7·24)

### 5. 집회·시위의 권리, 계속되는 수난

경찰청 홈페이지, 시위대에 도로사용료 부과 찬반조사, "돈내고 시위하세요"(현재 진행중) 남북장관급 회담 인근 집회신고에 "사회안녕질서에 위협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7) 민주노총 이의신청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 부담", 이의 신청 받아들여짐(7·28)

### 6. 역사를 우스개로!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청와대, 박정희 기념관을 상암동 '평화의 공원'내에 짓기로(7·19) '올바른 역사 만들기 시민단체 연석회의', "박정희 기념관은 말도 안된다" 입장 발표(7·24)

## 인권시평

- '행복한 왕자'와 에스키벨과... (강금실 변호사, 7·4)
- 정신(김규환 아웃사이더 주간, 7·11)
-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공선옥 소설가, 7·25)

## 논평

- 의사페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7·1)
- '강신욱 대법관 만들기'에 공모하는 그대들에게(7·8)
-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7·15)
-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7·22)
- 독재자의 집을 꿈꾸는가(7·29)

## 주요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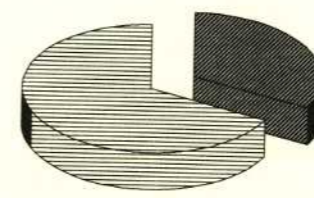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에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판결(7·6)
- 서울 형사합의 23부 김대희 판사,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19세)씨에게 선고 유예 처분(7·20)
- 서울고법 11 특별부,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해 5월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함주명 씨 등 3명에게는 기각결정(7·20)
-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 이재철 판사, 경성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6년만에 무죄 선고(7·24)

## 인권일지

1. 사회보험 노조 강제진압, 1천 6백여명 노조원 연행(7·1)
2. 국방부, 매항 2·3리와 인접한 육지 위의 기총사격장을 서해안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대지 폭격장인 농심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항리 대책발표로 반발 사(7·4)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7·8)
3. 국무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심의·의결(7·4)
4. 송두율 교수에게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강요, 33만의 귀국 좌절(7·4)
5. 97년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6.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추궁에 강신욱 검사 부인이 회피로 일관(7·7) 대법관 인준투표에서 결국 강신욱을 대법관으로 인준(7·10)
7. 경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를 경찰버스로 강제 연행해 집단 구타(7·10)
8. 개정협상안 시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계약안'으로 드러나(7·10)
9. 직장내 성희롱에 고통받던 호텔롯데 노조원 183명, 교육 및 예방활동 소홀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집단 민사소송 제기, 여성·노동계는 호텔롯데 사용자 고발(7·12)
10. 녹색연합, 주한미군이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 폭로(7·13)
11.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지폭행죄'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12.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에바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벌여(7·14)
13.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모임,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갖고 국보법 개폐 논의(7·18)
14. 경실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7·19)
15.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청와대에서 회의 갖고 박대통령 기념관을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건립기로(7·19)
16. 정보통신부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밀실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7·20)
17. 232개 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7·21)
18.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7·24)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통계로 보는 인권

자료 출처: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공동 조사 (2000년 7월 3일~5일 564건 분석)



무경험(67.64%)      경험(32.4%)

직장내에서의 폭언, 폭행 경험자 비율

## 만화사랑방

- 통큰 정치, 대화합 시대 그러나 준법서약서에 가로막힌 재독 송두율 교수(7·7)
- 대테러진압 경찰 노동자 감타(7·14)
- 미국식 생체실험, "과연 한국인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7·21)
- "농민살려"(7·28)

## 인권간행물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불안정노동연구(7·5)
-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7·12)
-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7·26)

폭언·폭행의 유형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반말	92.3%	93.9%
고성	70.8%	77.0%
욕설	33.8%	49.1%
협박성 발언	24.6%	32.7%
물건 던지기	15.4%	26.1%
몸의 일부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기	13.8%	21.2%
물리적 위협	13.8%	13.3%
따귀 때리기	3.1%	10.9%
발로 차기	1.5%	2.4%

# 인권하루소식

2000년 8월

(제 1667호 - 제 1687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일(화)

제 166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소파 개정’ 시능으로 봐줄 수 없다

###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8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회단체들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 의해 탄생된 소파의 개정을 위해 31일 명동성당에서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을 위한 범 종교인대회’가 대학로에서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이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을 보내는 팩스 시위를 벌였다.

또 김수환 추기경·윤공희 대주교·문정현 신부·김승훈 신부 등 242명의 사제와 손말복 수도사 등 74명, 오창래·이덕우 등 천주교 평신도 269명도 “동반자라는 한미관계에 걸맞게 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을 전면개정하고, 매항리 시위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이 함께 참가한 ‘범 종교인대회’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의 문정현 상임대표는 “지난 5월 8일 매항리 폭격 이후 소파 개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며 “이제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 모든 국민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문 상임대표는 “우리들이 이제는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한국이나 미국당국의 반격이 시작된다”며 “소파로 인해 눈물짓는 우리의 동포와 산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에서 요구한 소파 개정의 담겨할 주요내용으로는 △형사재판 관할권의 확대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환경침해 조사권 및 미군의 원상회복 의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임대기간 및 임

대료 설정 등이다.

국민행동은 다른 미군 주둔국의 형사 재판 관할권 행사 비율이 20-5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91년부터 97년까지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한국 관할하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강에 독극 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된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

는 조항(협정 제4조)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 나아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권과 미군의 환경오염 원상회복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여성단체들은 여성인권침해 금지 원칙의 채택을 요구하며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시 1.5배의 땅을 계약기간 없이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한미관계의 근본적 재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심보선)

집회·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말고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효신 정평위 간사는 “경찰측에서는 ‘형식적인거’라며 그냥 쓰라 해왔고, 시민사회단체 쪽은 집회무산을 걱정해 문제를 느끼면서도 그냥 써왔다”고 그간의 관행을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이 없는 권한을 가지고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경찰의 각서 제출 요구가 자의적이란 건 금세 또 한번 드러났다. 정평위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다음날인 28일 ‘각서를 쓰지 말고 집회신고만 받아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평위측은 31일 충북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용실태가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시 요구해온 ‘각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집회신고시 각서 제출 시비는 지난해 12월 전주와 서울에서도 발생해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거부운동에 나섰다. (류은숙)

###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산처럼 일어선다

민중의 벗, 서 로벨도 신부 추도식

국화 한 송이를 놓으려 줄지어선 이들 앞에 한 외국인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고 서 로벨도 신부의 영정이었다. 31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불과 몇 주전 매항리 철책 앞에서 함께 어깨를 걸었던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인기 어려운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장례미사 후 성당 들머리,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 '민중의 벗, 고 서 로벨도 신부 추도식'을 가졌다. 생전에 고인이 자주 찾았던 매항리의 주민들은 관광버스 4대를 타고 와 고인이 매항리 주민들의 든든한 벗이었음을 얘기했다.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다 한국 전경에게 불들려 내동댕이쳐지고, 매항리에 못 들어가게 막자 논두렁에서 전경과 엉겨붙어 '너죽고, 나죽자'며 끝내 원천봉쇄를 뚫고 나타난 당신을 기억한다'며 '당신의 나라 미국의 불의를 깨뜨리겠다'고 조사를 대신했다.

서경원 씨는 "당신은 70년대부터 군사독재 타도 투쟁에 한국민중과 함께 해왔다"고 회고했다. 12년 동안 고인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충남 당진에 사는 정영업 씨는 "신부님은 84년 외방선교회 지부장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나섰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게 읍지에서 행동했다.

장례미사와 추도식에 줄곧 참여한 회사원 임윤희 씨는 "30일 매항리에 갔다가 신부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주민들에게 그 분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며 "신부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실천하기 위해, 그분의 삶을 더 잘 알기 위해 추도식에 왔다"고 밝혔다. 임씨는 추도식 막바지에는 사회자가 외치는 구호를 자연스럽게 따라 외치기도 했다.

미대사관으로 가는 차안에서 전만규 위원장(매항리 미공군 사격장 철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은 "신부님은 매항리 주민들에게 구원자 같은 분이셨다. 매항리에 온 건 몇 번 안되지만 항상 소탈한 웃음으로 우리들을 편안하게 했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고 회고했다. 전 위원장은 "신부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은 매항리 사격장을 철책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 로벨도 신부가 8월에 들어가자 계획했던 매항리 농성에 진입했던 최종수 신부는 "논두렁이로, 개필로, 세 시간을 달려오던 당신, 당신이 태극기를 꽂고자 했던 농성에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깃발이 되어 산처럼 일어섰습니다"라고 그의 뜻을 기렸다.

고 서 로벨도 신부는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나 1964년 괄로반 외방선교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어 평생을 한국사람과 함께 했다. 1965년 전남 소록도, 함평에서 사제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 고통받 외방선교회 본부 한국지부장을 지내고, 1988년부터 작년까지 충남 당진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29일 직장암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심보선]

###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1. SOFA개정 협상 초읽기, '시늬'에 그치지 마라  
8월 2-3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을 앞두고 소파개정 요구 고조;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미군과 한국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7·25) 여성계,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 요구 시위(7·27) 소파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7·29)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팩스시위'(7·31)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범종교인대회, 김수환 추기경등이 참여한 '종교인 공동선언문' 채택(7·31)

2. 하늘과 땅의 근본, 농민이 죽어간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농민대회 열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방농정 철폐, 농·축산물 가격 보장, 농가 부채 해결' 등 촉구, 손수 킴운 농산물을 불태우는 농민의 분노와 경찰의 강경 진압 맞붙어 곳곳에서 마찰(7·25)

3. 집회·시위의 자유, 언제까지 찬밥?  
경찰청 사이트, '시위대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찬반조사 실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찰 폭력에 의해 구타당한 일요뉴스 김용덕 기자를 시위대가 구타한 것으로 표현된 사진과 글을 게재한 사이트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7·25) 남북 장관급 회담 장소 인근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주최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 진압 규탄시위'에 '사회안정질서에 위협초래'한다며 금지통고(7·26), 이에 민주노총 '국가대사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부담'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7·28) 충북 청주 지역에서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를 요구(7·31)

4. '성희롱' 호소를 희롱하지 마라  
롯데호텔 사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보고서'를 통해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다고 보고, 그러나 확인 결과 부서별로 한두 명을 뽑아 교육했으며 미참석자에 대한 대리서명을 하는 등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나(7·26)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여성·노동단체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항의 집회(7·2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일(수)

제 166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덥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상자 안 기사 참조>  
이 연구는 99년 7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를 앞세워 노동조건 개악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연구 결과는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주휴일 무급화 △탄력근로시간제 대폭 완화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는 장시간 노동의 해소라는 주5일 근무제 실시의의를 해치며 △현재 2주나 또는 한 달 단위로 운영되는 변형근로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늘린다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의 합법화가 우려되며 △주40시간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를 '단계적' 도입은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며 △주휴일 무급화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

했다. 덧붙여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2 국장은 "형식적으로 연구기관을 앞세워 제시됐지만 노동조건 개악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기현 '비정규직 노동센터 워킹보이스' 취재팀장은 "임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현재도 크게 주휴일 무급화를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사업단'의 윤애림 씨는 "월차·생리휴가 폐지 말고도 현재의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거의 1년 단위까지 가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사용자는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라 성토했다. (류은숙)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 모성보호와 직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임. 이 때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저하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존수당의 지급 또는 시간급 인상 등의 장치가 고려될 수 있음.
- 탄력근로시간제 대폭완화 - 주 40시간제로의 원만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 1일의 휴일은 매주 부여하면서, 나머지 1일의 주휴는 연간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에 따라 변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임.
-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 현재의 주44시간을 주 42시간을 거쳐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것(현행→격주도요휴무제→주휴2일제), 현행에서 주43시간, 주42시간, 주41시간, 주40시간제로 이행하는 방안(현행→4주5휴일제→4주6휴일제→4주7휴일제→주휴2일제)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이 짧은 업종과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하되, 먼저 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속보>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명은 31일과 1일, 이틀간 광주교도소 앞에서 징벌자에 대한 면회와 징벌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교도소 당국의 시설경비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농성단체에 마찰이 벌어진 와중에 1일 오후 5시경 경찰은 이전 장기수 강용주 씨의 어머니 조순선(75) 씨의 어깨를 진압봉으로 내리치고, 고귀담(민주노총 전남지부 대외협력부장) 씨의 허리를 2단 열차기로 가격, 실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일 밤 현재 광주 현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 또한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광주북부경찰서로 연행된 4명의 학생 중 2일 0시 30분 현재 2명은 풀려났고 2명은 수감돼 있다. (류은숙)

###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지난 5월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등을 내걸고 41개 지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다음 날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두 달이 넘게 체포영장 철회와 직권중재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차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위를 묻자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산업 노조는 정부가 가만히 놔두면 쟁의가 발생해도 잘 해결됐다. 왜 사용자가 고소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가?"

△직권중재 조항 때문에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 걸로 아는데...

=그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악법이다.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곧바로 불법파업이란 낙인이 찍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번 파업의 성과가 있었는가?

=IMF 체제이후 2년간 억눌려 왔던 보건의료 근로자의 요구를 모아 많은 병원지부에서 '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관철시켰다. 민주노총 사업장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부분의 경우가 보건의료노조다. 파업과정에서 노조원도 4천여 명이나 늘었다.

△발이 묶여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우선은 가족문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동료들을 만나러 일요일에 가족들이 온다. (차 위원장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지낸 기간은 2년여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같이 있던 동료에게 엉뚱한 농담을 던져 눈물을 흘리는 것은 피했다. 왔다 갔다 하던 동료들도 가족 이야기에 고개를 떨구었다)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물리적 제약이 따르니 아주 어렵다. 인천기독병원 지부에 현안이 있는데도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안타까

움도 있다. 각 지부를 돌며 고충을 듣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재폐업한다는데...

=우리들끼리 '머슴과 양반의 차이'라며 웃은 적 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폐업은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99년에 이미 의약분업안에 동의해 놓고 판소리를 하는 것으로 명분이 전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들이 응급실 철수할 때 '인간이길 포기한 집단' 등의 톤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타겟됐다고 하더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도 생명권을 담보로 한다고 하질 않는가?

=우리는 파업할 때 응급, 분만, 수술실의 기본인력을 배치한다.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병실도 최소한의 근무인원을 유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2층에 필요한 인원이 3명인데 비조합원이 1명이라면 자체적으로 근무표를 편성해서 2명의 조합원을 배치한다. 또 응급대기반도 운용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한다. 지시를 하는 의사가 폐업이라니, 응급실을 지킨다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보건의료 노조는 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의약분업을 지지했다. 우리나라의 폐니실린 내성률이 8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한다.

의약분업 실시를 적극 주장했었지만 우리도 고충이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 의원에서 일하는 1만여 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당장 위협받는다. 그동안 이 문제를 설득하는데도 아주 힘들었다.

△체포영장에 어떻게 대처 할건가?

=다른 동료들은 8-15를 전후하여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네 번째 감옥에 가야할 가능성도 있다. 위원장 임기가 막 시작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원하고 보건의료산업 노조위원장으로서는 감당해야 할 객관적인 임무가 있는 한 여기서 멈출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심보선]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주한미군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병사 납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한총련을 잠재적인 범죄단체로 취급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주둔 미군 병사들을 위해 발간되는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인용,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듣거나 한총련이 활동하는 지역을 혼자 여행하는 미군 병사가 유력한 납치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한국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인 박은혜 씨는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오�히려 한총련은 최근의 소파개정 등에 책이라도 잡힐까봐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차승렬 사무국장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한국민중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공박했다. 차 국장은 "한총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성조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오진아 간사는 "막연한 생각을 정보인 것처럼 포장해서 미군에 제공한 것이 한국 관계당국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족적 수치"라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미군에 팔아 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3일(목)

제 166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생생히 담은 필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일 새벽 4시 호텔 2층 1차 진압과정에서부터 오전 7시경 36, 37층 진압까지의 과정을 담은 약 1시간 분량의 컷을 단독 촬영한 장본인은 YTN 영상 취재부 한원상 기자. 한 기사는 36층 진압 작전이 전개될 때 중앙 비상계단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 앞에 대기하다, 7시경 흰 헬멧을 쓰고 사복을 착용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같이 진압해 초동진압 과정을 생생히 찍을 수 있었다.

한 기사는 경찰의 진압과정이 "한마디로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잘라 말했다. 일반 시위 진압과는 그 양태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진압 부대는 육설을 퍼붓고 끈봉으로 치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남자 노조원을 먼저 구타했으며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가차없는 폭력이 쏟아졌다. 조합원들은 넘어지고 실신한 사람도 있었다. 카메라 앵글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는 증언한다. 한 기자의 이런 증언은 진압 시점, 진압부대, 진압 양상에서 롯데호텔 조합원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인권하루소식 7월 21, 27일자 참조>

그는 촬영 직후 편집 기자에게 필름을 넘겼으며 편집된 필름은 YTN 오전 9시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녹화본은 MBC에 넘어가 밤 9시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한 기사는 "또 다른 녹화본이 AP 통신에 있으며, 그것이 일본에서 방송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3일자 '미디어 오늘'은

YTN 9시 뉴스 화면이 11시 이후 뉴스에서는 다르게 편집된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원상 기자가 촬영 직후 일본으로 급히 떠난 사실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YTN 노동조합 이재철 위원장은 YTN이 "알아서 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한 기사가 출국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촬영을 마치다보니 자신이 편집하지 못하고 다른 편집기자에게 필름을 넘기고 일본으로 떠났으며 필름을 넘겨받은 편집기자가 1차로 편

##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올린 글에서 롯데호텔노조원에 대한 폭행을 일부 시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글은 위 홈페이지에 지난달 10일 등록된(담당: 경비1과)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장문의 글 중 <과잉·폭력진압 여부>라는 부분. 경찰청은 이 글에서 "다만 진압중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집한 것이 YTN 오전 9시 화면이었다. 그런데, 백선기 편집팀장이 "경찰의 폭력성을 지나치게 부각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영상 담당국장에게 보고했고, 국장은 백 팀장의 의견대로 '문제부분'을 대폭 삭제해 11시 이후 뉴스에 내보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4일 롯데호텔 노동조합은 이무영 경찰청장과 현장지휘관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사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광길]

바..."라고 분명히 폭력행위를 시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과거 대부분의 경찰폭력 관련 사건들은 가해자인 경찰이 고발되어도 결국 검찰에 의해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스스로 일부 폭력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무혐의처리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이 같은 글에서 "...행위자는 징계조치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폭행을 한 경찰관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 △감독자의 신원과 지휘책임 주공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보영]

#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 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 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한 집

회에 대해 '외국공관앞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했다. 또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열리기로 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했다.

### 행사와 동정

#### □ 소파 전면개정 촉구 캠페인

- 때: 8월 3일(목) 오후 2시 · 곳: 종로 YMCA 앞
- 주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문의: 차승렬 011-893-4811)
- 한미 당국 간 소파개정협상이 재개됐지만, 정부와 미국은 기만적인 협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3일은 협상 마지막 날로 의제에서 제외된 임대기한 설정, 기지사용료 징수, 미군기지 공여·반환 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 국민의 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 □ 제340회 민가협 목요집회 -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때: 8월 3일(목) 오후 2시 · 곳: 종로 탑골공원
- 내용: 1. 노동자 석방 촉구 및 롯데호텔 등 노동탄압 규탄 연설  
2. 정치수배자 가족 발원  
3. 한총련 학생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화공연

#### □ 비정규직 철폐와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대회

- 때: 8월 3일(목) 오후 2시
- 곳: 서울 노동청 앞(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대위

#### □ 울산 핵발전소 반대 캠페인

- 때: 8월 3일(목) 오전 11시 30분 · 곳: 명동 조흥은행 앞
- 산업자원부가 울주군을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함에 따라 울주군 주민과 반핵단체들이 반대투쟁 돌입. 한국반핵연대 소속 단체들 주관

#### □ 공안탄압 분쇄 및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 때: 8월 5일(토) 오후 3시
- 곳: 서울역(집회 후 명동성당으로 행진)
- 주최: 민주노총

#### □ 전국 여교사 성평등 교육 연수

- 때: 8월 7일(월) 오후 1시 - 9일(수) 낮 12시
- 곳: 속리산 수정청소년수련원(043-543-3701)
- 참가인원: 교사 150명, 어린이 130명(선착순)
- 주최: 전교조 여성위원회(담당: 백영애 675-6181)

#### □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전북지역 각계각층선언 기자회견

- 때: 8월 10일(목) 오전 11시 · 곳: 전북도청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이 2일 사직공원과 의주로 공원 앞에서 각각 열기로 한 집회도 위의 민주노총과 동일한 이유로 '금지'됐다. 경찰은 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의 3일 집회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회안녕질서를 위협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같은 집회금지통고를 자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2일 접수시킨 네 건의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한 건에 대해서만 '사회안녕 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한 반면, 다른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남북 장관급 회담 장소인 신라호텔 인근 집회의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금지'를 철회했다"며 경찰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농의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폭력시위 전력 등을 내세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약자나 민중단체를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보선)

### ●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월 20일자 '소파협정 35년, 최초의 헌법소원'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1998년 8월에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4일(금)

제 167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는 33명이며, 이 중에 최근 호텔롯데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정주억(호텔롯데 노조위원장), 김한상(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 구성된 제8기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만도 김은정(효성가톨릭대) 씨 등 16명에 이르고 있다. 4백50여 명에 이르는 현재의 한총련 대의원들이 언제까지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1백25명의 양심수 가운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석치순(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박경순(영남유원회 사건) 씨 등 30명이다.

그런데 이번 8·15 사면 논의 속에서 95명의 미결 양심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결 양심수 가운데엔 최근 매항리 사격장 폐쇄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업 예비대학생 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치수배자는 진재영(전남대)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수배된 15명, 김복기(한양대) 씨 등 현 정권 시절의 수배자 90여 명 등 모두 1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송두율, 정경모 씨 등 해외 체류중인 인사들의 입국이 허용될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민가협의 송소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사람들로 볼 수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문 간사도 "조총련 인사들 역시 이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민족 화해를 위해 해외에 있는 망명인사들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사회 정의와 국민통합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사면·복권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사면·복권은 수감된 양심수와 공민권을 제약받는 1백93명의 미사면복권자, 참살당한 감옥을 살아야하는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 "집회 참가할 교통비조차 없다"

### 터전 잃고 떠도는 노동자들

3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노동청 앞. '비정규직 철폐와 파업투쟁 승리'의 목소리가 드높다.

지난 6월 16일부터 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노조(위원장 배재석)의 한 조합원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93년 노조 출범 이후 회사측은 단 한번도 우리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조합을 해칠 궁리만 했다." 이랜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소박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50만원을 72만원으로 인상! 파견근로자 직접채용!"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침통하게 설명한다. "촬영보조나 운전직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KBS는 운전직을 채용할 때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찰'을 한다. 차량과 기사를 함께 묶어 입찰한다. 우리 물건이다"며 허탈하게 웃는다. 주 위원장은 "이중과견이란 게 있다. 인원과견회사가 렌트카 회사에 인원을 대면 렌트카 회사는 이 인원을 방송사에 대는 거다. 방송사는 저임금이어서 좋고 파견회사들은 소개비를 뜯고 공룡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 꼴이다. 힘든 거?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동지를 보는 거다."

6월 26일 부도 처리된 (주)마마의 노동조합(위원장 신상아)은 계약만료로 철거가 시작된 공장 건물을 지키며 투쟁을 해오고 있다고. 김정민 조직부장은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교통비가 없어 집회에 못 오는 이들도 있다"며 얼굴을 돌렸다.

생존 터전이 무너져 거리를 헤매야하는 노동자, 방관하는 노동부, 노동청 건물을 지키느라 로비에서 '농성'중인 어린 전의경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5개월 된 이 나라의 하루다. (이광길)

###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강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노조원 모두가 상경해 행정·공간기 관의 탄압을 견디며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가 있다. (주)새한 구미공장 노동조합. 그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회사의 부실경영을 고발하고 광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주)새한(대표이사 최정덕)은 72년 삼성그룹의 모체인 제일합섬으로 출발하여 95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독립, 폴리에스터 원사와 원면, 필름을 만들어온 회사다. (주)새한은 지난 99년 11월 부채를 2백억원 대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으로 구미2공장을 일본의 '도레이'사에 매각, 6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했지만 결국 1조6천억원 대의 부채만을 짊어진 채 지난 6월 2일 위크아웃 관정을 받았다.

회사측은 부실경영의 결과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노조결성 움직임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회사는 경영난을 핑계로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다. 이에 지난 5월 노조원 4백여 명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인정 △회사의 투병경영과 부실경영 책

입자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결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95년 이미 노조가 인가를 받아 활동을 해온 상태"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7월 6일에는 전기봉과 가스총으로 무장한 용역강패까지 동원해가며 노조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십수 명이 전기봉과 가스총에 나가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현장에서 이를 방관만 하던 경찰은 오히려 노조 지도부 4명을 연행해 그 중 2명을 업무방해와 폭행혐의로 구속했다.

#### 악랄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주)새한 노조 오제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회사측이 말하는 소위 '노동조합'이라는 게 사무실은커녕 노조설립 후 단 한 번의 외부행사나 총회도 갖지 않은 유령노조라고 한다. 그는 "95년 당시 구청은 이 노조가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노조를 받아들였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한국노총에 가입도 하지 않은 '유령'임이 드러났다"며 기자에게 한국노총 섬유

노련이 보내온 확인서까지 보여준다.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회사측의 수법은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 민주노조는 지난 6월 구미공장 한 간부의 일기장을 입수한 일이 있었다. 그 일기장으로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폭력을 유도한 후 경찰병력을 요청해 농성을 해산시킨다는 시나리오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한다. 실제로 기자가 확인한 이 간부의 수첩에는 민주노조의 농성이 시작된 후 회사측의 노조파괴지침이 날짜별로 세밀하게 적혀 있었으며, 심지어 7월 10일을 농성장 침탈의 'TARGET-DAY'로 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유승진 노조 조사·통계부장은 "이 수첩이 폭로되자 그들은 7월 6일로 날짜를 바꾸어 농성장을 침탈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한다.

7월 15일에는 본사직원과 용역강패들이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미행하다 덤미가 잡혔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승용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조합원을 본네트에 매단 채 대낮에 시속 80km로 15킬로미터나 질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조 사람들은 "회사측이 만든 유령노조는 새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해 왔고,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새한이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입을 딱 다문 그들의 표정에는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기병문)

#### ◎ 바로잡습니다.

<본지> 8월 3일자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기사와 관련, 한원상 기자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 직후 일본으로 급히 떠난 사실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YTN 노동조합 이재철 위원장은 "YTN이 알아서 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의 부분은 한 기자가 모종의 압력을 받아 일본으로 간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한 기자가 호텔 롯데 파업을 취재하기 전에 이미 일본 방문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5일(토)

제 167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전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시위' 항목에는 전국에서 집회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자체 파악한 집회·시위 내용이 지난 2일부터 날마다 등록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적인 규모로 그날의 집회 명, 주최, 시간, 장소가 소개돼 있다. 각각의 집회마다 '신고/미신고, 금지통고, 옥내' 등을 표시하는 비교란이 있다.

이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SOFA개정국민행동)에서 신고한 집회는 3일 연속 '금지통고'라고 표시돼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의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는 '외국공관 앞 1백 미터 이내장소, 주요도로 인근'이라는 이유로 금지됐다. 미대사관에서 '열린 시민공원' 정문까지는 88미터다. 경찰은 "정문에서 12미터 안쪽에서 집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의에 "공원은 한필지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고 주최측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동안 신라호텔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용섭)은 지난 2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4·29 노동절 집회 등에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 협박과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며, 사회안정질서를 위

협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재결정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전실장은 "이런 이유로 집회금지를 낱발하면 민주노총, 전농 등은 집회라는 형태의 의사표현의 길이 영원히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대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제'임을 드러내는 셈"이라고 할애했다.

한편 경찰청 정보3과의 한 관계자는 "금지 통고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절차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이러쿵저러쿵 하지마라"고 강변했다. (심보선)

###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올해도 '대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하니 사면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만명 사면·복권'이 우리에게 조금도 감격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사면 불감증'인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사면'은 언제나 정치놀음판의 한낱 정략에 지나지 않았고 '대사면' 뒤에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되쳐야 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법무부 장관의 사면·복권 건의도 과거의 어느 사면·복권과 다르지 않은 일관된 원칙이 관철되어 있다. 즉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이 그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김현철, 한보·청구비리의 홍인길,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정치꾼이란 정치꾼은 모조리 다 사면·복권시켰다는 것이다.

반면에 7월 26일 현재 우리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125명의 양심수 중 95명이나 되는 미결수들은 전혀 법무부 장관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400명을 훨씬 넘는다고 평가되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방안은 흔적조차 없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 말대로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 가능했던 미결수나 수배자 사면이 왜 지금은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과거 정치인들은 무슨 연례행사라도 처드듯이 해마다 "대사면"을 되쳐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기들의 '공범'을 슬며시 '양심수 사면'에 끼워 넣곤 했다. 요란스럽게 '국민 대화합'을 떠들어봤자 언제나 사면 뒤에 '대화합'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국민 대화합'은 정치인의 잔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현장을 특공대 투입으로 무지막지하게 유린하면서 도대체 무슨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언제나 정치놀음판의 정략으로서 남발되는 이런 더러운 현실에서 우리는 한번쯤은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대대적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유엔은 최근 수년간 '무력분쟁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보완하는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1일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편집자 주>

아동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의 주요 피해자이다. 2천1백만 명의 국제난민 중 절반이 아동이며, 국내유민 중 아동수도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현재 약 3십만의 18세 이하 소년병이 존재하며, 해마다 약 1만여 명의 아동이 지뢰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2백만 명의 아동이 전쟁으로 사망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새로운 전쟁 수단이 되어버린 강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에이즈 등의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가치관과 법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아동은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올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18세 미만에 대한 강제 징용 금지, 지원병의 경우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전(前) 소년병에 대한 갱생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하루 빨리 이 의정서를 비준하고, 안보리는 무력분쟁 주체들이 이 의정서의 기준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국제 민간단체(NGO), 시민 사회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아동보호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 - 지역 및 국제 NGO,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사 등이 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의무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 - 유엔 회원국은 무력분쟁 세력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때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여론을 통해 분쟁세력의 정통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3. 인도적 지원이 아동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아동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무기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
5. 지뢰 문제 - 회원국은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속히 서명해야 하며 지뢰 제거 작업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뢰주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6. 이라크나 세르비아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국제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가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아동 난민의 보호 -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난민의 경우 성병과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원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8. 여자 아동의 특수성 - 여아들은 전쟁 중 강간과 강제매춘의 대상이 된다. 전쟁 후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범죄가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전쟁 중 많은 여아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는데, 이들은 교육, 재산권, 직업교육과 취업기회 등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9. 소년병 - 징용병들은 대개 농촌 출신의 가난한 문맹자들이다. 지원병의 경우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전쟁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므로 충분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병의 사회 재적응은 전후

무장해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0. 교육과 청소년 - 꾸준한 교육 활동은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혼란한 상황의 아동들에게 많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지원병 모집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치성을 지닌 역사교육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분쟁 상황의 교육은 주로 청소년보다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집안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평화유지활동과 아동 보호

- 평화협정체결 당시부터 아동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쟁범죄는 전후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쟁 범죄로 기소된 많은 소년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범죄 연령 이하의 소년병들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무력분쟁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젊은 세대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국가적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국가재건과정에서 아동 문제는 처음부터 중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소년병 무장해제, 아동 난민과 가족의 재결합, 지뢰 교육, 신체적, 정신적(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활 교육 등이다.

- 정신적, 사회적 치료는 무엇보다 공동체에 기반해야 하며 지역 현실에 부합하게 시행해야 한다.

유엔은 아동의 보호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됨을 확인한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불평등의 축소, 빈곤의 추방, 다양성의 인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번역·정리: 김민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8일(화)

제 167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시면 요구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새 밀레니엄 첫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복권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보 국민연대는 양심수 125명, 정치수배자 500여명 중 192명 그리고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귀국제한자' 21명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양심수 전면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철폐를 요구했다. 국보 국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낸 '정치범은 한명도 없다'는 서한과 언론에 발표한 '감옥에 있는 시국·공안사범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박하는 한편 "화해와 통일의 징표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 서라도" 500명을 헤아리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전면적 수배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러 제약 때문에 자유로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독일 뮌스터대학교 송두울 교수를 비롯한 '귀국 제한자'의 문제와 관련 "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적·법적 제약을 풀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보 국민연대가 제시한 세 가지 요구는 지난 2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면·복권 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이어서 앞으로 '사면·복권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된다. (심태섭)

####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 충북 경찰청, "법적근거 없다" 시인

집회 신고시 각서를 요구해왔던 경찰이 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충북 지방경찰청(청장 박봉태)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집회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충북 지방경찰청에서는 향후 집회 신고시 '각서'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표명은 지난 7월 31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청주 정평위)를 비롯한 3개 인권·사회단체가 제출한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요구에 대한 공개요구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충북 지방경찰청은 각 일선 경찰서에 '각서'를 받지 말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정평위 이효신 간사는 "집회시 제출해왔던 각서가 경찰의 자의적 인권침해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일자> (기명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뚝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경찰관들이 한총련 대의원인 단국대생 4명을 검거하기 위해 같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경, 서충련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시내 버스로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학생들이 학교 후문에 이르자 주변에 잠복해 있던 용산 경찰서 소속 전경 1개 중대와 사복 경찰 10여명이 이들을 덮쳤다. (심태섭)

경찰은 버스에 내리는 학생들은 물론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학생처럼 보이거나 하면 무조건 구타하고 끌어냈다.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현장에서 한총련 대의원의 4명의 얼굴을 확인한 경찰은 바로 이들을 호송차에 태웠으며 이 외에도 격렬하게 항의했다가 수갑이 채워진 최강호(법학과 4) 씨와 버스 앞을 가로막은 다른 학생 두 사람을 용산 경찰서로 연행했다. "영장 제시를 수십 회도 더 요구했지만 '개새끼야 그런 거 없어'라는 욕설과 함께 곤봉·주먹세레가 돌아올 뿐이었다"는 것이 연행됐다 바로 풀려난 3명 중 한 명인 정찬우(법학과 4) 씨의 증언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까지 연행됐던 학생 7명은 형사교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 경찰서 보안 2계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로 집행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14~16일

휴가로 쉽니다.



인권 시평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이제훈 (한겨레 기자)

9월초면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전원이 조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 보도를 받고 있는 일선기자(전 통일부 출입 기자입니다)로서, 그 많은 할아버지들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사실을 앞에 두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놀랍기도 하구요. 한때 수백 명을 헤아리던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은 80여명. 이들의 압도적 다수가 '자의에 의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피붙이. 50년 안팎을 헤어져 지낸, 기억도 희미한 처자식들을 만나러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북쪽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닮고 닮도록 거듭 읽고, 듣고, 보며 눈물짓는 할아버지들을 보노라면 가슴에 멍울이 지는지 답답해집니다(할아버지들의 회한과 달리, 솔직히 전 북쪽 가족들의 편지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공식성'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이태 올로지적 편견일까요?). 왜 그리 오랜 세월동안 피붙이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미친 세월이 한탄스럽습니다.

신인영 할아버지(72)는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32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신 노모 고봉희(93) 할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군요. 송환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바람에 고 할머니는 아들을 따라 북에 가실 수 없다는군요. 또 다른 이별은 많은 것을 생각해 합니다.

남쪽에 남기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수 출신인 김선명 할아버지는 남기로 하셨습니다. 안학섭 할아버지(70)는 7월1일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결혼은 남쪽에 남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안 할아버지는 그러시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고 싶다'고. '빨갱이 가족'으로 몰리는 게 힘겨워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오랜 감옥생활과 비전향이 양심에 따른 것임을 몸으로 다시 보여줘 화해하고 싶다는 뜻 같습니다.

떠나는 분이나 남는 분이나 입을 모아 '조국통일'을 되뇌시더군요. 함세환 할아버지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라고 힘줘 말씀하시는데... 미혹한 닳인지 전 '통일'이란 말에 별 실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공존에 대한 갈망이 크죠. 통일이란 '더 나은 삶'을 위한 합치기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친 마녀사냥을 잠재울 평화공존의 시간 없이 어느 날 합치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할아버지들의 선택이 오랜 적대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화해의 훈풍이 되리라 믿습니다. 북에 가시는 할아버지들이 마음 고생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조국'이 할아버지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괴로워 하시기엔 그동안 고통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7일)

1. '소파' 개정 협상,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8·2)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등을 내용으로 한 소파 개정협상 결과 공동발표하고 앞으로 '두달 내 조속한 일차'에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열기로(8·3) 시민사회단체, 소파 개정협상 결과를 두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애초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8·4)

2. 다시 돌아온 '사면'의 계절, 권력자들 웃음꽃 만발  
정부가 8·15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현철씨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권력형 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95명의 미결 양심수와 1백여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최소한의 정치범 사면, 최대한의 정치꾼 사면' 재연(8·2)

3. 교수들의 외침, '박정희 기념관을 중단하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 기자회견 갖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 중단을 위한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혀(8·3)

4. 지식인 선언, '조선일보에 상대 안한다'  
강대희, 김동춘 교수 등 153명,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지고,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교묘한 왜곡보도와 문화패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조선일보에서 요청하는 모든 기고와 인터뷰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혀(8·7)

5. 양민학살 진상규명, '국회는 구경만 하느냐'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문경양민학살피해자유족회 등, "국회가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가능하게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위헌적 입법부작위 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혀(8·3)

6. 롯데 폭력 진압, 그냥 덮을 수 없다  
6월 29일 롯데호텔 파업 진압 현장을 YTN 한원상 기자가 단독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한 기사는 경찰의 진압과정이 "공포의 도가니"였다고 밝혀(8·2)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무영 경찰장장 등을 직권남용, 독지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9일(수)

제 167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 여사가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동티모르, 몽고, 한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그의 주된 목적은 지금 몽고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회의원의 국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데 있으며 한국 방문은 "통상적인 상황점검"이라는 것이 서울에 주재하는 유엔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의 한국 방문은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숨돌릴 새도 없이 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을 갖는다. 그의 주 관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그리고 △탈북 난민문제이며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이미

면담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유엔 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들과 법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의 갈등의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경색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이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 혹은 (단계적) 폐지를 권고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그가 이번 방문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얼마만큼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느냐에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탈북 난민 지원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인 10일 저녁에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1일 아침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을 만난 후 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할 민간단체 대표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최영도(민변 전 회장), 궤노현(방송대 교수),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 ▷국가보안법 관련  
임기람(민가협 상임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 ▷중군위안부 관련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탈북 난민 관련  
김상철(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본부장), 조안 리(같은 단체 국제협력위원장), 에리카 강(좋은 벗들), 김하연(북한인권시민연합), 김상현(국제인권자원봉사자)

▶ 해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신설되었다. 사무총장 바로 아래 직책으로서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진다. 유엔 인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하면서 모든 정부와의 대화, 국제협력 향상 등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메리 로빈슨 여사는 아일랜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97년 6월 제2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취임했다.

[심보선]

"장애인 교육에 불씨가 되자" 일곱들 맞은 '노들 장애인 야학'

8일 오후 6시,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 3층에 터를 잡은 '노들 장애인 야학(교장 박경석)'이 일곱 번째 개교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노들 야학은 93년 8월 8일 문을 연 후 열악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날 행사에선 각 동아리별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시 낭송을 하는 데도 음향 조절하는 데도 몇 명의 품이 들어간다. 혼자서 안되면 둘이서 그래도 안되면 셋이서 보조를 맞추느라 시간은 허영없이 간다. 인권 동아리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보다 더 오래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관중들의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라"는 아우성을 애교로 받아넘기기도. 이에 대해 박경석 교장은 "우린 배우면서 공연합니다"고 웃으며 말한다. 야학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인터뷰를 담은 자체 제작 비디오를 보던 참석자들은 간간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그간 걸은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박 교장은 "지체장애아동이나 청·시각 장애아동의 경우 보도 불력이나 점자판, 보청기 등 교육시설과 기자제만 갖추면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일에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는 게 노들 식구들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광길]

###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광복절을 일주일 남겨놓은 명동성당 들머리, 불별 더위 아래 수배자들의 농성 천막이 줄지어 서있다. 언뜻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드러내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곳은 잡히지 않으려는 자와 잡고자 하는 자들의 열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안타까운 명동성당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주 법무부는 8·15 사면·복권 계획을 보고하면서 수배자와 미결수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빼놓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늘 명동성당의 수배자들은 실랑이를 감추지 못한다.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끊임 없이 발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수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은 꼭 정치 수배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도, 지금 정부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사안을 꼭 쟁점화 할 겁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배 생활 4년, 명동 농성 82일째를 보내고 있는 유영업(전 한총련 의장 대행) 씨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전화를 길게 할 수도,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는 고통은 차라리 낫잖아요. 하지만, 알고 있던 사람조차 모르는 처해야하며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하는 괴로움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애써 수배 생활의 아픔을 태연하게 말하는 그다. 유씨는 7월부터 사회 각계 인사·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달픈 수배 생활을 끝내기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유씨와 이웃하여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수배자들도 있다.

"저희 조합의 수배자들은 전부 여성인데 지금 가정들이 모두 엉망이에요. 시어머니와 어머니들이 그 집에 와서 살림을 하는 실정이나..." 말끝을 흐리는 사람은 농성에 돌입한 지 68일 제가 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다.

"정말 경제법들과 선거법들 만을 풀어주고 여기 사람들은 그냥 둔다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리도 화가 난 차 위원장이 6명의 동료 수배자들과 함께 당국에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날이다.

현재 명동성당에는 33여명에 달하는 학생, 노동자, 농민 수배자들이 있어, 마치 수배자 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사면 계획 발표 후, 민주노총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 단체들은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를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광복절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명동성당 사람들은 '국민의 정부'가 과연 어떠한 답안지를 내놓지 궁금해한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14~16일 휴가로 쉽니다.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거듭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정정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이 기존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라고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면서, 다만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나아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복수노조의 설립이 유예된 노조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건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고, 위 조항을 둔 취지가 구 노조법(법률 제3925호) 제13조 제1항이 단위노조의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하는 것으로 강제한 이래 기업별 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은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위 조항이 일정기간 그 설립을 유예하고 있는 복수노조는 기업별단위노조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건대, 항운노조가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님에 앞서 본 바이고, 항운노조가 회사에 설치한 우암연락소 역시 노조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점, 위 연락소의 장의 임명은 항운노조위원장이 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 협약 및 노사협의 회의 대표자는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회사에는 현재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하역노조나 그 우암터미널지부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일정기간 설립을 제한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0일(목)

제 167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롯데 성희롱 집단 손해소송

노조원 270명, 회사·경영진·상습 성희롱자 대상

호텔롯데 노동조합 성희롱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자, 공향면세점 근무) 소속 김윤희 노조원 등 270명은 성희롱을 묵인하고 방관한 (주)호텔롯데 및 장성원, 신격호, 김병일, 오용환 대표이사,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가해자 김세훈 이사 등 12명을 상대로 17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호텔롯데는 △소수의 남성근로자들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여성근로자들을 단순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만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성희롱이 한번도 제지되지 않았으며 △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노조원들은 또 △오랫동안 성희롱을 당해온 점 △성희롱 분위기의 만연으로 근무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점 △지위 및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성희롱을 해 심한 좌절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점 △성희롱을 피하여 직장을 옮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만드는 등 원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점등을 들어 근원적인 인격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원들은 "지난 5월 파업에 들어가서야 개인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가 모아졌고,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가 경찰이 강제 진압한 6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점"등을 들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조원들은 소장에서 "남성들이 호의라는 너울을 쓰고 관행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성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편견으로 여성에게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여성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고 있다"며 "굴종을 감내하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불어 있어야만 하는 오욕의 장이 되었다"고 성희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장에는 448건의 성희롱 사례들이 적시되어 있으며, 피고 외에도 94명의 성희롱 가해자의 이름도 거론돼 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 9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호텔롯데노조 성희롱 대책위원회'(위원장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는 "진정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제대로 옹호하고 있는가?"라는 경고를 민주노총에게 보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성희롱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정강자) 등 6개 여성단체도 9일 △소송을 제기한 270명의 노동자들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 것 △호텔롯데의 경영진은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중징계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호텔롯데 측은 "임단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같다"며,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검토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들의 권리 찾기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내 학원강사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모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뒀다.

문제는 고용단계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맺다보니 나중에 월급을 저계 주거나 갑작스레 해고하는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설사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학원에 대한 강사의 의무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한 씨는 "하지만 무엇보다 속상할 땐 사전에 아무런 말없이 시간표를 바꾼다거나 보충수업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경우"라고 털어놓았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의 시험기간 때면 아무런 대기없이 두 배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은 그룹의 딱일 뿐이다. 하지만 학원장의 눈밖에 나면 곧 '짜리기' 때문에 학원을 나갈 각오 없이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란 무척 어렵다.

현재 학원강사모임은 강사들의 법적 권리를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모임의 간사인 이인숙 씨는 "모임의 문은 열려있으니 다른 학원강사들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735-7883) (이주영)

#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다름 아니라며 철저히 요구 성명을 내면서 경찰청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계획에 대한 의문이 불거졌었다.

당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의 △사업계획서 △기안서 △검토보고서 △예산신청서 및 결재문서에 관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려진 경찰청 화신(7월 13일자)에 따르면 "기술검토 및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기안서 및 계획서, 기타 보고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해 드릴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 2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업 기안서도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 224+'의 홍석만 씨는 "지문 및 사진 조회를 계획하고 검토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권위적인 관료들의 반인권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공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7일 조선일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휴대전화에 지문조회 기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에게는 "수배자·수배차량 무전 조회기를 휴대전화로 바꾸기만 할거다, 지문이나 사진 감식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이런 상황이므로 '전산 처리된 지문과 사진에 대한 조회와 감식이 목적이 아니라면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류은숙)

### 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4주년 기념식
  - 때: 8월 12일(토) 오후 5시 · 곳: 종로 5가 기독교회관
  - 주최: 유가협(문의: 02-764-1684)
- 전태일 평전 감상문 모집
  - 때: 9월 30일까지 · 모집대상: 제한없음
  - 응모요령: 원고매수 제한 없음, 자기소개서 동봉
  - 발표 및 시상: 개별통보, 2000년 11월(상금 및 상패)
  - 보낼 곳: 종로구 창신 2동 131-106 전태일기념사업회 (통신접수: jti98@nownuri.net /문의: 02-3672-4138)

##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어느 해보다 각별한 8·15가 돌아왔지만 일제가 저지른 인권침해의 상흔은 여전히 짙다.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정대협)는 9일, 일본 대사관이 위치한 교보빌딩 앞에서 '8·15기념 422차 특별 수요시위'를 갖고 '2000년 국제법정'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정대협 정은경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422차 수요시위를 맞은 감회는

9년 세월 흔들림 없이 이어왔다는 점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회수가 더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 ▲할머니들의 근황은

벌써 할머니 50분이 세상을 뜨셨고, 남아계신 분들도 쇠약해서서 집회 참가도 줄고, 오셔도 힘들어하십니다.

### ▲이 운동의 전환점을 든다면

무엇보다 97년에 작고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다. 김 할머니의 증언이 도화선이 되어 1백여명이 넘는 분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바로 이분들에 의해 92년 수요시위가 꾸러졌다.

### ▲올해 중점사업은 뭐가

2000년 국제법정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피해관련 7개국 이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한국, 일본, 필리핀에 사무국을 두었다.

### ▲어떤 일을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관련해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 ▲국가적 책임이라면

세 가지다. 일본국체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것. 1945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기한 연합국의 책임을 묻는 것.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함께 녹아 있다.

###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는가

우선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관련 부대와 군 '위안부' 동원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이를 일본 사무국에 보내면 그곳에서 확인 작업을 벌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 ▲97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일본전범 출입국 금지'조항이 있는데

법무부가 전범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시행령도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99년 말에 미국이 일본전범리스트를 만든다고 하자 의지를 보이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 ▲현재 정대협의 입장에 따르면 천황도 전범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당연하다. 천황의 방한은 '전범'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 ▲최근 남북관계 속에서 같이 하는 사업은 없는지

실행위원회에 북한이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 남북 공동으로 전범 기소장을 낼 계획이다.

### ▲12월의 국제법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러셀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시민법정을 일구어냈듯 2000년 국제법정을 성공시켜 일본이 전범국임을 세계에 널리 각인시키겠다. (이광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1일(금)

제 167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빚발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폭력진압 직후인 지난 7월 4일 국제자유노련(ICFTU), 6일에는 국제목공건설노련(IFBWW) 등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같은 달 19일에는 미국노총과 국제식품호텔노련(IUF)이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7월 31일에는 IUF가 2차 긴급회신을 발송, 소속 노조들에게 한국 대사관 앞 항의집회를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8월 3일 프랑스 노총(CFDT)을 필두로 각 국시위대가 한국제외공관을 찾았다.

8월 2일에는 IUF, IFBWW, 국제공공노련(PSI), 국제노동네트워크(UNI) 등 주요 국제노동노련이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의 서한 요지 참조>

또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 보름제를 맞은 10일에는 필리핀과 호주에서, 11일에는 홍콩과 인도에서 집회가 있고 인도, 가봉, 로메토고, 가나, 탄자니아 등 제 3세계에서도 계속 항의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 "국제사회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들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에 대한 폭력

진압을 보며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으며, 그 뒷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신을 넘어 어쩌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인권대통령'으로 알려진 김대중 대통령의 본질에 대한 의심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 IUF, IFBWW, PSI, UNI 공동서한 요지

김대중 대통령께 우리는 노사간 문제로 쟁의를 하고 있는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 폭력을 행사했다는 데에 경악합니다.

호텔 측이 쟁의 사안에 관한 협상을 거절한 것은 단체협상의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의 위반일 뿐더러,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기록에 영원한 흠집을 낼 것이며, 전 세계 인으로 하여금 귀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신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한다는 공약에 기초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재를 인권 존중의 민주국가로 바꾸기 위해 고난의 세월을 분투해온 한국의 노동운동을 분쇄하려는 롯데호텔 사측의 시도에 지금 귀국의 사법제도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 정부에 노동조합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귀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광길)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10일 방한한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 탈북 난민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 고등판무관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조정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의 평이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기구공동대위)의 최영도 교문은 "국가인권기구를 법인 기구로 설립하겠다는 대통령과 법무부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반드시 위상이 독립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당국에게 강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권고등판무관은 "여러분이 최저선으로 설정한 내용을 획득하는 대신에 포기할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국가인권기구공동대위 측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며 "국가기구화"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민간단체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고등판무관의 문제제기에 국가인권기구공동대위 측은 "공대위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일부 원로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기회를 놓칠 것을 우려하면서 우선 법무부 만들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남북정상 회담을 거쳐서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7조 3항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국과 한국 정부에 북한난민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동석한 한 탈북 난민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어떤 법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적어도 강제송환만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등판무관은 "방금 몽골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오는 길인데 거기서 만난 북한 당국자들이 관련 유엔 인권 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는 등 좋은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며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여 오는 10월 1일 UNHCR과의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고등판무관은 이날 인권단체와의 면담을 마친 후 김정길 법무장관과 만나 국보법 개폐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은숙)

### 롯데노조 정주영 위원장 첫공판

호텔롯데 노동조합 정주영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0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주재로 열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월 29일 경찰진압당시 노조의 바리케이트 설치과정 및 파업기간에 노조의 호텔롯데 간부에 대한 폭행여부,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등을 신문했다. 검찰의 신문 중 29일 진압과정에서 경찰관 12명이 상해를 입은 사실, 노조원이 호텔롯데 간부에게 달걀을 던진 사실 등을 신문하자 방청객들이 실소를 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2일(토)

제 167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며 비난에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국민 누구든 정치적 지도층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인권이 매우 위태롭게 됨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법률의 편파적 적용에 의해 훼손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내 인권단체 수아랍 (SUARAM)은 "강한 정치적 입김을 고려할 때 사실 예견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더욱더 사법부의 독립성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동성애 혐의로 1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안와르 이브라힘은 의형제 수크마 다르마완과 함께 지난 8일 말레이시아 팔라렝포르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안와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동성애금지법도 문제다. 국제 앰네스티는 "동성애 금지법은 정부당국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될 뿐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재판의 공정성 시비 등 술한 문제를 낳기도 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경찰은 증인들에게

안와르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고 중 한 명인 수크마는 차가운 방에서 발가벗겨진 채 성적 모욕을 당하거나 알 수 없는 장소에 끌려가는 등 신체적·정신적 압박 속에 강요된 자백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수크마의 자백을 자발적인

것이라며 증거로 인정해 비난을 샀다. 또 기소장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날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안와르의 유죄를 단정한 마하티르 현 말레이시아 수상은 발언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안와르 사건을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이후 정부는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수백 명의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에서의 대중 집회 또한 금지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이주영)

###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단식투쟁이 벌써 17일째다. 서울역 앞 천막에서 식음을 전폐한 그는 이 시대 모든 노동자들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집단이기주의 엄단 방침을 밝힌 후 가장 먼저 짓밟힌 호텔롯데 노조 정주영 위원장은 지금 '집단이기주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의를 입고 있다. 이랜드, 베스콘, 임창, 동우공영, 마마, 대상식품... 수많은 약덕기업의 노동자들 또한 폭염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달 60만원도 채 안되는 월급, 노동자들의 요구에 콧방귀 췌면서 교섭을 게을리 하는 기업주들, 날벼락 같은 사업장 폐쇄, 교의로 내는 부도 등등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마치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2천년 여름의 우리 사회 풍경은 두드러 맞고, 경찰에 쫓기고, 밥먹듯이 단식을 하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 다녀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찬 얼굴로 채워져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미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배수진에 악화 일로를 치닫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이같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관계가 무르익고 민족의 대사를 치러야 할 판에 그리고도 참을성이 없느냐"는 힐책은 다만 정부의 무능을 고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면 분배의 샘이 너희에게도 흘러 넘친다"는 과거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남북간에 화해를 하는 마당에 지역, 계층간에 화합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부는 최소한 단병호 위원장의 단식투쟁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 곧 발표될 8·15 사면 때 구속 노동자 전원석방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등은 단병호 위원장과의 대화를 열어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북을 관통하고 대륙을 달릴 경의선 통일열차가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사태해결에 힘써야 한다. 행여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 바다가 상황을 얼버무리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다가는 끝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말북인 10일, 탑골공원 앞에 눈에 익은 보라색 수건들이 보인다.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 수배 해제'. 저마다 손에 든 양심수의 사진과 피켓의 글귀가 공원 앞 보도를 꼭 메운다. 광복절을 눈앞에 둔 '특별한' 목요집회가 시작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지만 '간헐 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북날의 더위는 차라리 사치스러워요'라는 민가협 임기란 의장의 개회사에 사람들은 이마에 맺힌 땀을拭는다.

"옥살이는 다행이지만 자적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4월에 갓 결혼했다는 정은희 씨의 말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그 사건을 추가 기소한 거예요. 사면·복권이 되지 않으면 옥살이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의 사연에 사람들은 사뭇 숙연해진다. "저런, 저런..." 길 가던 할아버지도 혀를 찬다. "김현철은 사면·복권된다지?"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거든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다음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예 할 말을 잃는다. 위암 말기 수감자인 72세의 한단석 씨, 죽음을 앞둔 모친을 두고 옥에 갇힌 전양배 씨 등 구구 절절한 사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결수들은 보석 상태로 재판하고, 수배자들은 당국이 조치를 해주면 났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죠.", "양심수를 김현철, 홍인길 같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말을 잇다가 분을 터뜨린다.

이어 어머니들은 더위에 지친 몸으로 명동성당을 향한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 수배 해제하라!" 구호를 외치는 그들 머리 위의 보라색 수건은 하루빨리 '쏟아 없어지기를' 꿈꾸고 있다. (심태섭)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조효제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압력집단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 유령은 불가사리처럼 불가사의한 특징을 지녔다. 이익보존이라는 껍질을 쓰고 비판을 받을수록 몸집이 불어난다. 이 앞에는 상식도, 원칙도 심지어 법도 통하지 않는다. 압력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익관계의 조절기능을 개별결사체의 각계약진에 맡기는 것이다. 힘센 집단에게 원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압력집단의 옹호자들은 할 말이 많다. 건전한 경쟁과 이익대변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것이다. 국가가 압력집단의 게임규칙을 정한 상태에서 경기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듯한 말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엉터리 주장이 없다. 강한 집단은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스피커를 썬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안다. 강한 집단일수록 성능 좋고 듣기 좋은 스피커를 갖고 있다. 정책결정자가 어떤 세레나데에 넘어가는지 영악하게 꿰고 있다. 세레나데에 넘어가지 않으면 행진곡을 틀기도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급속성 파열음을 울린다. 이에 비해 약한 집단의 스피커는 영성하지 못하다. 곡조도 엉망이고 그나마 잘 들리지도 않는다. 자기가 스피커를 틀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바야흐로 압력집단 정치의 문제가 인권운동에도 큰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권운동은 주로 국가를 상대해 왔다.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담당자를 바꾸라고 요구해 왔다. 국가주의의 폐해에 대항하는 당연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권침해의 주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표적인 예가 압력집단, 더 정확하게는 사익 추구 압력집단의 괴이한 부상이다. 이러한 불가사리의 출현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 권리는 절차가 충족되면서 사회적 권리라는 내용이 함께 충족되었다는 환상 때문이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경제·사회적 권리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유이다. 문제는 이 적극적 자유를 국가도, 민간도 모두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불평등의 결과를 외면함으로써, 민간은 자원의 이성적 배치를 방해함으로써 각각 적극적 자유의 침해에 기여할 수 있다.

압력집단이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곳이다. 사회·경제권의 한 중요한 축인 의료가 압력집단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 힘센 압력집단의 반이성적 행동은 인권의 유린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온 민주, 자유, 인권의 세상이 특수이익의 어처구니없는 진군으로 흔들려야 되겠는가. 인권운동이 민간의 갈등영역에 팔짱끼고 있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인권하루소식> 14~16일 후가로 <인권시평>을 앞당겨 게재합니다.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지난 9, 10일 양일간 유엔뉴욕본부에서는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첫날에는 지역 선주민 대표의 발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명의의 개회성명 낭독, 각종 기념 공연과 함께 '선주민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2001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박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의 의제에 선주민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유엔은 94년 총회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선주민 특별기간'으로 선정하고, 기간 중 8월 9일을 '선주민의 날'로 지정하였다. 선주민 특별기간 선정의 목표는 선주민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선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선주민'이란 원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부 이주민들이 들어와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내 소수자가 되어버린 주민들을 일컫는다. 미주 대륙의 인디언, 호주의 아보리진, 뉴질랜드의 마오리 족 등이 널리 알려진 선주민이며 이외에도 북극에서 남태평양에 걸쳐 약 3억의 선주민이 존재한다.

이들은 외부 이주민의 정복으로 파괴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71년 유엔총회에서 '선주민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한 이후 82년 작업반을 설치하는 등 유엔도 선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에서도 선주민의 권리가 확인된 바 있다.

선주민의 권리는 유엔 작업반이 94년 제출한 선주민 권리조약 초안에 잘 나타나 있다. 선주민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할 권리, 집단 학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언어·교육·재산권 등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은 보호받아야 한다. 선주민은 소속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선주민의 발언권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많은 정부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정체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선주민의 전통문화 보존을 어렵게 한다. 또한 최근 선주민의 문화는 관광, 예술, 대안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막상 선주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외에도 선주민의 전통적 생활방식과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의 충돌, 가장 민감한 문제인 토지소유권 등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위원장 이성종)와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정주여)가 파업에 들어간지 70여 일이 지나면서 파업 중 발생한 고소·고발, 해고 문제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새롭게 떠올라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6월 29일 있었던 호텔 롯데 폭력 진압을 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던 파업 사태는 7월 중순 협상이 재개되자 타결 국면에 들어선 듯이 보였다. 게다가 지난 8월 3일 힐튼호텔 노사 협상 타결은 나머지 호텔의 협상 타결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노동계에 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파업을 시작할 때의 주요쟁점들이 그 후 노사간 협상에서 거의 접근돼가고 있는데도 파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소·고발과 해고의 철회 여부가 새롭게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예초 호텔 3사 파업에 공통된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노

동 인력의 확보 그리고 △회사가 원천적으로 가져가는 봉사료를 노동자에게 일정하게 환수시키는 원칙의 확립 등이었다.

지난 8월 3일 일단 타결을 본 힐튼의 경우 △대리급 이상 및 연봉 계약직의 노조가입 전면허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사측이 파업 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후 생길 수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방지했다. 힐튼 노동조합 김삼준 위원장은 "힐튼의 경우, 작년에 이미 비정규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봉사료 문제 등 임금 협상은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른 것이다.

롯데와 스위스의 경우도 7월 18일 이후 진행된 협상에서 타협안의 구도가 어느 정도 잡히는 데까지 왔다. 그러나 새롭게 대두된 구속자와 해고자 문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장기 파업으로 롯데는 정직원인 노조 간부를 포함 63명이, 스

2000년 8월 17일(목)

제 167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스위스는 19명의 연봉계약 직원이 해고됐다. 구속자도 롯데는 3명, 스위스는 5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인지만 노조는 사측에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과 해고자 복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사측은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노동조합 백은영 조사통계 부장은 "IMF 체제이후 조합원의 1/3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합원이 더 줄게된다면 노조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측이 협상에 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적인 노조원들을 해고하여 노조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런 와중에 스위스에서는 14일 새벽, 수배중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온 이성종 위원장이 체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대형 호텔들의 장기 파업사태. 이것을 푸는 최소한의 열쇠가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과 해고의 철회에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이 이 문제 위에 쏠리고 있다. [심대섭]

오픈된 구속노동자 석방

16일 오후 2시, 한화오픈의 해고에 항의해 온 노동자 이상희 씨 등 3인이 풀려났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근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희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정미정·장명림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8년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 해고돼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1년 넘게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 6월 20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광길]

행사와 동정

- 인권과 통일을 위한 제100차 안산역 목요일 집회
  - 때 : 8월 17일(목) 오후 5시
  - 곳 : 안산역 광장
  - 주최 : 안산민주청년회 (031-493-5913)
-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인권캠프
  - 때 : 8월 17일(목) ~ 19일(토)
  - 곳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4층
  - 주최 :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011-446-4804)
-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민가협 목요일 집회
  - 때 : 8월 17일(목) 오후 2시
  - 곳 : 탑골공원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 때 : 8월 18일(금) 오후 3시
  -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723-4255)

###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 국가측, 폐소에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 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국방부·검찰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피고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직접 나와 변론 재개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재판의 조기종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인 셈이다.

이날 피고 측은 ▲미군배상심의부서에 사격훈련 실태, 내용 등에 관해 사실조회를 할 것, ▲서울대 이수갑 교수를 감정증인으로 새로 채택할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매향리 주민을 대리한 이석태 변호사는 ▲이미 원고 측 감정인인 아주대 장재연 박사에 의하여 소음피해에 관한 감정이 이뤄진 상태이므로 재감정이 필요치 않으며 ▲이교수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이 요청한 미군배상심의부서에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이는 한편, 이교수 증인 채택 건은 원고주장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아주대 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매향리 일대 평균 소음도가 72.2db로 일반주거지역 기준치 50db를 훨씬 초과하며 이는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수준'이라 결론짓고 있는데, 그 동안 국방부는 "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장재연 교수 팀이 매향리에서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미군 측은 평상시와 달리 헬기를 띄우지 않고, 기총사격을 미루는 등 교묘하게 조사활동을 방해한 바 있으며 그 결과 3개 마을의 실태조사가 누락되기도 했다. 이 날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감정을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론재개와 관련하여 매향리 문제가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면서 사안이 증폭되자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피고인 국가가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이석태 변호사도 "진행상황을 보니 최대한 빨리 해도 11월쯤 돼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 판사가 3명째이고, 국가측이 질질 끌기로 작정만 한다면 올해를 훌쩍 넘기고 네 번째 판사 손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광길)

### ◎ 공 판 안 내 ◎

- 호텔롯데 노조 정주익 위원장 등 1심 반대신문
- 때: 8월 18일(금) 오후 2시 / · 곳: 서울지법 311호
- 협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국방부, <추적 60분>에 따지

####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국방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군사연구소 문제가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달 30일 방영한 '추적 60분 - 매향리' 이후, 우리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프로그램 방송 후, 지난 13일 방영될 예정이었던 '국방군사연구소는 왜 갑자기 해체되었나'(연출 최기록)가 20일로 미뤄져 국방부의 압력설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노조와 추적 60분 제작진은, 국방군사연구소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국방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방영취소를 요청해 왔고, 매향리 프로그램 방송직후에도 국방부 공보관이 직접 제작팀을 찾아 방영예정 아 이템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각을 앞두고 조성태 국방부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국방송공사가 방영한 <추적 60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 60분'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증언과 국방부 자료, 매향리 사격장 시간표 등을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방부 차연구 정책기획국장 등 4명은 <추적 60분>의 방송내용 중 하루 13시간의 폭격훈련과 지난 50년 동안 훈련으로 인해 매향리 주민 12명이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 훈련은 하루 평균 3-6 시간동안만 실시됐으며, 사격훈련으로 인한 사망자는 66년의 단 한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방송공사가 세심한 사실확인 없이 경솔하게 방송해 국민적 관심사인 매향리 사건 소관부서인 국방부의 국민적 신뢰도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진표 <추적 60분> 프로듀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 12시까지 사격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매향리 주민 전체"라며 97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98년 쿠니 사격장의 사격 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 제작진은 "오쪽이나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만 12명이요 제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국방부를 공박했다. 제작진은 "제 나라 국민의 사망자 숫자도 모르는 국방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방송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자국민의 세금으로 타국 군대의 소송을 대리하는 지구상 유일한 국방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보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8일(금)

제 167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 송석찬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서명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에서 동료 의원 15명과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게다가 남북 관계 활성화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의

미가 없어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 유일의 악법"이라고 덧붙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부칙에 국가정보원법·방송법·형법·보안관찰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삭제 및 폐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의 비서관 임영순 씨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7조뿐 아니라 전면적인 폐지를 하자는 것이 법률안의 의도"라며 "일단은 서명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회기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7월 21일 232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발족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이번 송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태섭)

##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나' 반발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

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은 17일 "도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며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나 집회는 도심 개최를 지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운영기획단은 또 "행사·집회 주관단체가 서울시 교통관리실,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행사·집회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과학적인 모형에 의해 산정하여 행사주관단체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2면으로 이어짐.

## 만화 사랑방

이동수



기사 1면에서 이어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건물을 지을 때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다. 집회나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취지의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사나 집회 주관단체가 부담금을 내는 것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집회나 행사의 주관단체는 차선을 이용하는 시위를 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발표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최근 많이 벌어지는 도심시위로 교통혼잡이 우려돼 구조 공학적인 차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도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는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차별적 변호사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 도심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부담금 산정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서울경찰청과 교통소통대책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꿈 같은 이야기"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경찰청의 '도심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라는 해프닝이 실제상황으로 현실화됐다"며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도 돈 주고 사야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런 발상이 △부자에게만 기본권을 보장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집회의 자유도 없다는 것이고 △집회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을 외면한 속편하기 짝이 없는 행정편의주의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18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잠시간에 걸쳐 도심차로를 사용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경우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도심 차로행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마감 4일전인 7월 29일까지는 반대의견이 70%에 육박했으나 막판에 뒤집어져 결과는 찬성의견이 54.5%에 달했다. 이 '의견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엔 서울시가 내놓은 물상식적인 집회규제 제도 도입을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며 경찰청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보선]

###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엠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17일 국제 엠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엠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 있다"며 "이들 또한 풀려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엠네스티는 "이번 사면조치로 인해,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양심수들의 고통이 잊혀져서는 안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엠네스티는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지만, 화해의 기운이 짙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악법을 존속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엠네스티는 이 논평에서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사면으로 석방된 양심수는 21명이며, 우리나라 감옥에는 아직도 한탄석(전북대 교수),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나창순(범민련 고문) 씨 등 100명 이상의 시국·공안사범이 감옥에 갇혀있다. [이주영]

### "죄질이 나쁘다", 보석 기각

'스위스' 노조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2단독 문현돈 판사는 17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노동조합 김성래·윤재성 부위원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7월 15일과 18일에 각각 영업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성래·윤재성 두 부위장에 대한 이 보석불허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철) 박진희 사무차장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주도했던 두 사람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하여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들의 법정 대리인 이형범 변호사는 "아직 쟁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풀어주면 다시 쟁의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파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다가 구속됐으며, 윤 부위원장은 7월 17일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됐다. 18일 현재 구속돼 있는 스위스그랜드 호텔 노조원은 5명. 16일 구속된 이성중 노조 위원장과 윤지현 씨도 곧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다.

[심태섭]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19일(토)

제 167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매항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국방부가 발표한 '매항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항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종합대책'에서 국방부는 △매항리 기총사격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성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성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탄만 처리하며,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원대책반'(단장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주한 미 제7공군과도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이장도 돌려받아야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철적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매항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국방부 사람을 만나서도 폭격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주민들은 해안가에서 횡집 등을 하는 사람들로 외지에서 와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며 주민과 협의했다고 일반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보니 "국방부가 치졸하고 오히려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또 폭격장문제는 단순히 소음, 안전의 문제 말고도 혈값에 빼앗다시피한 토지, 사격장으로 인해 어로활동을 못하게 된 것 등 생존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매항리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사격표지를 걸어두는 사격장의 기둥 두 개를 뽑았다. 하지만 오후 3시, 국방부 기자회견과 현지 우정면사

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끝난 시간에, 그 자리에 기둥을 다시 박았다"며, 사격중지 결정을 하면서 왜 사격장 폐쇄를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매항리 주민대책위와 매항리 범대위는 18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매항리

주민들과 아무런 논의도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을 왜곡한 국방부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

21일에는 매항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매항리 범대위 김종일·김용한 집행위원장, 최용운 매항리 주민대책위 전 위원장 등의 1심 첫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연다.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보선]

###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고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단한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뜰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의적 의료체계 하에서 의사들은 악육강식의 경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몇 안 되는 대형병원은 날마다 '손님'으로 바글거리는 한편 동네병원들은 맨 날 파리만 날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의료수가를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 나옴직하다.

그러나 의료수가를 올린 다음엔? 현재와 같은 상업주의적 의료체계가 유지되는 한 살벌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거기서 밀려나는 동네병원들은 다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화끈한 처방'이 판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결국 결국 미국처럼 보험료나 진료비를 감당 못하는 많은 서민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고약한 나라가 될 게 뻔하다. 낮은 임금과 불안한 처지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내놓을 보험료도 의료비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가 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생명을 불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는 것도 우리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병폐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은폐해주기에 딱 알맞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상업주의적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수가 인상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닌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 수호'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아무개(39,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1일 인천경찰서에 출두하여 구속돼, 14일 오후 청주지검으로 호송됐다. 오후 2시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입감, 오후 4시경 조사를 받다가 심한 발작을 일으키자 담당검사가 의사의 자문을 구한 뒤 "곧 괜찮아질 것"이란 소견을 듣고, 청주교도소에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교도소 이송 중 김씨의 증세가 악화돼 인근 한양정형외과에 들렸으나 이미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 다시 효성병원으로 옮겨져 6시 30분경 최종 사망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 유족들은 몇 차례 발작에도 응급처치를 안하고 방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증거로 "호송 이틀전인 12일에도 유치장에서 구토, 발작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병원진료 결과 알코올중독에 의한 급단현상으로 며칠 후면 사라진다는 소견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의도적으로 김씨를 방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검찰호송 도중에도 발작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입감했으며 입감 후 2시간 넘게 대기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도 검찰조사 때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진다는데, 이미 쇠약해진 김씨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서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가 심한 발작을 일으킨 후 검찰조치의 신속성에도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지검에서 한양정형외과와 효성병원은 각각 차로 5분 거리. 그런데 발작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고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호송했다"고 단언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또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이광길]

###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반대신문

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노조 정주영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파업기간의 영업방해 △폭력집압 때 저항 정도에 집중됐다. 경찰진압 당시 곤봉에 얼마나 맞았느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곤봉이 아니고 갈고리가 달린 쇠파이프였다"고 진술, 경찰이 쇠파이프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1호. [심태섭]

###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미국 대선과 관련, 국내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전당대회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지만, 두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두 당의 전당대회에 즈음해 지난 1일 필라델피아와 14일의 LA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소식을 전한다. <편집자 주>

지난 1일 필라델피아 현장에서는 약 45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이 중 일부는 연행 중에 구타당하고 변호사 접견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연행 후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분날인을 거부하고 이 중 30여 명은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단식을 했다.

14일에는 반자본, 반세계화, 반NMD를 기치로 한 시위대와 정치범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을 위한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무료 콘서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LA경찰이 쏜 최루탄과 고무 총알에 맞아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시위대는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무미아 아부자말 석방 : 인권영화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부자말은 81년 경찰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또 다른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언도되었다. 아부자말은 당시 필라델피아 흑인기자협회장으로, 흑인정치결사단체인 흑표범 당의 당원으로서 인종차별, 경찰폭력에 반대하여 활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형선고를 정치적 보복으로 간주하고 있다. 엠네스티와 프랑크 조스팽 총리 등 유명인사들의 사면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부자말의 사형은 확정된 상황이며, 미 전역에서 아부자말 석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정의의 실현 :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빈곤층에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거하는 단체 중 하나인 '빈곤층의 경제적 인권을 위한 운동본부(Poor People's Economic Human Rights Campaign)'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제적 인권을 위한 행진'을 기획하였다. 이 행진에는 홈리스, 미혼모, 복지수당에 의존해 사는 빈곤층 등이 참가해 호황 속에 사라져 버린 빈곤층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사형제도의 재고 : 공화당 후보 부시가 주지사로 있는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이며, 12월 전에 10명의 사형이 예정돼 있다. 사형제도는 그 자체의 비윤리성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흑인, 빈곤층, 소수민족 등에게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시위대는 무미아 아부자말의 아들 마지 아부자말이 말한 바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 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들은 모두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후에도 대선 캠페인 현장을 무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김민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2일(화)

제 168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광주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4차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애당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기막힌 사연을 소개한다. [편집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진농고 재학 중 광주에 올라가 계엄군에게 머리를 맞은 후 숨진 고 김중석 씨의 유가족이 이웃의 허위신고로 5·18보상금 사기범으로 몰린 채 수난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3년 6월. 88년 광주민주화운동 1차 보상 대상자에 선정되어 93년 1억 3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고 김중석 씨의 가족에게 강진군 장산리의 마을이장 김대환 씨는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회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김중석 씨의 어머니 이계순 씨는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마을이장 김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하였다. 끝내 이계순 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이장 김씨는 '김중석 씨는 5·18때 계엄군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정신이상으로 중학생 때 병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공판일기

▶ 정동희(전학협 2기 의장)

·때 : 8월22일 오전 10시

·곳 : 서울지법 309호

전국학생회협의회 2기 의장 정동희(고려대 기계공학 4년) 씨의 첫 공판. 정씨는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광주시청은 이장 김대환 씨의 투서를 접한 후 곧바로 고 김씨의 부모를 5·18보상금 허위신고자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이계순 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문규 씨는 곧바로 검찰에 의해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 후 이계순 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95년에 출소하였으며, 아버지는 1년의 형을 언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는 않았다. 그 후 아버지는 핏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작년에 끝내 숨졌고, 환수조치 명령 이후 작은 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숨졌다고 한다. 5.18 유가족이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며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난 경우이다.

고 김씨의 누나인 김안숙 씨는 당시 시청공무원들이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도 마을이장의 투서가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입증 서류를 내보이며 김씨가 주장하는 진실은 누가보아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첫째, 동생 김씨가 중학생 때 죽었다는 주장은 80년 강진농고 재학 당시 종석이의 생활기록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을이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 김씨가 정신이상자로 죽었다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내내 축구부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사실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청의 수사외의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온갖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대신, 마을사람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진술을 한 마을사람들 중 상당수가 프린스호텔에 똑같은 날 모여 진술하였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정신이상으로 죽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김씨가 80년 5월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았던 강진소재 천일외원이 당시에는 폐업상태였다고 수사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강진군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천일외원은 78년 폐업했다가 80년에 다시 병원을 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 2면으로 이어짐.

## 비정규직·성희롱 문제 이론화 호텔롯데 노사교섭 타결, 해고자 5명

호텔롯데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날 오전의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의 주내용은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일방중재 조항을 2002년 5월 31일에 자동삭제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파업관련 징계 최소화 △파업관련 고소고발 철회 등이다. 특히 성희롱 손배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협회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들은 협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관광연맹 박진희 사무차장은 호텔롯데 노조원들이 "파업과정에서 노동자임을 자각한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차장은 호텔롯데 파업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실태를 전국적으로 여론화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원들은 22일부터 출근하며, 해고대상자는 구속된 정주영 위원장, 조길성, 권순영 씨와 김경중 부위원장, 이남경 사무장 등 5명이다. [심보선]



###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항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21일, 수원지법 110호. 매항리 주민 150명이 방청석을 꽉 메운 가운데 지난 달 7월 15일 매항리에서 미군 사격 연습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구속된 최용운·김용한·김종일·주영배 씨에 대한 첫 공판 (형사 11부, 재판장 백춘기)이 열렸다.

‘매항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미군과 경찰"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단체 공동집행위원장 김용한 씨는 "이 재판이 매항리 사격장을 폐쇄하는 역사적인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격장을 직접 방문한 다음에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모두진술에 이어 집회의 불법성을 추궁하는 검찰의 심문과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부각시키려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행되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후 5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태섭)

###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를 체포과정에서 영장은커녕 소속,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연행 후에도 가족들의 집견을 허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최진수(38)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여동생 최진미 씨에 따르면 "십수명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짓을 할 수가 있느냐"며 분을 사이지 못했다.

최씨를 접견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족면회는 수사목적상 제한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과도하게 적용해 가족면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명문)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아버님도 뺏겼으니 돌아가셨다"며 "최근 열리고 있는 4차 보상심사를 통해 아직도 탐진감 가에 묻혀 구원을 떠돌고 있는 종석이와 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심사를 기대했다.

한편, 고 김종석 씨의 가족들은 당시 마을이장을 상대로 모해위정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4차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했다. (기명문)

인 권 시 평

### 미결수와 수의

강금실 (변호사 / 지평법률사무소 대표)

사람이 구속되면 구치소에 가서 수의를 입는다. 囚衣-그 의미가 죄수복이다. 구속이 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의 미결수는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입는 제복을 수의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달리 별도의 용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치소 안에서 죄수복을 입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적어도 미결수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의 신분과 너무 어긋나는 모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 불과한데도, 그에게 수의를 입도록 강요하면 결국 재판의 처음부터 그를 죄수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들이 누르스름한 수의를 벗고 깔끔한 사복차림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러한 변화된 모습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점차 사그라들어 이제는 예나 다름없이 미결수들 대부분이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데 도로 익숙하여졌다. 어쩌다 사복을 갈아 입고 나오면 눈에 띌 정도이다. 미결수의 사복착용제도는 시험단계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호지부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사복착용이 정착되지 않는 원인이야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드러나는 이유는 미결수들 스스로 사복착용을 회피하는데 있고, 미리 신청하여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구치소안 사립들 사이에 형성된 '부적'같은 미신 때문이다. 사복을 입으면 판사가 앞집게 생각하고, 수의를 입어야 동정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떠도는 것이다.

수의를 강요하고 억지로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들이 법정에서도 굳이 사복을 입지 않고 거리낌없이 수의를 선택하여 입는 것이라면 인권침해일 것도 없고,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누구의 강요나, 선택에 의한 것이든, 형사재판에서 지켜야 할 인권의 기본적인 사항이 어그러져 있음은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사복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지, 사복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문화가 몸에 밴 때까지는 그와 같은 강요로서의 '의무화'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이 문제의 정답인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롯데 폭력경찰 징계 호지부지

###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롯데호텔 파업진압 당시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경찰청이 50일이 지나도록 당해 경찰관을 징계하지 않고 있음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최근의 경찰청 답변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들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지난 7월 10일 경찰청은 자신의 홈페이지(www.npa.go.kr)에 올린 '롯데호텔 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이라는 글에서 "흥분해 있던 몇몇 전 의경들이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 한 사실이 확인되

었다"고 폭력행위를 시인한 바 있다. 경찰청은 같은 글에서 "행위자는 징계 조치 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3일 경찰청에 대해 △폭행을 한 경찰관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 △감독자의 신원과 지휘책임 추궁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폭력 행사를 한 경찰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할 예정이고, 사후 관리 감독 지시를 했다"고만 할 뿐 그들의 신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여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

2000년 8월 23일(수)

제 168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1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 폭력 행사 경찰관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 독지 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심태섭)

###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플란데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회합·통신) △99년 8월 군산 미공군비행장 정문 시위 도중 허가도 없이 미군기지에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96년 서울지법(담당 황대현 판사)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항리사격장 폐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에 문신부를 기소한 이유가 잘 납득이 안된다는 시각이 많다. 또 97년부터 여러 민간인과 성직자들이 미군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군기지를 출입했지만 '미군기지 무단출입'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신부는 "내가 군산이나 매항리에서 투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나를 제재하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시대'를 감안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신부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이창조)

### 새로 나온 자료집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2000. 7. /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펴냄 / 72쪽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결혼을 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관리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찾기에 길잡이가 될 책자가 나왔다.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지난 반년간 벌인 활동경험이 녹아 있다. 1부는 임금체불·해고·부당행위·성차별·모성보호·직장내 성희롱·직장내 폭언 및 폭행 등 여성노동자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별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진다. 각각마다 실제 상담사례를 예로 들고 있어 더욱 생동감이 있다. 이를테면 부당행위 장에서는 "OO전차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 준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놓치지 않는다. 제3부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모성보호·해고·고용보험·고용평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끝머리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점검항목을 달아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문의:02-708-4620) (이주영)

###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5·18 행불자 가족회가 심사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지난 3차에 걸친 보상심사에서 행불자와 관련하여 기각판정된 몇 가지 사례가 잘못되었음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4차 심사에서 공정한 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보상심사가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로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의 이문선 씨를 들었다. 지난 94년 2차 보상심사 당시 이문선 씨는 80년 5월 차남 이옥섭 씨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인우보증을 세워 광주시청 지원협력과에 5·18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옥섭 씨가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 있어 가출이 잦아 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상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김총무는 이문선 씨의 아들 중 정신질환으로 자가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막내아들 이이섭 씨라며 막내 이씨의 광주광역시 소재 김재창 신경정신과에서 2000. 2. 21. 발행한 '치료확인서' 등을 내보였다. 설자 돌림의 아들 중 한 명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웃의 진술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없이 이옥섭 씨가 정신질환자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또, 당시 조사 공무원들은 용대리 주민 최한열 씨를 상대로 "이옥섭 씨가 군대가기 훨씬 전에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최근에 행불자 가족회가 확인을 해본 결과 당시 공무원에게 진술을 한 최씨는 이옥섭과 10리나 떨어진 동네에서 살았으며, 이옥섭을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한열 씨는 확인전화를 한 본보 기자에게 "올해에는 경찰도 오고,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원들이 몇 번 왔지만, 그 전에는 이옥섭 씨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왜 만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 귀찮게 하나"며 자신도 광주시청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시청 지원협력관실에 근무하는 박건주 씨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재심절차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 행불자 가족회 김정길 총무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시의 조사책임자가 현재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문선 씨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서야 보상신청 기각사유를 알 수 있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법으로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를 사하지 못했다. (기명문)

###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추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 광복절 기념사면, 경제사범과 생계형사범, 일반형사범, 선거사범, 시국·공안사범 등으로 김정현 등 비리사범 사면에 시국사범을 '양념'으로 넣음(8·14) / 민가결,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경실련,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 8·15 사면이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을 사면·복권하기 위해 양심수를 들러리 세웠다고 비판(8·15) / 국제 엠네스티 논평 :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며 석방 요구(8·17)

#### 2. 성희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경기광주 농협지부 여직원, 농협지부장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8·8) / 롯데 노조원, (주)호텔롯데와 경영진, 성희롱 가해자 상대로 집단손배소송(8·9) / 전북 익산경찰서, 남자 제자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감 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8·10)

#### 3. 매화향 가득한 매향리를 요구한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한 학생 45명 무더기 연행, 밤샘 조사 뒤 석방(8·11) / 국방부 '매향리 종합대책' 발표: 기총사격장 사격중지, 농심사격장에는 소음이 작은 연습탄만 사용 - 매향리 주민들, 사격장 폐쇄하고 토지와 어장을 돌려달라고 요구(8·18) / 매향리 활동가 김용한 씨 등 4명 첫 공판, 매향리는 미국 군수업자의 무기시험장이라고 주장(8·21)

#### 4. 유엔 인권관련기구는 뭘하고 있을까?

유엔 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현대적 형태의 성노예'에 관한 결의안 채택, 게이 맥두걸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적극 지지(8·17) /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탈북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대표, 법무부장관 등과 면담(8·20)

#### 5.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새로 쓰다

롯데호텔 노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합의, 경찰의 진압 후에도 54일이나 파업대오를 유지하여 성과를 이룬 노동운동사를 새로 쓸 만한 투쟁, 해고자문제 과제(8·21) / 호텔롯데 노조원,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배소송(8·22)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4일(목)

제 168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광주항쟁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5·18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상이 종결되어 가고 있다. 광주 인사들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4차 심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80년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 박감배 총무는 당시 5월 항쟁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조직적인 검증을 통해 쉽게 보상을 받았지

만, "일반 시민들은 개별 사안으로 되어 입증이 쉽지 않아 행불자 같은 경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박총무는 4차 심사기간 도중 전과 같은 허위 보상금 수혜자를 용납할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총무는 이어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증중 또는 심한 스트레스 정정병을 앓고 있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천만 원의 돈으로는 그들이 가졌던 20년 전

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국가가 5·18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쟁 주역들의 종적이 안보여

80년 5월 항쟁 당시 수습위원으로 활동했던 조비오 신부(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생교육원 관장)도 "5·18 피해자들은 공권력에 의해 자활능력을 빼앗긴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일시보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신부는 또 "당시 몰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질적 항쟁의 주역들인 무의탁 직업소년들, 행려자의 종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추적작업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종철 광주광역시 5·18 자문위원은 '치유되지 않은 오월', (박원순, 변준하 편)에 실은 '광주시의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모두 써버려 특수치료, 특수약품비를 직접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철 자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4명만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3차가 지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4,537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154명, 상해 후 사망자 93명, 행방불명자 64명, 부상자 2,865명, 연행·구금자 1,361명이다. 또한 현재 4차 보상기간 중 신청한 사람은 모두 850여 명에 달한다. (기명문)

### 행사와 동정

■ 동성애자 인권연대, 홈페이지 만들다

·URL 주소: WWW.OUTPRIDEKOREA.COM (ORG가 아니다)

·검은 색과 흰색이 대조를 이루고 단순, 간명하다

·로딩에 시간이 적게 걸린다

·silence=death action=life 라는 영어자구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카피레프트를 표방하고 있다

·쟁점계시판, 자유계시판이 있어 입맛대로 가변된다

·아직 살림살이를 다 갖추지 못한 흔적이 있다

■ '다산인권' (창간준비 1호) 발간

·발행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계간으로 발행하던 '다산인권'을 주간 팩스신문으로 내기 위한 준비작업.

올해까지 격주간으로 발간하고, 내년부터 주간 팩스신문으로 낼 계획.

■ 비정규 파견 노동의 실태와 대응 방향

·때: 8월 24일(목) 오후 8시 / ·강사: 윤예립 (파견철폐공동대위)

·곳: 노동자건강사업단준비위 사무실 (774-8774)

■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때: 8월 24일(목) 오후 2시-오후 5시

·곳: 서울시의회 의원별관 열린의회 교실 (2층)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 (3675-9935)

■ 『장기수 백서』 출판 기념회

·때: 8월 31일(목) 오후 4시 / ·곳: 서울 아현감리교회 오후 4시

·주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393-4662)

#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 14조 2항에 신설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70.2% (2000.6., 통계청)나 될 정도로 특히 여성의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해 이 캠페인이 주목을 받는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은 위의 통계청 통계에 자영업자 등으로 잡힐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근로 불안정성은 심각하다.

운동본부는 여기에 주목해서 학습지 교사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 일부는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운동본부는 여성계, 특수고용업종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에서 월 2회씩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락처 : 02-708-4620) (심보선)

#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간다

국가정보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최진수 씨를 연행한데 이어 23일 오후 7시 박정훈(이화외국어고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심보선)

#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5월 청년동지회 회장, 5·18 부상자회 사무국장 등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이세영 사무국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5·18 보상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일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간 아홉 명의 심사위원이 자료를 보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5:4로 인정된 사안이 있는가 하면 4:5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근본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더더구나 문제인 것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 3차가 지나고 4차 째를 맞고 있는데 보상이 오월항쟁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노태우 정권당시의 보상은 계엄군과 시민군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는 기초에서 보상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858명이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후 2차부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액수가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아 서로 갈등도 생겼다. 처음부터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5대원칙(명예회복, 책임자처벌, 진상규명, 국가배상, 기념사업) 속에서 풀렸더라면 훨씬 더 당당했을 것이다.

▲5·18 보상과정에서 5월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찌 됐건 하위보상금 수령에 관한 검찰 발표 이전부터 많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이후에도 내부 스스로 자정을 통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청 지원협력관실의 한계금 계정은 행불자 조사작업과 암매장 발굴작업에 5억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불자 추적이나 암매장 발굴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가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내는 것이지 않는가.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일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 5억 편성)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민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4차 보상심사가 열리고 있다...

단 한사람도 억울함이 없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신청인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서류가 최하 100장 정도인데, 심사위원들이 1주일에 2차례 모여 심사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밀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8 문제에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동안 잘못된 것이 많았다. 하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5·18에 행려자, 무의탁자 등이 많이 참가했다.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조건, 품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러한 한계까지 무시하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비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야단체 사람들도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오월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버렸다. (기명문)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5일(금)

제 168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전부터 이를 '약체 인권위원회'라고 비관해온 민간단체들은 이번 기습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72개 인권 관련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는 이미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모든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법무부의 이런 '기습'은 지난 1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방한했던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의 '인권법'을 지지해줄 것을 간청한 김정길 법무부장관에 대해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법무부 안을 지지하기 어렵다. 민간단체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척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한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에 관한 반박자료에서 "인권법 제정 지연은 전적으로 일부 인권단체의 책임"이라고 공대위를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인권단체가 누구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국가인권기구공대위를 의미한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올 가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민간단체 대규모 토론회 준비

한편 민간인권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공대위는 오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를 갖는다. 전국에서 활동가, 연구자, 법조인 등 150명 정도가 모여들 것이 예상되는 이 대규모 토론회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일선활동가들의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인권운동의 현장경험 속에서의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형사피의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재소자 등 20여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집중토론 하며 공대위는 이 토론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곽노현 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방송통신대 교수)은 "이 토론회에 법무부 관계자도 초청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묵은 법안 제상정을 강행하고 입법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대위에 돌리는 조건에서는 그런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류은숙)

# 만화사랑방

이동수



###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롯데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음주진압, 임산부 폭행'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허위주장으로 판명"되었고 "MBC에서도 사실이 아님을 정정보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 경비계'인 이 보도자료는 진보네트웍, 안티롯데 사이트 게시판 등에도 올라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7일에는 '롯데노조측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서울지법에 3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22일 경찰의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호텔롯데 노조 측은 경찰의 이같은 대응에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많은 노조원들이 술 냄새를 맡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진술하고 있고, 임신5주의 태아를 유산한 김덕선, 장애인증을 보여 주고도 폭행당한 변명수(29) 씨 등 경찰의 폭력을 생생하게 증언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분개했다.

김덕선(29)씨의 유산에 대해 단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실 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포, 신체적 및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태아의 자궁내 착상과 성장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난 8월 11일 작성한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호텔롯데 노조원 변명수 씨는 장애등급 4급으로 지난 6월 29일 경찰진압과정에서 4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그냥 두면 공권력이 무력화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찰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경찰이 '조치보호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억박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심보선)

###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잠미 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인권위원회는 예산안을 법무부를 통해 신청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연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실제 행정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로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은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로 할 것이냐, 법인 혹은 민간단체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 근본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측이 변한 것도 없고 양보한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건범위의 확대 등등 몇 가지 변한 점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다소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근본적인 위상문제가 향상되지 않으면 대세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한가지 새로운 점은 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할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과태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요한 인권침해자는 과태료만 낼 각오로 버티기만 하면 끝내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수사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 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새로운(!) 법무부 인권법안에는 어떻게 든 인권침해자를 감싸려는 여러 가지 장치기 숨어 있는 것이다.

결국 새 법안에는 새로운 것은 별로 없고 과거 법안을 재포장해서 밀어붙이려는 법무부의 의지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과거에 인권침해를 일삼아왔던 공권력)이 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작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다름이 아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6일(토)

제 168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노점상 단속 비상!

###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서울시가 8월 21일부터 두 달 동안 노점 특별 단속 기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10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셈(Asia Europe Meeting)에 대비해 '손님맞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노점 단속 공문을 내렸고, 이달에는 특별히 9개 자치구에 별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포함된 9개 자치구에는 아셈 참석자들이 주로 이용할 건물들이 밀집해있으며, 영등포·양천·강남·중구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서울 시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IMF도 끝났다고 하는데, 주요 대로에만 1만 8천여 노점이 영업하고 있는 건 문제 아니냐"며 "아셈도 관련이 있지만 일상적 단속의 연장일 뿐"이라고 말해 아셈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노점상인들 사이에는 평소엔 안 하던 극성스러운 단속이 아셈 탓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국노점상연합(의장 소순관, 전노련) 연대 사업·인권국장 채인기 씨는 8월 들어 고급호텔이 모인 중구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단속 사례를 강조하면서, 그런 현상은 "아셈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 행사 가 있을 때마다 노점들을 우선적 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단속의 강도 또한 문제다. 전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주로 하던 것이 이제는 바로 강제 철거를 해간다는 것이다. 용역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나간다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삼성동과 테헤란로 일대의 노점 철거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 다치

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말로 그 대립의 첨예함을 내비쳤다. 채 국장도 "강남구와 성북구는 행정적 책임이 덜한 용역 직원까지 단속에 동원해 마찰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성북

구와 강남구에서 용역이 동원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단속 강행에 대해 노점을 무조건 불법으로만 내몰 것이 아니라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전노련의 입장이다.

사실, 작년 3월 광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 (심태섭)

###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걸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면서 수렁에 빠지겠다는 악수(惡手)일뿐이다. 왜 이렇게 잘못돼버린 걸까?

무엇 권력이란 숙명적으로 인권침해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조물 같은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인권범죄자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봉사해온 우리 검찰은 인권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입법과정을 주도하면서 새로 만들어질 인권위원회를 당연히 자신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한 약체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것은 뻔한 이치다. 정작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 받아야 할 법무부가 그 감시기구를 설계하겠다고 나서서 모양새를 누구는 "금급탈이가 금고를 설계해주겠다고 나서서 꼴"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정부기구'이다. 고양이 가 쥐를 생각해 주는 검찰의 이 가소로운 거짓말은 국민대다수가 바보라면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나오지 못한 채 진통만 3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있는 이유이다. 험한 밥 먹고 버티는 인권단체들이 뭐 떡고물이 떨어질 게 있다고 단식까지 하면서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고집을 3년 동안이나 부리겠는가? 그건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까닭이다.

우리는 청와대나 여당의 무기력한 태도를 보면서 가끔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다. 왜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굴한가? 검찰은 두렵지만 세상에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결단해야 한다. 문제는 명쾌하다. "누가 인권침해를 감시할 사람이고 누가 감시 받을 사람이나"를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하루빨리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틈만 나면 남발해온 "인권법" 연내 제정의 약속을 올해야말로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 국회의원 143명 '국보법 폐지' 입장

## 경실련 통일협회, 16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16대 국회의원들 상당수의 통일·북한·안보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25일 경실련 통일협회는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16대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통일안보의식에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관의 경우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과거의 적대·경계의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냉전적 인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법안 자체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19.3%, 31%로 총 50.3%의 응답자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46.2%는 논란이 되는 일부조항만을 개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범죄와 매항리 사건 등을 계기로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의 반환과 임대기간 설정 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개정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116명으로 80%에 이른데 반해 형사재판관할권과 민사청

구권 등의 일부조항 개정과 환경권 설정 등으로 개정논의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15.9%인 23명으로 나타나 SOFA전면개정에 대한 견해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국회의원들의 대북관과 통일·안보의식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변모한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하면서도 "개별의원들의 변화된 입장이 당면화되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273명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145명만이 설문문에 응답했으며, 이중 민주당은 51명, 한나라당 47명, 자민련 및 무소속은 9명, 무기명이 38명이다.

(기명문)

### 매항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매항리 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대책위) 4인과 호텔롯데 정주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동협사무처장), 주영배(매항리 주민)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매항리 대책위의 김용한 씨 등은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경 매항리에서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과

연대하여 '보름달맞이 평화기원 문화행사'를 하다가 연행됐으며, 지난 8월 21일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전만규 씨와 병합심리 가능성을 밝혀 보석석방이 예상되었었다.

### 롯데 노조 간부들도

또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도 지난 6월 29일 경찰의 강제진압시 연행되어 구속됐던 호텔롯데 노동조합 정주여 위원장, 권순영 쟁의부장, 조길성 체육부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기명문)

### 동성애자 최초 공개 행진

같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다

친구사이(한국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개리개리(한국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 등 10여 개 국내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실무간사 김현진, 조직위)는 26일 대학로에서 한국 최초로 공개적인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7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펼치는 독립예술제 행사의 일환인 가장 행렬에 동참해 벌어질 이 행진을 위해 조직위 측은 2백여 명분의 무지개 페인팅과 깃발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 실무간사인 김현진 씨는 "동성애자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의 그 누구나일 수 있고 우리 속에 속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행사기획 의도를 밝혔다.

누구나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26일 오후 2시까지 대학로 서울대 병원 후문으로 모이면 된다. (류은숙)

비전향장기수 범국민 환송식 행사장소가 우천관계로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연세대 대강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000년 8월 26일(토) 오후 6시입니다.

###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 인권의 새 희망을 담아 활동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

-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
- 곳: 한국여성개발원(서울, 불광동)
-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및 참가신청: 조영임(02-447-0277, 011-740-576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29일(화)

제 168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상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신과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보네트워kst센터(대표 김진균)를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정통부는 이 사건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사법조치를 강구하

겠다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는 사건 발생 하루만인 27일 보도자료에서는 "(26일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로서 "홈페이지 정보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해킹'과 거리가 먼 사건임을 시인했다.

이에 정통부가 '접속불능'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소위 '통신질서확립법' 공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장하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네트워kst센터는 지난 7월 20일부

터 참여연대,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이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에 의한 과도한 인터넷 내용규제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21일>

정통부는 그간 각계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네티즌의 공개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띠를 두른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다.

진보네트워kst센터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통부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도는 아무런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그저 네티즌들을 '홀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아'로 치부하며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마땅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문기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28일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악의적인 시위방법이었다"며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1차 온라인 시위는 20일에 있었으므로 시기상 직접 관련성이 없고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통부의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kst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명문)

### <인터뷰>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 진보네트워kst 장여경 정책실장 -

▲정통부 서버다운에 대해 해킹이라는 동 말이 많은 데 정보통신부도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킹이라 볼 수 없다. 기술적으로 서비스거부공격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평화적으로 거리를 걷는 정도라 보면 된다.

▲초기에 '해킹'이라 알려진 이유는 우선 정보통신부가 기자에게 해킹이라 알려주었고, 기자들은 '특종'이라고 덤석 물어 한바탕 난리를 친 거다.

▲정보통신부가 무지해서 그런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서버가 다운된 26일은 을지훈련 마지막 날로 '사이버테러' 대처훈련을 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정통부가 '주부인터넷경진대회'를 위해 빌린 심마니 서버도 다운되어 대단히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책임을 네티즌에게 전가한 거라 생각한다.

▲정보통신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말들이 많은 데 20일 1차 시위 이후에도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항의가 계속 있었지만, 성의 있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글리 코리아' 운운하며 네티즌을 자극했다. 26일 서버다운에도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사태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자 부랴부랴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다 빠져 있다.

▲우리 나라에서 온라인시위는 처음인 데 한 통계에 의하면 네티즌이 1천6백만 명이라 한다. 이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광길)

인권 시평

래도 단상

김규향 (이웃사이더 주간)

지난해 이맘때든가. 한겨레21 고아무개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겨레21 맨 앞에 실리는 이주의 세상인가 하는 지면을 담당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더러 세명 정도로 사람을 짜달라는 얘기였다. (참고로 말하면 그 즈음 시사주간지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다. 89년 시사저널의 성공으로 선데이서울의 시대를 마감시켰던 시사주간지들은 이른바 386이라는 고정독자층의 노화와 새로운 독자층이 재생산되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감옥체험에서 만나 친해진 김어준을 기본으로 놓고 이사람 저사람 생각을 해봤는데 이를테면 진중권은 데스크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 곤란해 했고(이런 평가는 진중권과 나를 동시에 불쾌하게 만든다), 임지현은 국제 좌파 아카데미즘에 전념하느라 개근이 어려웠다. 다른 아무개는 말이 너무 어려웠고(이런 유형은 대개 무슨 말인지 자신도 모른다) 다른 아무개는 말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김어준과 둘이 시작한 궤도난담은 시작하자마자 나를 곤혹스럽게 했다. 김지하 선생의 좌충우돌을 "앵벌이하는 상이군인"이라 표현한 덕에 나는 한국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었고 잘 나가는 부르주아 시민운동을 비판한답시고 "교수나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좌파는 누가 못하냐" 비아냥거린 덕에 몇 명의 친구를 잃었다. 막역한 후배와 밀실에서 나는 대화가 멀쩡한 시사주간지에 3면이나 생중계되는 궤도난담의 기본 구조는 무던히도 나를 괴롭혔다.

궤도난담으로 나를 안 사람들은 나를 처음 만나면 말하곤 했다. "생각보다 점잖은 분이시군요." 빌어먹을, 내가 왜 매주 한번씩 뺨스를 벗어야 한단 말인가. 임버릇처럼 그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궤도난담에 설정된 한겨레의 사업적 욕망 덕에 이미 가볍게 빠져나가기 어려웠다. 내가 궤도난담에 나름의 의미를 갖게 된 건 시작한 지 반년이 더 지나서였다.

궤도난담이 가진 나름의 쓸모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인텔리보다는 비인텔리에게, 그러니까 중앙보다는 변두리에 있었다. 일년 가야 책 한 권 안 읽는 '진보지식인'인 나와 그 혼한 학생운동 이력조차 전무한 '386 총수' 김어준의 근본 없는 말들이 한국 사회의 지적 주변부 영역에선 적어도 텔레비전 연에 프로그램보다는 쓸모가 있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반성했다. 이른바 한국 지식인들의 자족성을 출장 씬어대면서 그 일부의 격려에 침을 흘려온 나의 짧은 '지식인 이력'에 대해 말이다. 당대의 작고 큰 진실들은 대개 변두리에 있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때: 2000년 9월 5일 ~ 6일 (1박 2일)/곳: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일(02-447-0277, 011-740-5764)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재상정 하는 것, 이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한 거부감 표출, 인권위원회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간의 격돌 예고(8·22)

2. '입장'은 국보법 개폐, '행동'은 어떨지  
경실련 통일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96.2%가 국가보안법이 폐폐되어야 한다는 입장, 북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5%가 공존 및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밝혀, 입장은 전향적으로 변모했으나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미지수, 한편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정할 방침이라고 공식 천명(8·25)

3. 정보통신부와 언론, 사이버 시위에 테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해킹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한 정통부와 언론,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을 반대했던 진보네트워킹센터를 공격자로 지목하여 몰의(8·26) 이에 진보네트워킹센터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당한 의사표현을 메도했다 고 거센 반발(8·28)

4. 감옥에선 아프지 말라  
직장암 진단받은 감호자에 대한 청송감호소의 방치와 낙장치료, 암 정밀 진단 요구가 무시돼 위암 3기 상태에서 수술 받은 사례 등 교정시설의 의료과오 사례가 한겨레신문에 의해 잇따라 보도돼 교정시설의 심각한 의료문제 충격 던져(8·22, 23)

5. 민혁당 관계자 또 구속  
국정원, 민혁당 사건 연루 혐의로 최진수, 박정훈 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 밝혀(8·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험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권보호 사각지대 한숨 덜까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 중소기업체 등 사업주 쪽 반발로 9월 정기국회 처리 시 진통 예상(8·24)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30일(수)

제 168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규철 판사)을 단행하고, 진보넷 웹서버의 접속 기록(로그) 파일을 복사해 가져갔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부(장관 안병엽, 정통부) 홈페이지의 접속불능과 관련된 것이다. <관련기사 본지 8월 29일>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진보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압수·수색은 상당수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수사이자 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영장을 집행한 경찰 관계자는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한 글이 정통부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며 "용의자가 진보넷을 이용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IP 주소가 남아있을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IP 주소'란 TCP/IP(전송 제어 규약/인터넷 통신 규약)로 통신할 경우, 송신원이나 송신처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다.

이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진보넷은 IP 주소를 남겨놓지 않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온라인 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압수·수색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 초기에 경찰은 로그 파일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하려 했으나 진보넷 실무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쌍방의 입회 하에 해당 부분만을 복사해갔다.

진보넷의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간사는 "26일 서비스 장애는 해킹이 아니었음을 정통부도 인정했다"며 "공권력이 통신상의 의사 표현 수단을 무리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넷은 29일 밤 성명을 발표, "압수·수색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넷은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5일에는 학계·국회 의원·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대섭]

소중한 인권의 기록  
<인권하루소식> 합본 14호 발간  
2000년 1월~6월 인권상황 수록  
가격: 1만원 (우송료 별도)  
구입문의: 이창조 (02-741-536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지난 7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공포된 후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 3명은 청와대 정문 앞 도로에서 유족이 요구하는 인사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것과 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국회 임명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최봉규(최우혁 열사의 아버지)씨는 "유족이 위촉한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동의한 사람들"이라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문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내년 9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반대로 위원들의 위촉도 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체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3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결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별 검사보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를 문제삼으며 복수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명문]

# 왜 지금 '민혁당'인가?

##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연행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최진수(경당판장, 37) 씨가 20일 체포되었고, 23일 박정훈(교사, 35), 26일 한용진(경기도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회장, 37), 27일 박종석(민주노동당진주지부선전국장, 37) 씨가 차례로 연행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 씨의 경

우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독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최진수 씨의 경우에는 민혁당 활동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번 연행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영향을 줄 것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주노동당 진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연행사태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반영해 실제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추진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국정원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 새로 나온 책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2000. 8 / 대한변호사협회 / 539쪽

따져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99년 인권상황을 개괄한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제거 ▲반민주약법과 제도의 개선 ▲새로운 인권제도의 확립으로 나누어 고찰한 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는 냉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반인권적이라고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해서는 위상과 권한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향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장악하려는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미덕은 한해동안 표출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 의견서 등 풍부한 자료를 수록한 부록에도 있다.

한편 이 보고서가 나오자 법무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이적인식'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그 자체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인권법안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인권단체들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를 읽지는 않았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이라 밝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책을 읽자고요!" (이광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불법·가혹행위 연기 모락

또한 이번에도 국정원의 불법·가혹행위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최진수 씨의 경우 연행당시 권총으로 위협 당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알몸으로 강제관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용진 씨의 경우도 2회에 걸친 알몸수색 과정에서 성기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공보실 담당자인 김영진 씨는 "대공사범의 경우 항문에 독극물 염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해를 막기 위해 관장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씨는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혁당 사건 수사 당시에도 김영환, 하영옥 씨 등이 폭행 및 약물복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승교 변호사는 "역사적으로나 관행으로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던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국정원 수사권은 방첩활동에 존립근거를 두고있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며 현 남북관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최근 수사과정에서도 2-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행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혁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경환(4년6월), 심재춘(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보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0년 8월 31일(목)  
제 168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류은숙

##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 "내가 사장이라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제남 심사관은 구제 신청인 조사에 참석한 철도노동자 조연호, 김정민 씨에게 "내가 사장이라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당신네가 만든 불법단체를 철도청에서 그냥 놔두면 되겠냐"는 등 심사관으로서 가져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다.

조 씨와 김 씨,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철도노동조합 대의원에 출석했으나, 철도청이 이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징계와 함께 산간오지로 전출시키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김정민 씨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구제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심사관의 역할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경우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선입견 없이 쌍방의 입장을 가감 없이 조사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며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심사관들의 편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설립취지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조제남 심사관에 대한 징계와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조제남 심사관은 본지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으며, 이만호 노동위 위원장은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말을 함부로 해 심사관과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의 핵심을 들었다. 또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주의조치

를 취했으니 이후의 징계는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실상의 무마를 시사했다. (기명문)

###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전략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밀실 추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키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쳐 지난 19일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다.

정통부 수정안의 핵심은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의 등급표시 의무 대상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불법정보'라는 개념을 '범죄행위를 구성·목적·교사하는 행위'로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2개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7개 시민사회단체는 '호박에 줄 한줄 갖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9월 2일 오프라인 네티즌 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로 집중하겠다는 법안의 본질적인 의도는 전면적인 폐기 없이는 바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명문)

### "그대 뒷모습 영원히,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옥 씨 영결식

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일 집회 참석을 위해 전철을 기다리다 망가진 깃발을 손보려 기울인 것때가 고압선에 닿아 전신 60% 화상을 입고 입원, 20여 일의 투병 끝에 숨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총무부장 최진옥. 그를 보낼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30일 오전 9시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 앞을 가득 메웠다. 전날 오후 각지에서 상경, 시신이 안치된 한양대병원 앞에서 밤을 세운 7천여 동지들과 유족들이 공단 앞에 도열한 가운데 만장, 영정, 운구가 천천히 들어섰다. 현관 앞에 내린 관 위에는 무수한 만장이 쌓이고 노제가 시작되었다. 생전의 육성이 담긴 투쟁사에 여기저기서 오열이 터진다. 고인이 생전에 그처럼 들어서고 싶었던 공단 건물은 7월 1일 폭력집압 이후 아예 눌러앉은 경찰에 막혀 있다. 살아서 들어갈 수 없던 사무실을 죽어서야 그것도 단 3명의 대표자와 함께 둘러보고 작별을 고한다. 영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광장은 노동자와 깃발의 숲. 고인의 '동지'가 현사를 한다. "우리 그대의 뒷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걸세 그대의 긴 여정에 쓰디쓴 소주 한잔 올리네" (이광길)

# 이달의 인권하루소식 (2000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약체 인권위원회'를 비판해온 민간단체들 강한 거부감 표출. 더구나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법무부 안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이루어진 '기습' 발표에 법무부의 밀어붙이기에 벗어날 수 없었는지 우려하는 요구 고조.

### 2. 네티즌, '통신질서확립법'을 막아라! 정통부, '사이버테러다!'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추진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이를 반대해온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이버 시위가 정통부의 홈페이지 다운(8·26)을 빌미로 '해커·사이버테러' 등 언론에 의한 매도당해. 온라인상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빨간불. 특히 공격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웍스센터는 압수수색까지 당해(8·29). 진보네트웍스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에 대한 반대 의지 불살라.

### 3. 경찰폭력도 성폭력도 비정규직 설움도 가라, 롯데파업 타결

롯데호텔 노조 74일간의 파업 종결(8·21)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등에 합의. 경찰의 진압 후에도 54일이나 파업대오를 유지하여 노동운동사의 새 장을 열어. 그러나 해고자 문제는 과제로 남아

### 4. 광복절 사면, 비리사범엔 웃음꽃, 양심수엔 아쉬움

정부가 8·15 특별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 등 권력형비리 연루자는 물론, 선거사범도 사면·복권에 반면 1백여 명의 미결 양심수와 수백 명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결국 21명의 양심수 석방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 사면·복권에 둘러리.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아직도 많은 양심수가 창살 안에 있으며, 국보법 개폐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 5.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시위'는 그만!

민노총, 전농 등의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빈발에 '집회 신고 제도를 경찰이 집회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 고조. 한편 경찰청의 '집회 주관 단체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 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고' 개탄.

## 인권시평

- 길 떠나는 할아버지들 (이재훈 한겨레 기자, 8·8)
- 압력집단과 인권 (조순제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교수, 8·12)
- 미결수와 수의 (강금실 변호사, 8·22)
- 채도 단상 (김규환 아웃사이더 주간, 8·29)

## 논평

-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권 사면 최대한 (8·5)
- 단병호를 돌아보라 (8·12)
-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8·19)
-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8·26)

## 주요판결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하다 판결: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 이에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진수)는 '우암, 신선대 지부의 결성이 합법이고, 하역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리 (8·9)

## 인터뷰

-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나: "알아서 해결할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체포영장 발부하나?" (8·2)
-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8·10)
-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8·24)

## 인권일지

1. 인권운동사랑방, 롯데호텔 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지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1)
2.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했으나, 소파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일제히 성명을 내고 "애초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 비난(8·2~3)
3.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중단'을 위한 전국 교수 서명운동' 계획 밝혀(8·3)
4. 민노총, 전농, 전국연합 집회 잇따라 금지 통고, 집시법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난 빚발(8·2~5)
5. 153명 지식인,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져(8·7)
6. 경찰의 집회 신고시 각서 강요에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폐지 요구, 충북 지방경찰청 답변서를 통해 '각서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다' 시인(8·8)
7. 호텔롯데 노조 성희롱대책위원회 소속 270명 노조원, 회사 경영진과 상습 성희롱자 12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8·9)
8.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방한, 국보법·국가인권기구 문제 등에 대해 민간단체 의견 청취하고 정부 당국자 면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무부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혀(8·10)
9. 광복절 사면, 김현철 등 비리사범 사면에 21명 양심수를 양념으로 넣어 석방, 1백여명의 미결양심수와 4백여명이 넘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 없어(8·14)
10. 매항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6)
12. 서울시,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8·17)
13. 국방부 기총사격장 사격중지, 농성사격장에는 연습탄만 사용 등 '매항리 종합대책' 발표, 주민대책위 '주민과 협의 없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격장 폐쇄하고 토지와 어장을 돌려달라고 요구(8·18)
14. 국정원, 민혁당 사건 관련으로 최진수(8·20), 박정훈(8·23), 한용진(8·26), 박종석(8·27)씨 등 줄줄이 연행
15. 호텔롯데 노조 잠정합의안 가결, 74일 간의 파업종결, 입사 3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등에 합의(8·21) 호텔롯데 노조원,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8·22)
16. 법무부,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8·22)
1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기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분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26)에 해킹, 사이버테러라는 언론몰이로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온라인 시위 매도, 진보네트웍스센터에 대한 경찰압수수색(8·29)

## 만화사랑방

- 이 땅을 지키는 미국인은 누구인가? (8·4)
- 특별사면, 이번에도 또? (8·11)
- 이산 가족된 농성노동자가족 (8·18)
- 교도소 진료 문제 (8·25)

## 국제기사

-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명의 소년병 존재한다" (8·5)
- 동성애 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8·12)
-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8·12)
-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8·19)

## 인권간행물

-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8·23)
-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 14집) (8·30)

##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토론회

날: 2000년 9월 5일 ~ 6일  
곳: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참가신청: 조영임 (02-447-0277, 011-740-5764)